

전략연구 2022-19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방향 및 정책과제

한상욱 · 김경태 · 임형빈 · 김형철
장하라 · 유예나 · 전병윤 · 오남경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3. 연구 흐름	6
4. 선행 연구 및 계획 검토	8
1) 정책 및 계획관련 연구	8
2) 지역격차 분석 관련 연구	8
3) 경제적 불균형 해소 관련 연구	9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10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13
1. 관련 이론 검토	13
1) 지역발전	13
2) 균형발전	18
2. 관련 정책 동향	24
1) 중앙정부 정책	24
2) 충남 균형발전 정책	36
3. 일본의 지역 창생정책 검토	42
4. 소결 및 시사점	48
제3장 충청남도 남부권 특성 및 전망	51
1. 발전 수준 분석	51
1) 개요	51
2) 주요 내용	52
3) 발전격차 분석	57

2. 지역경제 및 소득	62
1) 지역내 총생산(GRDP)	62
2) 소상공인	66
3. 남부권 주요 계획	74
1) 발전 방향	74
2) 계획 중인 주요사업	83
3) 부문별 사업비	87
4.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88
1) 인구 전망	88
2) 대전시, 세종시 영향권 분석	91
3) 공간구조 전망	102
5. 소결	106

제4장 충청남도 남부권 관련 인식 조사 109

1. 전문가 설문 조사	109
1) 조사 개요	109
2) 조사 결과	110
2. 주민 설문 조사	122
1) 조사 개요	122
2) 주민 설문 조사 결과	122
3. 요약 및 시사점	139

제5장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42

1.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 목표	142
1) 충청남도 남부권의 과제	142
2) 발전 목표 및 전략	147
2. 부문별 정책과제	149
1) 도시·교통 부문	149
2) 산업·경제부문	157
3) 문화·관광부문	170
4) 연계·협력 부문	183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91
1. 연구 요약	191
2. 향후 과제	194
 참 고 문 헌	 195
 〈부록 1〉 지역내 총생산(권역별, 남부권 경제활동별)	 199
〈부록 2〉 시군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추이(2015-2019)	200
〈부록 3〉 충남 산업발전 경로	203
〈부록 4〉 산업 취약성	204
〈부록 5〉 남부권 주요 전략산업(시군 제안)	205
〈부록 6〉 남부권 주요 전략산업(국가계획 반영)	205
〈부록 7〉 주요 산업거점	206
〈부록 8〉 충남 시군별 평균 임금, 지니계수	208
〈부록 9〉 거시적 측면에서의 남부권 영향과 과제(STEEP 분석)	209
〈부록 1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남부권 주요 내용(대전권, 세종권)	211
〈부록 11〉 충청권 공간구조 전망	215
〈부록 12〉 전문가 설문지	218
〈부록 13〉 주민 설문지	226

표 차례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2〉 지역발전이론 비교	14
〈표 3〉 정부·지역 주도별 이론 및 접근방법	24
〈표 4〉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시책	26
〈표 5〉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28
〈표 6〉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별 주요내용	28
〈표 7〉 이명박 정부 충청권 선도산업	29
〈표 8〉 박근혜 정부 행복생활권 구성 기준	31
〈표 9〉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별 목표, 방향	37
〈표 10〉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 유형별 규모 변화	38
〈표 1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 유형별 지구수 현황	38
〈표 12〉 일본 VS 한국 법·추진체계 비교	43
〈표 13〉 일본 지방창생 주요정책 패키지별 목표 및 주요 추진시책	46
〈표 14〉 일반 지방창생 주요 정책 분야 및 정책과제	46
〈표 15〉 일본 지방창생 정책 주요 부처별 공간정책	47
〈표 16〉 충남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표	52
〈표 17〉 남부권 인구수 및 연평균 증감률	53
〈표 18〉 남부권 재정력 지수 증감량 및 증감률	54
〈표 19〉 남부권 소득세할주민세 증감량 및 증감률	55
〈표 20〉 남부권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감량 및 증감률	56
〈표 21〉 남부권 노후주택 비율 및 증감률	57
〈표 22〉 충남균형발전 지표 종합점수 및 증감	58
〈표 23〉 시군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	62
〈표 24〉 남부권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 순위	63
〈표 25〉 남부권 경제활동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	64
〈표 26〉 남부권 당해연도, 기준년도 증감 대비 경제활동	65
〈표 27〉 충남 시군별 소상공인 사업장수 현황	66
〈표 28〉 코로나 19 전후 소상공인 부문 주요 산업별 변화	61

〈표 29〉 1인당 평균소득, 대출 잔액 및 타지역 유입 소비 비중	72
〈표 30〉 역내외 소비액	73
〈표 31〉 시군별 역내외, 역내유입 소비 비중	74
〈표 32〉 시군별 발전방향 변화	76
〈표 33〉 시군별 주요 추진 전략 변화	77
〈표 34〉 시군별 도시·거점개발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계획	83
〈표 35〉 시군별 경제·산업 분야 주요 사업계획	84
〈표 36〉 시군별 관광, 문화예술, 교류·협력 분야 주요 사업계획	86
〈표 37〉 남부권 부문별 사업비	87
〈표 38〉 남부권 인구 전망	88
〈표 39〉 남부권 읍면동별 인구 전망	90
〈표 40〉 대전광역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영향력 분석 결과	93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영향력 분석 결과	89
〈표 42〉 남부권 지역내, 지역간 통근·통학 통행량(2020년 기준)	102
〈표 43〉 남부권 지역내, 지역간 통근·통학 통행량(2040년 기준)	103
〈표 44〉 남부권 지역내, 지역간 통근·통학 통행량 여건변화(2020, 2040)	104
〈표 45〉 현재 대전시 도시화 단계	110
〈표 46〉 향후 공간구조에 따른 도시발달	110
〈표 47〉 자원 및 경제성장위 배분에 따른 인구 영향	111
〈표 48〉 사회경제 발전의 따른 인구 영향	111
〈표 49〉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	112
〈표 50〉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114
〈표 51〉 향후 삶의 여건 변화	115
〈표 52〉 향후 남부권 미래 모습	115
〈표 53〉 지역발전에 대한 우선적 분야	116
〈표 54〉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116
〈표 55〉 지역산업 육성 역점 사업	117
〈표 56〉 소득 증대 측면 시급 과제	117
〈표 57〉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118
〈표 58〉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118
〈표 59〉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119

〈표 60〉 관광·휴양 측면 중요 과제	119
〈표 61〉 인근 시·군과 협력 분야	121
〈표 62〉 거주방향	123
〈표 63〉 이주 희망 지역	123
〈표 64〉 이주 희망 년수	124
〈표 65〉 현재 거주지 만족도	124
〈표 66〉 현재 지역 거주 만족 이유	124
〈표 67〉 현재 지역 거주 불만족 이유	125
〈표 68〉 최근 5년간 발전 수준	125
〈표 69〉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126
〈표 70〉 직장 위치	127
〈표 71〉 생활권	128
〈표 72〉 미래 삶의 여건	129
〈표 73〉 향후 거주지역, 인근 충남지역 미래상	129
〈표 74〉 미래 거주 희망 지역	130
〈표 75〉 미래 거주 희망 형태	130
〈표 76〉 지역발전 우선 분야	130
〈표 77〉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131
〈표 78〉 지역 역점 육성 산업	131
〈표 79〉 산업 관련 중요 과제	132
〈표 80〉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132
〈표 81〉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132
〈표 82〉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역점 대상	133
〈표 83〉 노인 복지 관련 시급 사안	133
〈표 84〉 역점 보건의료 정책	134
〈표 85〉 교육·문화·복지 중요 과제	134
〈표 86〉 문화 및 예술진흥 시급 과제	135
〈표 87〉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	135
〈표 88〉 관광·휴양측면 중요 과제	136
〈표 89〉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우선 지역	136
〈표 90〉 읍·면 시설 통합 조성 방안	137

〈표 91〉 이웃지역 시설 이용 의견	137
〈표 92〉 인근 지역 상호협력	137
〈표 93〉 인근 시·군과 상호협력 분야	138
〈표 94〉 대전시, 세종 주변지역 주요 교통관련 사업	151
〈표 95〉 충남 시군별 특화업종	157
〈표 96〉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첨단업종 현황	158
〈표 97〉 전국 권역별 연구원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 현황	159
〈표 98〉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과 융합기술혁신의 특징	160
〈표 99〉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차별성	162
〈표 100〉 충남 남부권 및 대전,세종 주요 전략산업	163
〈표 101〉 한국형 스마트 온실 추진 단계	168
〈표 102〉 남부권 주요 관광지점	172
〈표 103〉 관광호텔업 등급별 현황	173
〈표 104〉 여행업 현황	173
〈표 105〉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175
〈표 106〉 한국형 DMO의 주요 기능	182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2]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27
[그림 3] 이명박정부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전략	29
[그림 4]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30
[그림 5]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33
[그림 6]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개념도	34
[그림 7]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과제 도출	42
[그림 8] 충남 시군별 지역발전 격차 변화	59
[그림 9] 충남 시군별 종합점수 증감	59
[그림 10] 충남 시군별 발전 수준(인구 분야) 변화	59
[그림 11] 충남 시군별 발전 수준(재정·소득 분야) 변화	60
[그림 12]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고용·산업 분야) 변화	60
[그림 13]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인프라 분야) 변화	60
[그림 14]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생활환경 분야) 변화	61
[그림 15]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교육·문화 분야) 변화	61
[그림 16]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복지 분야) 변화	61
[그림 17] 자영업자 분포현황 및 추이	67
[그림 18] 코로나 19 발병 이후 주요 창업과 휴폐업 업종	68
[그림 19] 시군별 평균영업개월수 및 주요 업종별 평균 영업개월수	69
[그림 20] 코로나 19전·후 소상공인 부문 산업별 변화	70
[그림 21] 대전시, 세종시의 인구 변화	91
[그림 22]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1(충청남도)	94
[그림 23]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2(충청북도)	94
[그림 24]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3(전라북도)	94
[그림 25]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95
[그림 26]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95
[그림 27]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2(전라북도)	96
[그림 28]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98

[그림 29]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2(대전광역시)	99
[그림 30]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99
[그림 31]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4(전라북도)	99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100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2(대전광역시)	100
[그림 34]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101
[그림 35]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4(전라북도)	101
[그림 36]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통근·통학권 텐드로그램(2020년 기준)	105
[그림 37] 충남, 대전, 세종 지역의 통근·통학권 텐드로그램(2040년 기준))	105
[그림 38] 충남 남부권 만족도·중요도 IPA 분석(전문가)	114
[그림 39] 충남 남부권 만족도·중요도 IPA 분석(주민)	126
[그림 40]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스마트 생활권역 구상도	142
[그림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발전축, 교통축 구상(안)	145
[그림 42] 대전시, 세종 주변지역 광역 교통망	151
[그림 43] 주요관광지점 입장객수에 의한 영향권	172
[그림 44] 대구시 ‘잇 히어로’ 모집 포스터	179
[그림 45] 신안의 대표적 식재료와 미식(안)	180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40년 인구 전망시 충남 남부권은 충남 전체 인구의 11.3%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 부양비 대비 활력이 없고, 정주 기피 지역으로 전락 예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이 위치한 충남 북부권은 2040년까지 증가하고, 남부권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소년인구, 생산가능 인구, 출생아수가 연평균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 지수는 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눈 여겨 볼 것은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해야하는 인구 부양비는 2030년에 83%를 넘어 2040년에는 100% 돌파가 예상되고 있으며, 남부권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 52세, 2040년에는 61세로 매우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적 측면을 살펴보면, 충남도내 남부권은 총생산규모가 12.9%로 낮아서 타 권역과의 격차 감소가 요구된다. 권역별로 북부권 56.8%, 서해안권 30.3%, 남부권 12.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남부권은 전반적으로 광업·건설업은 감소하고, 농산어촌지역의 지탱산업인 1차 산업의 감소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남부권은 현재 혁신생태계조성 및 플랫폼 육성을 위한 기관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미래 성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간분포상 북부권, 서해안권에 대비 국가정책, 도정책의 상대적 소외지역으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하여 공공의 지원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부권·서해안권은 국가·충남도 정책의 수혜지역이지만, 남부권은 대전시·세종시의 영향권에 속하지만,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다.

북부권은 경부축, 수도권 연접지역으로서의 수혜를 받은 지역으로 대기업 중심의 생산 중심지역이고, 수도권의 분공장 형태 입지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R&D·설비 투자가 미흡하여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해안권은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라 충남도의 공간구조는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최근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남부권은 대전시·세종시에 연접한 전형적인 농산촌지역이며, 쇠퇴지역·소멸지역에 직면한 상태이다. 대전·세종의 도시권의 확대에 따라서 대전·세종에서 실거주가 이루어져서 역내 소비 진작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역을 지탱하는 산업이 영세업체, 개인사업체 비중이 지배적이어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의 지원이 없이는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과거 충남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시군간 경쟁 심화를 예방하고, 협력적·공생적 발전하기 위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었다. 충남도 최상위계획인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공간구조를 뒷받침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민선자치체를 시행하기에 앞서 민선 초두에 발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시군간, 권역간 심화되고 있는 불균형을 시정하고, 시군간 경쟁을 최소화하며, 협력적·공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을 시론적으로 제시하여 충남도 지휘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¹⁾하였다.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대도시 중심, 산업 중심으로 남부권 농산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구체도는 미흡한 것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림수산업, 전통 제조업은 붕괴 우려되고 도시-농촌간 인당 GDP 불평등도 지속 상승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영향권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남부권과 관련해서는 대전시, 세종시의 영향권 확대에 따라 주변부의 시군간 연계특성이 달라지며, 대전·세종권에 공주, 금산, 논산, 부여, 계룡이 모두 포섭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에는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21.12),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따라 남부권은 주변 대도시인 대전지역의 영향권 범위 내에 있으며, 지역간 연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계획별로 살펴보면 광역생활경제권계획은 “초광역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²⁾

1) 2010년 수립·논의된 발전전략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유효

2) 제2조 3 : 초광역권 정의 / 제2조 5 : 초광역권 산업 정의 / 제4조 2항 17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시 초광역권의 발전 및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의 2 : 초광역발전계획의 수립 / 제10조 1항 2 : 시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발전역량 강화 / 제10조의 2 :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 제11조 초광역권 산업 선정 및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 최근 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남부권과 관련된 기존의 내용이 빈약하여 남부권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남부권은 패러다임상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준비지역이며, 관련 계획에서의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전형적인 농산어촌지역으로서 저발전지역으로서의 특성을 보이는 한편, 충청남도 내부에서도 북부권, 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히 소홀한 지역이기에 남부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충남도내 낙후도가 심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협력적·공생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충남 발전격차 실태 분석하여 발전격차의 정도와 경향성을 검토한다. 이 연구의 1차 목적은 지역내 발전격차를 측정하여 지역내 시군간 격차의 양태와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지역발전의 격차를 견인하는 경제, 제정분야를 분석하여 격차의 실상을 제시한다.

둘째, 충남 남부권의 불균형 특성과 주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정리한다. 지역내 시군간 지역격차 분석으로부터 나타난 지역내 불균형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해결과제를 제시한다.

셋째,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한다. 중앙부처의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시책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남부권 정책방안 제시한다. 외형적 균일한 성장을 지향하는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지역상생발전”의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남부권에 해당하는 공주, 논산, 계룡, 부여, 청양, 금산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황 및 발전여건을 검토한다. 분석 범위에 따라서 대전시, 세종시를 포함한 주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 시간적 범위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충청남도내 지역간 격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하며, 대전, 세종 등의 영향에 대한 관련 자료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현재의 충청남도 남부권의 지역격차 분석,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주민의 인식조사를 기초로 남부권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충청남도 남부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내에서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격차분석을 시행하고, 이러한 격차 결정요인이 도출된 배경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내에서 국내의 관련 정책 흐름을 검토하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검토함으로써 남부권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토한다.

셋째, 남부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건과 한계를 파악하고,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문헌 조사 및 정책동향 조사

균형발전,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연구를 통해 발전요인과 대상영역 설정하고, 충남도에서 활용하는 균형발전 지표를 대상으로 충남도 시군의 발전격차를 분석한다.

지역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국내외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한다. 조사 대상은 관련 선행연구,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지역발전도 및 지역격차분석에 관한 정부문건, 통계청(KOSIS), 국토교통부, 행안부, 균형위, 시도통계연보 등 정부와 지자체의 통계자료,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부, 국책연구원, 시도연구원 등의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2) 공간분석 및 전망

남부권의 공간분석을 위해 중심성과 연계성을 측정하고, 남부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시, 세종시의 도시 영향권을 분석한다.

향후 미래의 공간구조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남부권 미래 인구 전망을 시행하고, 미래 교통망 변화에 따른 대전시·세종시의 영향권을 전망한다.

(3) 전문가 및 주민 설문

본 연구에서는 남부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부문별 정책과제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두 집단간의 인식차를 검토하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적용가능성(IPA) 분석을 시행한다.

3. 연구 흐름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등 전체적인 연구 개요에 대하여 기술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남부권과 관련된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충남 남부권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충남의 남부권이 충남내에서 발전 격차를 검토하고, 저발전지역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단한다. 또한, 향후 남부권이 인구 변화, 대전, 세종시의 영향권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대도시 영향권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충남 남부권에 대해서 전문가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발전격차,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조사를 시행한다.

제5장에서는 충남 남부권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충남 남부권은 저발전지역으로서 대전시, 세종시의 세력권에 포섭되다 보니 기존의 발전지역 추종형의 지역발전전략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을 감안하여 도시지역, 산업경제, 문화관광, 연계협력의 4부문을 대상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4. 선행 연구 및 계획 검토

남부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책·계획 관련 연구, 지역격차 분석 관련 연구, 경제적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 및 계획관련 연구

오용준(2021)외는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장기발전 전략을 지역별, 분야별로 수립하였다. 권역 설정시 계획권역을 4개로 구분하여 유연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존 계획상 금강권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계획권역의 유연화를 적용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는 분야별로 지역이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권역의 경우 계룡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되며, 공주, 부여, 청양지역은 산업발전권역 상 K 바이오산업권, 5대 관광진흥권역 상 백제권, 6대 지역생활권역 으로 구분된다.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은 산업발전권역 상 국방·웰빙산업권, 5대 관광진흥권역상 남부권, 6대 지역생활권역으로 구분된다.

한상욱(2016, 2020)의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충남의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에서 지역 격차 분석과 지역 양극화 실태 분석으로 소득과 삶의 질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격차 분석 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저발전 지역의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형빈(2017)은 대전 지역 근교지역인 금산, 논산, 계룡 지역을 대상으로 대전 지역과 영향권 분석, 공간분석을 진행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향권 분석 결과 대전 지역의 영향권내에 있으며, 인구, 물동량, 통행, 소비구조 측면에서 각 지역이 연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간범위 내 충남 지역간의 연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격차 분석 관련 연구

이희창 외(2006)는 수도권은 수도권 지역의 지역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를 설정하여 경기도 지역발전수준을 분석하였다. 수도권 내의 지역격차 지표 분석을 위하여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발전성, 생산성, 환경,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발전 수준을 비교하였다.

우영진외(2008)는 사회기반시설, 문화, 교육, 복지 지방재정 지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격차를 도출하고 불균형의 주요 요인을 지니계수 분해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과 생활환경 분야의 지역격차는 다른 지표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분야에서 권역별 격차로 나타나는 불균형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선기외(2014)는 지역발전 정책을 위한 삶의 질 분야를 6개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생활권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삶의 질 분석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으며, 생활권으로 구성하여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삶의 질 격차는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경제적 불균형 해소 관련 연구

경제적 불균형 해소의 대안적 지역발전론인 내생적 발전론은 기존 외생적 발전방안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 연구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내발적 발전론은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성과의 지역 내 순환을 지향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경제부문의 발전을 토대로 지역 내 산업연관의 형성과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을 중시하고 있다.(신동호, 2012 재인용³⁾)

신동호외(2021)는 지역간 불균형 원인을 소득과 자본의 역외유출로 인식하여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의 소득과 자본의 역외유출 규모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역 자금의 지역내 재투자과 지역내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파용자보수의 유출비율은 2019년 69.2%, 역외 소비비율은 57.1%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재투자기금과 평가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 상품권 등을 제안하였다.

3) 신동호(2021),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충남연구원.

비슷한 연구로서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산정한 이인로(2021)의 연구에서 충남지역의 소득 역외유출 규모를 약 25조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역외 유출의 원인을 분공장 형태의 높은 입지 비율과 직주불일치로 인하여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가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소득의 지역 정착을 위한 본사 기능 유치, 정주여건 개선으로 직주 근접, 지역 소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절한 상업시설과 산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제안하였다.(허문구, 2015; 한국은행, 2013; 김시백, 2019 등)

4) 기존 연구와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정책·계획, 지역 격차와 관련된 연구, 경제적 불균형 측면으로 구분된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는 연구 범위 지역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사업을 구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상 계획권역에 부합한 남부권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 하는 방안 모색 필요하다.

균형발전측면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과 더불어 시군단위를 벗어난 광역적 고려요인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부족하므로, 인근 대도시인 대전지역을 배후시장으로 활용하는 지역별 발전 방안 모색 필요하다.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는 거시적·광역적 측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실행을 위해서 작동하는 사업단위가 실제 방향성을 갖고서 운영되는지에 대한 검토·진단이 요구된다.

지역격차 분석 연구들은 주로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설정과 지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지역의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지표를 구성하는 분야별 세부 지표 중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분야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수준이 높은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삶의 질 측면, 정성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 경제적 지표에 의한 격차 분석과 더불어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발굴적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적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는 지역 자원과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으로 지역 내 선순환 방안과 지역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지역 역외유출이 높은 충남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과 자본 투자가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주변 농어촌지역이 갖는 한계 극복·유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정책 및 계획	· 과제명: 제4차 충청남도 종합 계획(2021-2040) · 연구자: 오용준 외(2020) · 연구목적: 충청남도 장기 발전 전략 수립	· 문헌연구 · 지역 분석 · 설문 조사 등	· 충남 발전의 비전과 전략 · 전략별 추진 계획 · 시군별 발전방향
		· 과제명: 2021-2030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 연구자: 한상욱 외(2020) · 연구목적: 불균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발전 지역의 종합적 대책 마련	· 지역 현황 조사(정책, 사업) · 불균형, 양극화 실태 분석	· 지역 현황 조사(정책, 사업) · 소득, 삶의 질 지역별 불균형 실태 분석 · 저발전 지역의 계획과제 평가 및 도출
		· 과제명: 대도시 근교 지역인 충남 남동권역 발전 전략: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중심으로 · 연구자: 임형빈 외(2017) · 연구목적: 충남 남동권의 발전 전략	· 문헌연구 · 지역 분석	· 대도시와 주변지역 간 구조분석 · 논산, 계룡, 금산 지역 발전 전략과 과제 도출
	지역 격차 분석	· 과제명: 2014 지역발전지수를 통해서 본 농어촌 삶의 질 실태 · 연구자: 농촌경제연구원(2014) · 연구목적: 시군별 지역실태 파악을 위한 발전 수준 지표화	· 문헌연구 · 지역 분석	·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 활력 지수로 구분된 지역 수준 지표화
		· 과제명: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 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 연구자: 이희창 외(2006) · 연구목적: 수도권 지역의 지역 격차 분석 지표 설정과 발전분야 제시	· 지역 분석 · 정책 연구	· 접근성, 생활편의성, 경제발전성, 생산성, 환경, 지역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발전 수준을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권역별 사회지표의 지역격차 분석· 연구자: 우영진 외(2008)· 연구목적: 권역별 불균형 요인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전된 지표를 권역에 적용하여 권역별 격차 도출 후 불균형 요인을 지니계수 분해법으로 분석
	경제적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연구자: 신동호외(2021)· 연구목적: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선순환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경제 구조 분석· 전문가 의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역외유출 구조 파악하여 지역내에서 소득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연구자: 이인로(2021)· 연구목적: 충남지역 소득과 소비구조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경제 구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지역의 소득과 소비의 역외유출 규모와 원인 파악 (분공장, 직주불일치)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충남 남부권역 발전방안: 충청남도 내의 위상과 대도시 근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목적: 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별 권역에 대응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남부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 검토· 남부권의 입지적 공간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부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의 입지 및 공간 분석·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유형별 계획권역에 부합한 발전 전략 제시

제2장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

1. 관련 이론 검토

1) 지역발전

신지역발전의 이론은 공간조직이론(spatial organization theories)과 지역발전이론(regional development)으로 구분된다.(김용웅 외, 2009) 공간조직이론은 토지이용, 정주체계 등 공간구조의 형성과 제조업 등 경제활동의 공간적인 조직화를 설명하는 이론의 총칭으로 농업토지이용, 산업입지, 정주체계, 도시체계이론과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형성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배귀희, 2009⁴⁾)

지역발전이론은 국가발전에서 발전이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과 형태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국가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의 총칭으로 지역의 자율균형 이론과 지역불균형 이론으로 구분(Holland, 1976)하기도 하고, 고전공간균형이론과 성장거점모형, 역사이론, 지역간 소득격차이론, 막스주의적 불균등발전이론 등으로 구분(Prestwich and Taylor, 1990)하기도 한다.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논의되어온 도시한계론(City Limit),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도시레짐이론(Elkin과 Stone)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한상욱, 2016⁵⁾)

(1) 지역발전 결정 요인

발전은 발전 잠재력의 장소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입지(location)와 자원(resources)등의 자연조건, 인구조건, 경제구조 등에 의한 발전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김선기, 2006)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4) 배귀희(2009),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5) 한상욱(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것은 분극화 발전(polarized development)으로,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사회간접자본, 시장접근성, 집적경제, 불균형 성장전략 등을 지역발전격차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역발전의 관건을 접근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과거의 SOC사업에 집중투자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입지적 측면의 상대적 우위(relative advantages of location)가 중요했다.

〈표 2〉 지역발전이론 비교

구분	주요내용	지방정부
도시한계론 (City Lim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경제의 성장에 따라 고용증대, 세수확대, 서비스 향상에 비해 그렇지 못한 도시들은 재정적·정치적 어려움에 봉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유층 외에 저소득 빈민층을 유인함으로써, 생산적인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는 정책은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 이유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때문 지방의 지방세 감면정책이 자본·노동의 입지결정,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성장기구론 (Growth Mach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경제발전은 기업적·전문가적 이익을 보유한 엘리트 집단과 지방정부간의 연합에 의해 주도되고, 부동산의 가치와 지대를 증가시키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장을 위해 소요되는 투자환경 조성 경비를 지방정부가 부담 선출직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쳐 지역 주민과의 갈등 야기
반성장연합 (antigrowth coal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기구론을 주장하는 성장연합에 대응하여 반성장연합이 출현 지역개발의 편익보다는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지역보전의 근린운동(neighborhood movement) 추진 	
도시레짐이론 (Elkin, St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적 역동성을 주장하며, 자본주의의 경제흐름과 도시의 구조적 변화·권력 관계에 대한 구조주의적 시각. 즉,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협력에 초점 전세계의 경제망이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자본 유치 경쟁에 돌입하면서, 시·공간의 비효율을 제거토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는 자본유치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구하고, 지방의 건조환경을 자본에 유연한 체제로 변화토록 (재)개발정책을 추진 지역공동체조직, 시민사회, NPO의 역할 설명에 한계

자료 : 행정자치부(2009),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한상욱(201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재정리

주요 이론은 불균형성장이론, 균형성장이론, 성장거점이론, 중심-주변부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불균형성장이론(Hirschman)은 경제발전 초기에 특정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집중개발함으로써 발전의 에너지를 축적함과 동시, 그 효과를 낙후지역에 전파시켜 전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전통적 개발이론이다. 균형성장이론(Nurkse)은 국가의 경제성장은 각 산업부문이 균형적으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 국가발전을 위하여 부문간 보완적 투자를 통하여 동시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총칭하며 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된 투자배분 강조한다. 성장거점이론(Perroux)은 불균형성장이론의 하나로서 성장거점은 혁신의 가능성이 높고 성장을 유도하는 지점(예, 도시)은 발전효과를 낙후된 주변지역에 파급시킴으로써 낙후지역의 발전을 유도한다. 중심-주변부 이론(Myrdal, Friedmann)은 선진 지역과 후진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의 지속현상을 설명한 이론을 총칭으로 발전은 공간상에 동질적이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분극적으로 일어난다.

중심지 이론(Christaller)은 중심지의 입지, 규모, 특성 및 배치에 관한 이론, 서비스 중심지의 지역구조를 분석, service center의 계층구조를 갖는다는 이론이다.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Theory, Burgess)은 도시생태학적 관점, 도시의 확장과 분화: 지속하는 침입(invasion)과 승계 (succession) 과정,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며 5 개 지대로 분화하고, 선형(扇形)이론(Sector Theory, Hoyt)은 동심원 이론의 수정, 보완, 도로망을 따라서 새로운 선형지대가 확대, 주거지는 도심에의 접근성과 관련한 임대료에 의해 공간 분화한다는 이론이다. 다핵심이론(Multiple Nuclei Theory, Harris, Ullman)은 도시생태학적 관점,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수 개의 활동중심지인 핵의 집합,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핵의 흡수, 신생 과정에서 전문화된 중심지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삶의 질이라는 용어는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엄밀한 정의나 개념이 없다.(강선경 2008; 한준 외, 2014). 분석적 차원에서도 삶의 질 개념 자체는 조작적 정의가 어려우며 통일된 지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종진, 2016⁶⁾) 삶의 질을 접근하는 방식은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방법에 의해

6) 이종진(2016), 인문학 교육을 수강한 사회적 약자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

이루어진다. 객관적 방법은 균형발전 지표에서 활용되고 있는 소득, 교육, 지위, 건강 등의 사회 환경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으며, 주관적 방법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른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에 해당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경제적 요소, 사회심리적 요소, 제도적 요소, 환경적 요소로, 사회적 관계요소로 크게 나눌수 있다. 경제적 요소는 기본적인 소득 수준, 정주를 위한 생활수준, 여가 등 소득에 기인한 만족감 요소가 해당된다. 사회심리적 요소는 개인의 성격,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이 해당된다. 제도적 요소는 개인의 건강, 연령대별 만족도, 젠더와 관련된 성적 요소들이 해당된다. 환경적 요소는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재난, 치안 등이 해당된다. 사회관계적 요소는 주요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를 말하며, 친구, 결혼, 가족, 이웃 등 삶을 영위하면서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삶의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연령대별로 결정되는 시기와 관계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시기별로 행복과의 연계성을 연구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노력들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삶의 질에서 공동체, 환경지속성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남부권에 적용가능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권역간·시군(읍면동)간 격차 심화한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도 권역간 또는 시군구간·읍면동 격차가 심화하고, 최근 들어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점차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역내 특정 거점도시로의 집중 강화하는 경향이다.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에 인구의 80%가 집중되고, 도시 집중성이 더욱 강화되어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내 특정 거점도시로 인구 및 경제사회활동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 거점도시지역과 여타 지역으로 인구집중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지역내 격차를 심화한다.

셋째, 인구이동의 안정화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적역량의 중요성 증대이다. 도시성장에 따라서 급속한 인구이동, 도시화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인구의 이동성이 둔화되었다⁷⁾.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7) 전국적으로 2000년 이후 인구 이동률은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2) 지역발전격차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률과 경제수준의 공간적 차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적 개념 외에 삶의 질과 관련된 인간 기본 수요에 대한 광의적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1990년대 이후 출현하였다. 최근에는 지역격차를 지역간 소득격차로 수용·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성장 = 소득격차라는 등식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삶의 질 측면까지 확장되었으며, 대표적인 개념이 인간의 행복도이다.

지역발전격차의 주요 영역은 지역경제력, 삶의 질, 인적자원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역경제력은 전통적인 대표 영역으로서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지역경제력으로 인식한다. 미국과 EU 국가의 낙후지역 선정지표도 대부분 소득, 고용, 산업구조 등 경제 적 지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중요 지표로는 소득수준, 산업구조, 고용, 재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삶의 질 영역은 지역경제력의 2차적 파급효과 영역으로서 삶의 질(QOL)은 지역경제력에 따른 2차적 파급효과로서 주민의 총체적인 복리(welfare)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이다.(Carley, 1981) 삶의 질 관련 지표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생활환경, 의료, 안전, 교육, 인프라, 문화 등의 부문의 변수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생활SOC정책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인적자원 활력(Vitality) 영역은 동태적 측면의 잠재력으로 작용하며 최근 부상하는 영역이다. 지역내 인력의 인구학적 역량과 잠재력을 말하며, 지역경제의 노동투입과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인적자원은 이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아서 동태적 측면에서 지역의 현재 여건과 더불어 장래 지역발전의 변화를 전망하는 잠재력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적자원 활력 지표로는 인구변화, 인구구조, 주민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의 집적도 등이다.

2) 균형발전

(1) 국가균형발전

15-16세기 전세계적인 교역 증대와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 이후, 봉건체제가 붕괴되고, 지역공동체가 소멸위기에 이른다.(한상욱, 2016) 산업혁명 이후에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농촌사회가 붕괴되고, 그 속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며, 18세기말부터 도시에 비해 농촌이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율역량 약화에 대한 반발로 지역주의 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른다.(한상욱, 2016) 이에 대한 반론으로 유럽·미국 등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지역공동체의 회복 운동이 출현하였다.(한상욱, 2016)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농촌과 도시간 갈등, 대도시 병리적 현상의 제거, 지역 정체성과 문화 복원, 자율적인 지방생활의 재창조 운동 전개 등 지역정책도입 이후 지역격차 해소와 저발전지역의 성장이 지역정책 화두이자 핵심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한상욱 외, 2011)

산업화 및 경제성장 수단으로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진다. 초기단계의 지역발전 정책은 산업 및 경제발전에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달성이 목표였었고, 이후 지역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자원부존지대를 선정·개발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한상욱, 2016) 따라서, 1960-70년대 추진된 정책이 산업 성장 정책 등이며, 이는 투자 효율성과 산업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경인특정 지역, 울산특정지역, 태백산, 영산강특정지역개발 등이다. 이러한 정책은 투자 효율성에 기반하기에 지역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도시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산업화 작용의 치유수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대두된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 알수 있듯이 과거에 추진하였던 지역개발사업이 도시화·산업화로 귀결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에 방점이 찍힌다. 일례로, 도시지역 활성화, 도시 외연적 확대에 따른 주변 농촌 및 산업지역의 쇠퇴화, 대도시 과밀 문제 해결 등으로 도시화·산업화의 중심과 주변과의 관계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도시화·산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타난 처방이 평균을 고려한 중간지역(intermediate areas) 수준 조성으로 귀결되었다. 그 정책적 방안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도시는 대도시 집중을 완화·해소하기 위해서 분배형 전략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업 이전에 대한 지원, 대도시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탈산업화, 지식정보사회의 전개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지게 된다.(한상욱, 2016)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세계화를 유인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추진하였던 국가주도 성장에 대한 한계 봉착과 더불어 지방의 역할이 부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글로벌리즘이라는 세방화가 나타나게 된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정책의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화·지방자치 등의 지방의 역할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다.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 발전 잠재력 등이 새로운 발전의 기회적·잠재적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신 지역정책(new regional policy)이 등장하게 된다.(한상욱, 2016)

신 지역정책은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추구한 지역 간 균등발전 추구를 탈피하여, 지역내의 고유 자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특성적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현재에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2) 지역균형 발전

지역균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역간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질이 일정 수준 내에서 균등성(equality) 또는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사회적 변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과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한상욱, 2016).

총론적으로는 지역균형이 지역간 균등성보다는 개성적인 잠재력과 경쟁력 강화를, 외부적 자원과 총량적 성장보다는 내부적 발전역량의 강화를,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고 있다.(김용웅, 2005).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은 ‘모든 지역의 발전수준을 균등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지역의 고유의 잠재력과 내부적 발전역량을 키워 개성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기회와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경룡 외, 2004).

외생적 발전에 의한 통합적 균형의 한계로 나타난 전략이 통합적 균형발전은 최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균형발전의 개념은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성경룡 외, 2005)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은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국적인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과거와 같은 불균형 발전전략 하에서 저발전지역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상태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며, 현재의 저발전지역은 기존 경제발전 모델의 시각에서는 희생지역이라 인식이 지배적이다(한상욱, 2016). 이러한 통합적 균형발전 전략은 저발전 지역에 일종의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방법적인 면에서 가치의 이전, 결과의 균등을 추구한다.(한상욱, 2016)

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일면 낙수효과에 의한 정책은 실증되지 않았고,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는 이론은 실제와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한계에 봉착한다.

이론적으로는 도시의 노동·자본이 농촌으로 이전하고, 중심도시·성장부문과 연계한 농촌 주변성(marginality)을 극복하며, 산업부문의 농촌지역, 저발전지역으로 확대되는 누적효과(trickle-down)를 기대하는 것이다.(한상욱, 2016)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과거의 정책에서는 산업적으로 저발전지역이 갖는 해결 과제가 교통이나 산업단지 등 하부기반시설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도로·교통에 대한 투자, 산업단지 조성 등 주로 물리적 투자에 치중한 바 있다(한상욱, 2016). 그러나, 최근까지의 이러한 사회적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시설 중심의 물리적 투입은 산업적인 저발전지역에도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산업 낙후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박경·강현수, 1993).

시대적인 기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대신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들이거나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거나 큰 행사를 유치하는 식의 손쉬운 외부의존적 발전을 추구해왔다.(성경룡, 2007).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내의 가치 창출·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중앙정부·기업대상 유치의 양자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의 자생력

배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조 존재한다. 한편, 지자체의 현실은 산업단지와 같은 산업 기반 투자를 하고, 기업 유치 실적이 미흡·실패한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체는 보편적으로 관광 시설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공장, 기업을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산업은 농촌성에 위대한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서 사회적 과제를 낳고 있으며, 유치한 업종이 지자체내 산업과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선순환 체계를 갖지 못하여 자본의 외부 유출이 심화되는 현상이 계속 확대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충남 전체, 북부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의 종속적 현상을 넘어서 의사결정의 종속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유치는 산업단지 입주하는 계획적 입지보다 무계획적 입지로 인하여 지역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하여 자본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기업, 재정 누수로 인한 위기를 맞게되어 더욱더 과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동적 균형을 위한 내발적 발전전략의 추진이 나타난다.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은 1970년대 중반 이후 UN이 개발도상국의 대안적 개발을 모색하면서 태동하였으며, 단순한 기술적 처방전이 아니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어 지역 격차의 시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서구적 근대화·공업화의 획일적 개발 논리에 대항하여, 주민참가와 지역자원 활용을 축으로 토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상으로서 등장하였다(이미숙, 2003). 이런 점에서 내발적 발전론은 인간적 발전론, 복지지향적 발전론의 이념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박경, 2008).

OECD(1992) 및 Giachino Garofoli ed.(1992)는 내발적 발전의 성공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지역자원의 활용, ② 산업 다변화, ③ 토착기업가(entrepreneurship) 육성, ④ 지역내 주체간의 파트너십, ⑤ 사회경제적 변환능력(외부도전에 대한 응전)과 혁신능력, ⑥ 사회적 학습의 증진, ⑦ 지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외부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제도 및 기구의 발달을 들고 있다(박경, 2008).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내 산업연관에 의한 지역내 경제 순환을 추구하는 것이다.(한상욱, 2011) 지역내 경영 주체의 네트워크화는 지역내 산업 연관을 제구축하여 지역내 경제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지역내 재투자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요체이다.(岡田知弘, 2005, 박경, 2008)

역동적 균형발전은 지역에서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가치창출이 이루어지는 균형발전과정이다.(한상욱, 2012)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면서도 지역혁신역량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차등을 인정하고, 그 결과의 차등을 역동성 발휘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동적 균형발전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 의해 새로운 지역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통합적 균형개념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한상욱, 2011)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선진국에서는 내발적 역량과 외부적 지원을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저발전지역 활성화 전략은 지역의 내발적 역량과 외부적 지원을 적절히 조화시켜 산업, 관광, 문화, 환경, 생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잠재력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한상욱, 2016) 외부지원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과 유지를 위한 생산적 투자,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투자, 지역경제활동의 다변화 등에 사용된다.(강현수, 2007)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 잠재력을 지닌 개별 단위의 자원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규모성을 갖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보통 저발전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의 방식인 산업 유치를 위한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부가가치 창출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 차별화 발전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화 발전을 위한 자원, 매개물, 도구 역할을 하는 지역내의 유무형의 자원(regional asset)의 발굴, 개발, 부가가치화를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 지역만에만 존재하는 유일성을 갖으며, 그곳에 가야지만 보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지 대체성에 기반한 경쟁력이 부가가치 창출이 쉽고, 특화산업 육성이나 제품 개발, 관광 등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김현호, 2007).

일반적으로 저발전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농산어촌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피해 의식,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수동적, 의존적 발전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발전지역에서 나타나는 단편화·파편화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관련 산업간의 융·복합(inter-sectoral convergence) 함으로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관건이다. 저발전지역의 지역내 산업은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인 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향토자원 개발은 특정한 부문에 한정된다는 한계와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파급효과가 주변 및 지역으로 파급, 확산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한상욱, 2016). 따라서 지역내의 향토자원을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그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데,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 지역내의 지탱산업 부문간의 융·복합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고립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저발전지역(농어촌지역)은 지역내의 폐쇄적인 활성화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흡수하고 대응하며, 활용할 수 있는 외부와의 상생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에서는 활용할 외부적 요인이 없다고 말하지만, 최근 베이비부머세대의 귀농·귀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도시민·청년 유치를 위한 정책이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도농교류, 청년유치를 단순하기 정주민구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농촌 두 장소의 거주(two place living)의 증가, 농촌체류 및 반거주의 증가 등 도시민의 생활 양식,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한다. 이것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생활인구 전략이다.

내생적 발전 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공재원 및 사업적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지역내 선순환되어야 하고, 지역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과소한 지역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지역간 연계가 필수라는 점이다.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야하는데, 재원·자원의 소규모성, 활용가치가 높은 자원의 소프트웨어적 육성 미흡, 지역과 지역, 주체와 주체간의 연결 단절, 지역내 인적자원·공동체의 정치적 성향과 폐쇄성, 외부 주체, 지역간 연결에 대한

배타적 성향, 통합 추진체로서의 민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미완결성·지속성 등은 해결 과제로 남는다.

〈표 3〉 정부·지역 주도별 이론 및 접근방법

구분	정부주도	지역주도	정부주도	지역주도
지역간 발전격차에 대한 이론	균형성장이론	불균형성장 이론	성장거점 이론	산업클러스터 이론과 세계생산 네트워크 이론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하향적 지역발전전략 중앙정부, 관료, 전문가 집단 주도	상향적 지역발전전략 -지역이 지닌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외생적발전전략 하향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외부의 자극과 잠재력에 의존	내생적발전 전략 상향적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지역내부에서 찾는 전략

2. 관련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시설, 사람의 지방이전, 특화발전을 통한 기능분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중점을 둔 분배형 균등화(equalization)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의 과밀 문제, 인접지역의 과소문제 해결을 위한 격차 해소에서 출발하였다. 정책 집행 방식은 중앙집권화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에 의한 불균등 발전 방식을 취하였다. 총량적 경제성장에 국한됨에 따른 경제성장의 공간적 수용 정책 시행이다. 특정지역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방식 추구 → 종합적, 전체적인 정책 미흡 → 하부구조, 편의시설 등 재화와 용역을 공급지향적 개발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한상욱, 2016, 재정리).

최근에는 국토정책상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인 개념 확대되고 있다. 국토계획의 목표는 경제성장에서 균형발전, 생태환경 보전, 국토의 질서있는 발전, 국토경쟁력 강화로 변화

하였고, 전략은 거점 전략 → 광역권 전략 → 국토축 전략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지역별 산업 특성화, 공공기관 지방 분산, 상생 균형국토, 지역간 연계발전으로 변화하였다. (한상욱, 2016, 재정리).

추진방법은 지자체 단위의 칸막이 재정 투자로 인한 효율성에 한계를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간정책이 없었으며, 박근혜정부는 대도시권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행복 생활권 제시하였고, 이명박정부는 광역경제권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통합과 협력을 공간단위로 설정하여 의사결정주체에 실패하였다.

주로 추진한 사업은 하드웨어 시혜성 지원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이명박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 혁신도시 2.0, 예타 면제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었다. 시혜성 사업의 추진으로 중앙의존성 심화, 대학의 자율성 제약, 지역특화산업 육성 부족, 중앙부처별 분산된 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맞고 있다.

(1)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과거 도시화, 산업화의 압축적 성장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이 권력과 국가 기능이 규모화·비대화됨과는 상반되게 지방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일극집중의 폐해를 해소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 (한표환, 2004; 강현수, 2005)한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 비전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로 설정하였고, 자립형 지방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립형 지방화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해 '권역간 균형'을 확보하는 통합적 균형과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말한다(한상욱, 2016).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이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매우 유사한데, 과거의 총량적 성장에서 균형적 성장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규제강화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으로, 물리적 인프라 확충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 정책으로, 단편적 분산적 지역정책 추진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하였다.(변창흠,2011⁸⁾)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은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로 제시하였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코자 하였다. 지역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 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권역내 효율 실현하고,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을 통한 권역간 균형 확보를 제시하였다.(원광희, 2013⁹⁾)

〈표 4〉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핵심 시책

핵심 시책		주요 내용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특성화 발전 추진	지역혁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협력촉진,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개발 • 기술 및 기업지원기관, 혁신인프라 확충 및 교류협력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의 수립
	지역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혹은 2 이상 시·도 단위로 선정
	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체계를 접합시킨 산업클러스터 형성 • 지방우수인재의 발굴·육성 및 정착 프로그램 개발 • 지방대학 산학연협력 내실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지방이전 대학 및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신설
저발전지역 개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력, 인구감소를 등을 감안하여 신활력지역 선정 • 도로 등 생활환경인프라 구축 및 문화관광 등 소득창출기반 확충
신수도권 발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안정화와 경쟁력 증진 방안 추진 • 신수도권 발전방안 발표 •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자료 : 한국토지공사(2003)

(2)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지역특화발전을 지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출범과 함께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발전시키는 신지역발전정책을 추진 (변창흠, 2012)하였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행정구역별 산술적 균형을 추구,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과 프로젝트, 투자의 지역적 안배 등에 대한 지역주의 양산, 세계화에 대응한 비전 미제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참여정부

8) 변창흠(2011),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평가와 과제, 사회디자인연구소.

9) 원광희(201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비판과 재검토 입장을 취하였는 바,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을 부정, 수정, 폐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내용이다.(한상욱, 2016)

신지역발전정책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는 상대적, 역동적인 균형,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분권적 균형발전, 규모의 경제와 광역화·네트워크화를 통한 협력과 경쟁시스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적, 생산적, 창조적 지역주의, 열린 국토를 지향하였다.(민주정책연구원, 2012)¹⁰⁾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권경제권 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를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동반·상생 발전, 기존 시책의 발전·보완, 추진전략은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선, 면, 점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선적 측면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개발권으로 4 + a벨트, 면적 측면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으로 5+2 광역경제권, 점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기본

10) 민주정책연구원(2012), 이명박 정부 4년 평가와 과제, 싱크탱크네트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수요 충족을 위해 163개 시군에 대해 기초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

〈표 5〉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차 원	공간구조	주요목적	공간단위	계획체계
초광역개발권	선(線)적	국가경쟁력 강화	4 + a벨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광역경제권	면(面)적	지역경쟁력 강화	5+2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점(點)적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163시군	기초생활권 계획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초광역 전략산업벨트 구축 및 연계인프라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글로벌 국토성장기반 구축을 구상하였으며, 권역별 역사·문화적 동질성으로 지역간 협력이 용이한 5+2 광역경제권 설정하였다.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을 망라, 종합적·입체적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한상욱, 2016)

〈표 6〉 이명박 정부 5+2 광역경제권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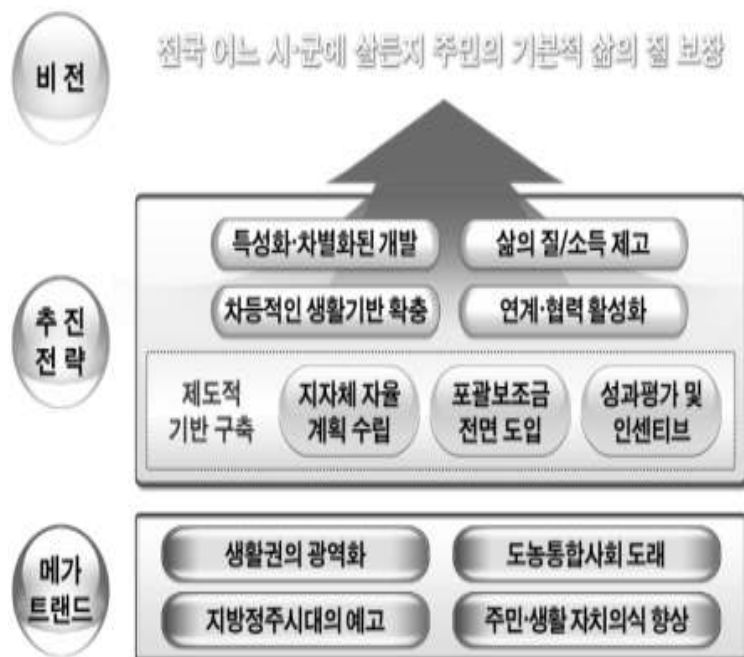
구분	비전	선도사업
수도권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New IT, 의약 바이오
호남권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대경권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그린에너지, IT융복합
강원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의료융합, 의료 관광
제주권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 자유도시	물산업, 관광레저

자료 : 균형발전위원회(2008)

〈표 7〉 이명박 정부 충청권 선도산업

선도산업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의약 바이오	기업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및 지원 신약제품화 지원 등
	첨단 신약 및 의료소재 실용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인허가를 목표로 하는 의약품 개발 첨단 의약 바이오 소재 실용화 등
뉴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말기용 디스플레이 초소형 정보저장 부품 등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리콘 태양전지 셀/모듈 및 제조장비 에너지 절감형 반도체

충남 남부권과 관련성이 높은 기초생활권은 어느 시·군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하는 한편, 낙후된 농·산·어촌을 레저·휴양 거점화를 추진하고, 지역연고자원의 2·3차산업이 융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광역권과 기초생활권을 연결하는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도농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였다.(한상욱, 2016)



[그림 3] 이명박정부 기초생활권 비전과 추진전략

(3)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에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과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과거 정부가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의 괴리,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에 치우쳐 오늘의 지역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노정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접근하였다. 지역정책 목적은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 체감 정책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다.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상호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역발전 모델을 표방하였다.(지역발전위원회, 2014) 또한,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접근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지역별 입지조건 및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주민의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 어느 곳에서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융성·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 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지속 추진으로 수립하였다.(한상욱, 2016)



[그림 4]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비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내용은 한상욱, 2016을 재정리)

첫째, 주민이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이는 주민 실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추어 지역정책을 추진을 의미한다.

둘째, 좋은 일자리와 사회 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사회·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이다.

셋째,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은 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의미한다.

지역발전정책의 첫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도시, 농어촌중심지(읍면),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된 권역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교통, 통신 발달 등에 따라 단순한 시군구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서비스 수요가 일반화되고 지역 간 과당경쟁·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유기적인 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주민 복리증진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에 의해서 구상되었다.

〈표 8〉 박근혜 정부 행복생활권 구성 기준

유형별	인구규모	연계성 기준
농어촌 생활권	10만명 전후의 시·군	- (접근성) 통근율·역통근율·통근량 비중, 이동시간, 통학권,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권
도농연계 생활권	중심도시 10~50만명 전후	- (기능적 연계) 산업, 관광, 물류, 로컬푸드 등의 전후방 연계성 - (지리적 연계) 연접성, 수계·산 등 자원 공유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 50만명 이상	- (기타) 역사·문화적 동질성, 주민들이 인식·희망하는 협력적 생활권 등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패키지 지원하였는 데, 주민·지자체 수요를 수렴하여, 주민 행복과 희망 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 부처간 협업 사업에 대해 지역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토록하여 지역 맞춤형 지우너을 하였고, 장소 중심적 추진이 효과적인 시책은 지역위가 개별 부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등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하였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 중앙부처와 역할분담 (Two-Track) 강화, 지역공동체 및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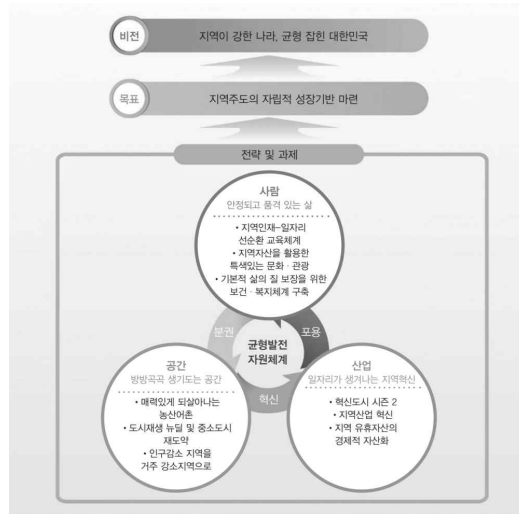
(4)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정책 무게중심을 중앙집권에서 지역주도로 전환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진승호, 2021, 이하 요약 정리)¹¹⁾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주도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것이며, 사람 · 공간 · 산업을 3대 핵심축으로 삼아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3대 전략으로 수립하였고, 전략별로 각 3개씩 총 9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민 모두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구현을 위해 지역인재 · 일자리의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 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 · 복지체계 구축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둘째, 전국 방방곡곡을 생기도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농산어촌을 매력적으로 되살리고,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의 재도약, 인구감소 지역을 거주 강소지역으로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셋째,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세 번째 전략으로 삼아 혁신도시 시즌 2, 지역산업 3대(산업 · 거점 · 기반) 혁신,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를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등하였다.

11) 진승호(2021),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통권471호, 국토연구원,



[그림 5]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균형뉴딜 추진의 효과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일자리 측면의 성과 창출 미흡하였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중심축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과제 발굴이 중요하다. 광역 단위의 산업·경제권 육성, 기초생활권 단위의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 뉴딜 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된다면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균형 뉴딜은 지자체와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주축이 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각 지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산업들을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대안 및 정책적 일관성 미확보되었다.

둘째,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화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경쟁의 단위로서 국가 또는 개별 도시보다는 일정 규모를 갖춘 권역 또는 메가시티가 주목되었다.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별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은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이다.

셋째,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지속성, 확대 지속이다. 그간 혁신도시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도 얻을 수 있었지만,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 거점화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정주민족도도 아직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등 기업입주 유도책을 강구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상생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다. 향후 신설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입지하도록 제도를 개선

(5)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3대 가치인 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장소 기반) 구현을 제시하였다. 이런 배경에는 수도권 중심의 비대화로 대변되는 양극화현상에 대한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하다는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다.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회의 균등,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공정·자율·희망의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약속2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3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공간적 공정한 기회 보장이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정의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다.(대통령 인수위, 2022)

역대정부와 다른 점은 국정과제와 균형발전의 논리적 정합성·일관성 확보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그림 6]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개념도

그 주요내용은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자체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자체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자체간 협력기반 강화,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를 제1약속으로 채택하였다.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재조정, 자치권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의회 자율권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개선, 자치 경찰권 강화, 지방분권 사전 평가제도 개선,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 / 지방 재정력 강화는 재정 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 자주재원 확충,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 재정 진단,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 /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 체계 개편은 교육자유 특구 시범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확대, 지역대학의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교육기관 규제와 평가 제한,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조성 / 지자체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는 지자체 정책기능 확대, 인적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지자체간 저액 경쟁 촉진,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 / 지자체간 협력 기반 강화는 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 분권 혁신 특구 조성, 지자체조합 등 지자체간의 협력 활성화, 지자체간 관계 개선 /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는 주민투표제도 개선,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지방감사제도 독립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약속인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제공은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은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지정 및 운영(기회발전 특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르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은 농어촌 청년 뉴타운 조성,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쾌적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농촌 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산촌,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이웃 사촌 돌봄 주민환경 /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은 미래 전략 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는 지방대학 기반 혁신캠퍼스 타운 조성, 혁신융합캠퍼스 활서오하,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개별 지역기업 밀착-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지역금융 지원 체계 강화 /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은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지역산업단지 고도화,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이다.

세 번째 약속인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수 있도록 지원은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업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이며,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는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골목산업 생태계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연계 강화, 중앙-지역 정책 연계투자협약 제도 유연성 확보,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 지역 특화 사업문화 인프라 강화는 기초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지역고유의 문화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지역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편 및 지속적 관리,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으로 실천 동력 확보,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이다.

2) 충남 균형발전 정책

2007년 전국 최초 제도화, 발전방향 설정은 전국 수범 사례였으나, 추진과정상 당초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기본계획(2008-2020)상 3단계로 구분하고,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으나, 개발거점 조성은 계속되고, 연계상생발전은 미시행되었다. 국가균형발전, 시군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충남도내 권역별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시군 특성에 기반한 연계협력을 전제로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지만, 민선5기 이후

(2기, 3기)부터는 정책 배경·목적이 희석되며, 시군 현안사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1기(2008-2012)사업은 도지사 지원 방향 결정에 따라 시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방향성 명확, 대규모 사업, 거점 형성)함에 따라 중앙부처, 충남도 상위계획, 민선 4기 정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시군별 특성에 따라 기초 생활인프라(도로, 상수도 등)를 지원하였다.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제2기(2013-2017)사업은 제1기 사업의 연속 추진하였고, 시군 현안사업의 수렴 추진으로 균형발전 목적 퇴색 시작된다. 방향성 불명확, 소규모 시군 현안사업 추진 시작되었고, 도 지휘부의 방침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1기사업의 지속 추진하게 된다. 이로인하여 중앙부처, 충남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고려는 후퇴하고, 삶의 질 관련 사업, 시군 현안사업 추진이 시작된다.

제3기(2018-2020)사업은 지속적인 관광사업 추진, 시군 현안사업, 삶의 질 관련 사업으로 당초 목적 퇴색되게 된다. 방향성도 퇴보하고, 소규모 현안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경제관련 사업은 지속 추진 및 미래대응사업 일부 추진이 되었다. 한편, 소외지역 삶의 질 개선, 관광사업 등 소규모 시군 현안사업의 추진이 주를 이루게 된다.

〈표 9〉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별 목표, 방향

구분	1기('08~'12)	2기('13~'17)	3기('18~'20)
정책목표	지역균형발전 추진	충남의 신성장축 구축	골고루 잘사는 강한 충남 구현
사업방향	개발거점 기반 마련 및 경제력 격차 최소화	개발거점 구축 및 시군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개발거점간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로 코리도 조성
시군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부여 : 대백제전 대비 백제문화 선양 및 관광지 개발 ▶ 보령·서천·태안 : 서해안 관광개발 및 지역특산물 발굴 육성 ▶ 논산 : 기호유교문화 및 관광개발, 백제문화개발 ▶ 금산 : 인삼, 약초특화사업 ▶ 청양 : 청정지역 관광개발 및 지역특산물 발굴 육성 		

〈표 10〉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 유형별 규모 변화

구분	1기('08~'12)	2기('13~'17)	3기('18~'20)
사업유형	시군특성화 발전 기초생활 인프라	삶의 질 시군 현안사업	시군현안사업 중심
사업규모	대규모(54지구)	중·소규모(68지구)	소규모(76지구)

〈표 11〉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1단계 사업 유형별 지구수 현황

구분	계	관 광		산 업		기 반		삶의 질	
		지구수	비율	지구수	비율	지구수	비율	지구수	비율
계	198	82	41%	67	34%	26	13%	23	12%
공주*	18	9	50%	3	17%	5	28%	1	5%
보령	13	6	47%	3	23%	2	15%	2	15%
논산*	23	13	57%	3	13%	3	13%	4	17%
금산*	34	6	17%	24	71%	2	6%	2	6%
부여*	26	13	50%	9	35%	4	15%	0	0%
서천	32	13	41%	13	41%	0	0%	6	18%
청양*	33	17	52%	9	27%	3	9%	4	12%
태안	19	5	26%	3	16%	7	37%	4	21%

* : 남부권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98지구 중 사업유형별 투자비중은 관광분야 82지구(41%), 산업분야 67지구(34%), 기반분야 26지구(13%), 삶의 질 분야 23지구(12%)로 관광, 산업분야에 약 75% 집중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분야는 지역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관광 성장 동력 마련 노력하였다. 총 198지구 10,909억원 중 82지구에 5,415억 원 투자하여 전체 지구수 기준 41%, 전체 사업비 기준 50% 차지한다. 관광시설 개선과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을 통한 시군별 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 역사기반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거점 확충을 통해 연간 방문객수 3천4백만명 확보, 관광상품 개발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하였다.

산업분야는 지역특화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육성기반 구축하였다. 총 198지구 10,909억원 중 67지구에 2,889억원 투자하여 전체 지구수 기준 34%, 전체 사업비 기준 26% 차지하며,

지역특화 농수산물 생산·가공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창업지원 등 지역 경쟁력 강화, 금산인삼특화단지, 부여 굿뜨래 클러스터 등 생산가공 및 유통·마케팅사업을 통한 소득증대 (매출액 2,005억원, 고용창출 606명), 전통시장 현대화 및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하였다.

기반(SOC)분야는 도로 및 상수도 설치 등 사회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편의증진 도모하였다. 총 198지구 10,909억원 중 26지구에 1,304억원 투자하여 전체 지구수 기준 13%, 전체 사업비 기준 12% 차지하며, 구도심 재생사업, 도심내 공원·광장 조성,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상하수도 및 배수지 신설 등 생활환경시설 개선 (수혜인원 4.1만명), 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강화 하였다.

삶의 질 분야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실질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통한 보편적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거주 만족도 제고하였다. 총 198지구 10,909억원 중 23지구에 1,301억원 투자하여 전체 지구수 기준 12%, 전체 사업비 기준 12% 차지하며, 도서관, 복지타운, 체육시설 건립 등 주민 복지 및 문화 여가 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족통합지원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수혜인원 32만명),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조성하였다.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로 안정적인 재원 투입 가능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원활하게 하였다.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 이내로 보조금으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가능하다. (한상욱, 2016). 더불어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중앙부처 협의시 나타나는 사업 추진관련 예산 확보, 사업추진시기 연장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충청남도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여 시군의 사업발굴 자율성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하였다. 충청남도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 시·군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추진 가능한 사업의 제약이 적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사업 발굴 추진 용이해진 반면, 시장군수의 공약,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기 착공 기능이 가능하였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 충청남도는 법적·제도적 부합여부만을 검토·상정하고, 시·군 제안 → 도와 시·군의 협력적 계획 수립 → 균형발전위원회 심의·승인 → 사업 추진함에 따라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불균형실태와 충남도 주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검토에 따른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 관련 유사동종 정책사업과의 통합화가 요구된다.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자율성이 담보되지만, 국가균특회계 지원사업, 낙후지역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국장·도장·공약사항과의 방향성·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정책 효율성·효과성 제고하기 위함이며, 최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균형발전, 도정 과제(초광역권, 권역별 발전, 민선8기 공약)등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역할 재정립 필요하다. 광역지자체 입장에서는 多부처·多사업을 종합·조정·견인할 수 있는 계획·사업·모니터링체계 마련 및 작동가능한 추진체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앙 부처별 균형발전사업은 다원화되고, 분산추진되기에 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 실국간 통합추진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 필요하다. 충남의 경우 균형발전 관련 실국은 기획조정실, 경제실, 자치행정국, 미래산업국, 농림축산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등이다.

둘째, 발전지역·저발전지역을 아우르는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저발전지역은 고급 인적자원을 자체 육성, 공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므로,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과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응한 고급인력 공급체계를 연대하고, 공장 자동화·스마트화로 인한 유희 인력 발생 방지를 위한 직업 교육·훈련 선순환체계 구축하여 자립 경제권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시군별로 개별 추진하던 사업내용을 유사동종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이 연합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례로, 해안권(보령, 서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은 해양·레저·스포츠·관광·치유산업의 연합추진체를 마련하고, 해외 교류를 위한 Port Alliance & Network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서해안축의 중심으로 기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농산촌지역인 금강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은 미래 농산업에 대응한 체질·

소득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내 동질성을 갖는 고유문화(정신문화 등)를 고급화, 세계화하여 콘텐츠 문화산업의 정수(精髓)로 기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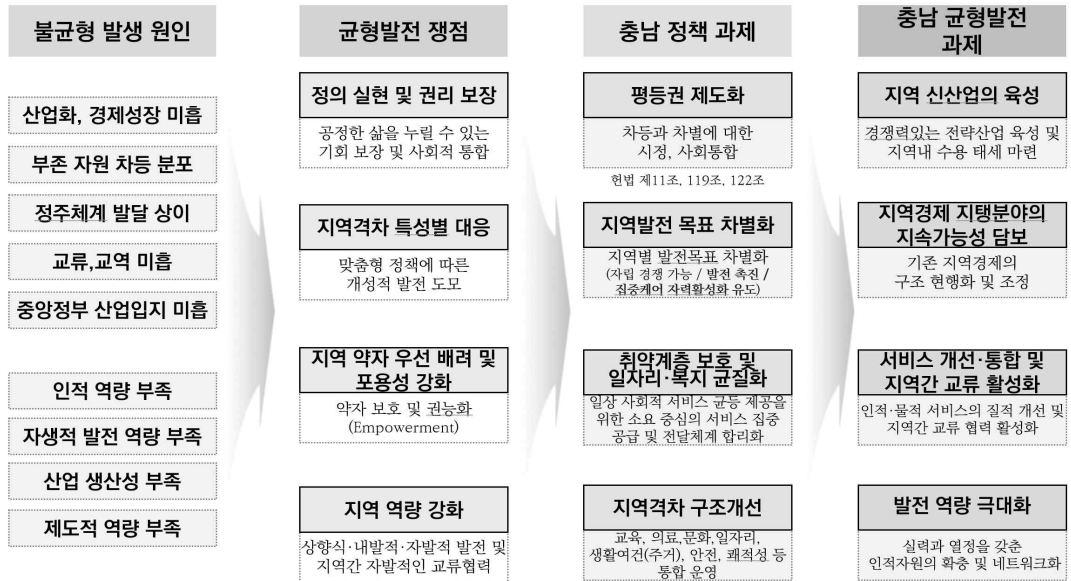
셋째, 사업 추진분야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 원인에 해당하는 인구감소대응,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아직 현장에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공급 주도의 SOC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라 중·대도시 세력권 확대에 따른 인구 이동, 산업 기능 전환에 따른 인구 감소(보령시)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인구 감소 심화지역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동시에 감소하고, 직주분리로 인하여 지역경제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내 젊은층·고소득층의 연접지역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하다.

지역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산업·경제 특성별 종합대책 마련 및 다분야간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저발전지역 중 국가·충남주도 산업을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외부의 파급효과가 지역내로 파급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미래 장기 전략산업 투자 시행을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하고,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저발전 지역이 보유한 농축산·해양 바이오, 수산업, 해양레저산업과 연계한 R&D, 인적자원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여 투자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구조적인 낙후지역, 농산어촌지역은 자립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탱산업 분야인 농어업, 서비스업을 현행화하고, 자립형 공동체 기반 비즈니스 육성도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 농어업, 소매업 업종별, 산업별 생산성 제고 및 고용규모 확대하되 경영내 실화, 판매 경로 확보·지원하고, 소상공인 재취업 및 신규 창업활동을 통합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의 역할이 사업 관리형에서 정책 코디네이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장에서 행정은 시설 조성 역량은 일정수준 제고되어 있지만, 산업, 경제, 인구 정책 등에 대해서는 그 역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 대응 기획·계획 능력 제고, 실현수단인 사업의 규모화, 거점화, 네트워크화를 위해 충남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시군을 매개함으로써 정책적·사업적 선취(先取) 도모하고, 시군의 한계(현안사업, 소규모, 기획역량(산업·SW) 부족)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가 일련의 절차를 진두지휘하는 행해사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최근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과거의 시설중심의 계획에서 산업, 경제, 역량 중심으로 변화를 도모하였고, 지역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시군별로 시급한 분야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7] 충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과제 도출(충청남도, 2019)

3. 일본의 지역 창생정책 검토

일본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론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지향하는 발전이란 수도권 중심적 성장과 균형분배의 실현하기에 이른다. 지역균형발전 무용론은 지역균형발전이 성장지역의 자원과 인력을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 오히려 성장지역의 발전잠재력을 훼손할 뿐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지향하는 발전이란 지반분권을 강화해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지역대별로 각자 도생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역, 사람 일자리 창생법(약칭, 지방창생법) 제정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지방소멸, 도쿄 일극집중이라는 상황적 배경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황은 2008년 인구 1.28억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18년에 1.25억명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일본의 지역별 장래인구 추계는 인구감소가 다소 악화되어 총인구 추계가 더 감소한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의 약 70%, 15세 미만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노년인구 비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약 50%에 달하고, 인구규모가 작은 시정촌일수록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정운선외, 2019)

우리나라에도 충격을 안겨주었던 일본창성회의와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마스다 보고서(2014)’에서 일본의 인구 전망을 통해 2040년까지 1,727개 시정촌 중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지방 소멸론을 제기하였다. 인구변화 단계를 3단계로 제시하였는 데, 완만한 감소와 노년인구 증가의 1단계(2040년까지),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년인구 유지의 2단계(2060년까지), 총인구, 노년인구가 모두 감소하는 3단계(2060년 이후)로 예상하였다.

고려해야할 사항은 일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대도시권인 오사카권, 나고야권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으로 인구의 동경 집중 현상의 심각성에 있다. 오사카권(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이나 나고야권(아이치현, 기후현 및 미에현)이 2013년부터5년 연속 전출 초과를 보인 반면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은 2017년 한해에만 12만명의 전입초과를 기록하였다. 지방권에서는 도쿄권으로의 전출 초과 영향도 있어 310만명이 감소하고, 도쿄권으로 초과 전출자가 많은 지역은 지방보다는 대도시에 해당하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아이치현 등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이들 대도시 지역의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정운선외, 2019)

〈표 12〉 일본 VS 한국 법·추진체계 비교

구분	일본	한국
법적근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제정(2014.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추진체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설립(2014.12) 총리실 전담기구(본부장 : 총리) -광역지자체 및 시정촌 전담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추진계획	지방창생 종합전략 - 일자리 창출 - 지방으로의 이주 유도 - 지방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유도 - 비장의 생활권 보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천차별 시행계획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종합전략 주요내용은 활력 있는 일본사회의 유지를 위해 2060년 1억 명 규모의 인구 확보·안정화와 함께 2050년 실질GDP 성장률 1.5~2%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정부의 장기비전(2060년), 창생종합전략(2015~2019년)과 도도부현 및 시정촌 차원의 지방관 종합전략 수립·추진하고 있다.(박승규외, 2016)¹²⁾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를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지방창생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PDCA(Plan-Decide-Check-Act) 정책단계별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다.(차미숙, 2016, 이하 재정리)¹³⁾

주요 공간구조 재편 전략은 Compact + Network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거대재해 임박이라는 위기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을 수립 (2015.8), 대류축진형 국토 형성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 네트워크 전략을 제시, 대류축진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형성전략에서는 필요 기능에 따른 권역인구 확보를 위해 대도시, 지방도시, 중산간지역 등 도시계층별 발전방향과 특성을 고려해 도시·지역공간구조의 재편을 촉구이다.

콤팩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역공간구조 재편전략은 대도시권은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히 제공되는 콤팩트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도시 교외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료·복지수요 급증으로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활력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여 대도시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역포괄케어 실현이 가능하도록 기존 스톡(stock)을 활용 하여 의료·복지기능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에 의해 형성된 공공교통(철도 등)을 축으로 대도시구조의 재구축 및 재생을 촉진한다.

지방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콤팩트한 공간 조성이 요구되면서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 2014.8)하고,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12) 박승규·여효성(2016),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제주연구원

13)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정촌별로 입지적정화계획 을 진행 중이다.(경기도, 2018)¹⁴⁾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전체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토록 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차미숙, 2016) 도시기능유도구역과 거주유도구역을 필수적으로 설정토록 하여 콤팩트시티의 형성을 지원한다. 도시공간구조의 콤팩트 수준(compactness) 측정을 위해 생활편리성, 보건복지, 안전·안심, 지역경제, 행정운영, 에너지·저탄소 등 6개 분야 평가지표·측정기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여, 입지적정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정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승규 외, 2017)¹⁵⁾ 입지적정화계획 수립 시 공공교통시책, 상업시설, 주택시책, 의료복지시책, 농업시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과 연계가 필요하다.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과 주변집락 간 연계를 통해 집락생활권을 형성한다. 소학교 등 다수의 집락을 포함한 지역에서, 생활서비스 기능과 지역활동거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모아 주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작은거점과 주변집락을 커뮤니티 버스 등 교통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람, 물품, 서비스 순환 등 교류거점 역할한다.

지역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과 증가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한다.(박승규외, 201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교권, 간사이, 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의 기능 특성화 및 중앙 리니어 신칸센의 연결을 통해 슈퍼 메가리전을 형성한다.(차미숙, 2016) 의료,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한다.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정비하고, 지역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 (박승규외, 2017)

14) 경기도(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연구

15) 박승규·이제연(20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13〉 일본 지방창생 주요정책 패키지별 목표 및 주요 추진시책

장기 비전 (중장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문제의 극복 : 2060년 1억 명 인구확보 목표, 도쿄일극집중 시정 성장력 확보 : 2050년 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
정책패키지	기본목표(KPI)	주요 추진시책
사람과 일자리창생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을 창출(젊은 층 고용창출수,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횡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분야별) 지방에 인재환원, 지방인재육성 및 고용대책 ITC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지방이주건수, 기업의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주 촉진 일본판 CCRC(Count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상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채용·취업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휴업률, 첫째자녀 출산 후 여성계회취업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자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신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 형성체결, 입지적정화 계획 수립, 중고·리폼시장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거점(다세대교류, 다기능형 집락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팩트화의 네트워크 형성, 연계충추도시권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대도시권의 안신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표 14〉 일반 지방창생 주요 정책 분야 및 정책과제

분야	일본
지역일자리 창생 :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과 세계를 잇는 로컬 브랜딩(일본관 Destination Management/Marketing Organization), 지역상사 로컬 이노베이션에 의한 지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본형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 청년창업) 지방의 선구적, 주체적 대응을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다양한 인재육성 및 확보, 지방창생칼리지 설립, 전문인재 지역내 유입촉진 등) 혁신을 담당한 조직형성 지원(민간노하우의 최대한 살린 프로젝트 사업주세 형성, 공익사업 담당 공공벤처 육성 및 자금지원 등)
지역내 인구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정부관계기관의 지방이전 “생태환약마을” 추진 (사회활동 지원, 안심간명 등 고령친화타운)
젊은 세대 결혼·출산·육아 희망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어프로치에 의한 저출산 대책 추진, 지역 실정에 따른 근로 방식 개혁 (지역근로방식개혁 회의 운영, 포괄적 지원을 위한 지역센터 개소, 아웃리치(기업지원) 및 지방창생 인턴쉽(대학생 지역기업인턴쉽) 지원, 지방이주희망자 자립지원, 지방취직지원 장학금 등)
마을만들기, 지역연대 및 집락생활권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형(수익창출) 마을 만들기 Compact + Network (컴팩트시티 및 광역연대의 추진) 연대충추도시권(중핵성을 가지는 권역의 시정촌을 연계한 도시권) 정주자립권(중심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농림수산업,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 장점을 활용하여 민관연계·협력으로 권역 전체를 활성화) 마을 생활권 유지를 위한 “작은 거점” 및 지역 자치운영조직의 형성

자료: まち・ひと・しごと 創生本部(2016), 정윤선의(2019)에서 재구성.

〈표 15〉 일본 지방창생 정책 주요 부처별 공간정책

정책과제		세부 정책내용
총 무 성	지역자립 촉진	이주·교류정보기든 등 지방으로의 이주·교부 추진, 지역활성화협력대 및 지역인재 환류 촉진, 과소대책 추진(빈집활용 정주촉진대책, 유희시설 재정비 등 지원, 지역자치운영조직 형성 및 지속적 운영지원), 지자체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공서비스 산업화(지역특산물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기반산업 강화, 민간인계 정보시 스템 크라우드 제공 등)
	새로운 지역만들기 : 연계중추도시권, 정주자립권, 취락 네트워크권 추진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및 지자체사업 지원, 조건불리지역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 연계 추진(시정촌간 광역연계 불가능한 경우), 3대 도시권 연계 추진, 정주자립권 정책성과 측정 및 형성지원 사업, 취락네트워크권 형성 추진 및 주민생활 서포트 시스템 구축, 마을산업 지원 등
국 토 교 통 성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하는 ‘고향 취락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인구감소·고령화가 지속되는 조건불리지역(과소, 산촌, 반도, 도서, 대설지역)기간취락 생활서비스 제고 및 지역활동의 ‘작은 거점’형성(시설재편·집약 등), 시정촌 생활권 기본방향 구상 검토, 공공시설 활용 시설개보수 사업 등
	U·I·J턴 ¹⁶⁾ 2지역거주 추진	청년의 지방체험 교류(대도시권 청년대상 지방체험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정촌 정보취합: 전국 도도부현 운영 UIJ턴 포털), 2개 지역 거주를 위한 조사수행 등
	지역만들기 정보교류	지역만들기 표창(창의적 광역만들기를 통한 지역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지역간 연계·교류 촉진 등), 지역만들기 교류회의 운영(활동가, 주민, 공무원 등 네트워킹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주체간 협력	지역주민, NPO, 기업 등 민간 활동형태의 다양한 및 고령화, 공공적 가치를 포함하는 활동영역 확대 추진, 민간주체의 자치·지역현안 해결시스템 구축 및 활동환경 정비 등
	관련법령의 의한 사업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 산촌진흥법(1965), 특수토양지대 재해방제 및 진흥 임시조치법(1975), 특정농산촌지역 농림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1993), 지방거점도시 지역의 정비 및 산업업무시설 재배치 촉진에 관한 법률(1992), 종합보양지역 정비법(1987), 저개발지역 공업개발 촉진법(1961), 일본정책금융 특별대부제도(기업활력강화 대부, 지역활성화 및 고용촉진자금) 등

자료 : 이기배(2016), 정운선의(2019)에서 재구성

16) U턴은 도시거주자의 출신지로 귀향을, I턴은 무연고지 귀향을, J턴은 출신지는 아니지만 출신지 인근의 지방도시를 귀향을 의미하며 출신지에 일자리 등이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4. 소결 및 시사점

첫째,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발전 방향이다.

저발전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중요한 요소가 지역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이다. 지역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개성에 기반한 특성화, 차별화 발전을 통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저발전지역이 농산어촌인 바, 해당지역의 수동적, 의존적 발전에서 탈피한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발전지역에서 나타나는 단편화·파편화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관련 산업간의 융복합(inter-sectoral convergence) 함으로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관건이다. 지역내 산업은 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전략이 필수이며, 자신만의 폐쇄적인 활성화 도모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충청남도의 지역발전, 균형발전 정책이다.

국가차원에서는 참여정부이후 이루어진 국가균형발전 정책 도입이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이다.

아직 정권 초기이기에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하에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전제하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에서도 발전된 지역에 그 효과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저발전지역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12년간의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과제로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유사 동종 정책사업과의 통합화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으로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추진 사업, 국가균특회계 지원사업, 낙후지역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발전지역-저발전지역을 아우르는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사업의 요구 증가이다. 저발전지역은 고급 인적자원을 자체 육성, 공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므로, 미래 신산업

육성, 고급인력 공급체계 연대, 직업 교육·훈련 선순환체계 구축 등 발전시군 나아가서 대전시, 세종시와의 연계협력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사업 추진분야는 향후 거시적·대외적 영향에 따라 중·대도시 세력권 확대에 따른 인구 이동, 산업 기능 전환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자연적 인구 감소 심화지역은 젊은층과 노년층이 동시에 감소하고, 직주분리로 인하여 지역경제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내 젊은층·고소득층의 연결지역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하며, 그 분야는 지역 산업·경제 특성별 종합대책 마련 및 다분야간 선순환 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구조적인 낙후지역, 농산어촌지역은 자립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탱산업분야인 농어업, 서비스업을 현행화하고, 자립형 공동체 기반 비즈니스 육성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충남도의 역할이 사업 관리형에서 정책 코디네이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 대응 기획·계획 능력 제고, 실현수단인 사업의 규모화, 거점화, 네트워크화를 위해 충남도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정책 사례이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중장기적 전망하에 사람과 일자리, 자원과 마을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공간구조 재편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주요 공간구조 재편 전략은 Compact + Network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공간 전체의 관점에서, 다극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콤팩트한 공간 조성하고, 입지적정화 계획제도를 도입(도시재생특별조치법 개정, 2014.8)하고,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영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정촌별로 입지적정화계획 을 수립 중이다. 입지적정화계획은 도시전체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과 공공교통의 일체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토록 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 활용 및 시가지 공동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간 연계 촉진과 지역공공교통체계 강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과 증가하는 고령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연계와 지역공공교통 네트워크 전략을 강화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쿄권, 간사이, 나고야권 등 3대 도시권의 기능 특성화 및 중앙 리니어 신칸센의 연결을 통해 슈퍼 메가리전 을 형성한다. 의료, 복지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이 원활하도록 인구 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연계중추도시권 및 정주자립권 형성을 촉진한다.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기능유도구역 및 거주유도구역을 거점으로, 중산간지역은 작은거점(compact village)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정비하고, 지역공공교통망 확충 및 수요 관리형 교통체계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

제3장 충청남도 남부권 특성 및 전망

1. 발전 수준 분석

1) 개요

지역발전수준을 분석·측정하는 유형은 크게 지역발전잠재력 측정, 지역발전수준의 진단·평가, 지역격차 산출, 낙후지역 선정 등이 있으며, 지표는 정책적 지표와 학술적 탐색을 위한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정책 적용 지표는 지원을 목적으로 지표를 선정하고, 차등적 지원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학술적 탐색적 연구는 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며 다수의 지표를 사용하고 방법론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삶의 질, 리더십,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및 지역혁신·창조등과 관련한 지표개발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김태환 외, 2004)이지만, 우선 지역경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산업 및 사회기반이 포함된다.

충청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상 17개 지표에 의거하여 시군간 발전 격차를 분석하며, 지표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충남 균형발전 격차 분석지표는 크게 사회경제분야와 주거·기반시설 분야로 나뉘며, 사회·경제분야는 인구, 재정·소득, 고용·산업으로 나뉘고, 주거·기반시설분야는 인프라, 생활환경, 교육 및 문화, 복지로 나뉜다. 충남 균형발전 격차 분석 지표간 가중치는 없으며, 모든 지표를 표준화하여 총 점수를 산출한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인구, 재정 및 소득, 고용 및 산업 등 시군별 지역발전 수준 분석 지표 중 유의미한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수준을 검토하였다.

2) 주요 내용

(1) 인구

충남의 인구 2,109천명 중에 영유아가 5.99%, 15세 이하 13.68%, 65세 이상이 19.45%를 차지하는데 남부권은 영유아가 4.12%, 15세 이하가 10.49%, 65세 이상이 28.19%로 고령층의 인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충청남도 0.35%, 발원시군 1.11%를 보이는 반면 남부권은 -1.17%로 전반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한편, 남부권은 저발전지역보다 인구 감소율이 낮아서 인구 감소세가 매우 강한 지역이다.

남부권의 연령대별로 감소세가 심각한 연령대는 영유아로 -6.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은 2.76%로 나타나 인구구조상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증감율을 비교하면, 충청남도의 인구감소세는 둔화되고 있고, 발원시군도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부권의 인구 감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한편, 15세 이하의 연령대는 감소율이 둔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표 16〉 충남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산출방법
사회 · 경제 분야	인구	인구증감률	최근 5년간 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인구/행정구역면적
		노령화지수	65세이상인구/15세 미만인구
	재정 및 소득	재정력지수	재정수입액/재정수요액
		소득세할 주민세	당해지역 소득세할주민세의 총합
	고용 및 산업	천명당 사업체수	사업체수×(1,000/인구)
		천명당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수×(1,000/인구)
		종사자 증가율	종사자 증가율
주거 · 기반 시설 분야	인프라	도로율	(도로연장/행정구역면적)×100
		상업, 공업지역 면적비율	(상업지역면적+공업지역면적)/행정구역 면적
		상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율+하수도보급율)/2
	생활 환경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전 주택수/주택수×100
		1인당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인구
	교육 및 문화	면적당 학교수	초중고학교수/행정구역면적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도서관수+문화시설수+체육시설수)×(1,000/인구)
	복지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의사수×(1,000/인구)
		영유아 천명당보육시설수	보육시설수×(1,000/영유아인구)

자료: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재구성

〈표 17〉 남부권 인구수 및 연평균 증감률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인구 비중	총남대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증감세
					최근 10년간	최근 5년간	
충청 남도	계	2,109,102			0.57	0.35	-0.22
	영유아	126,327	5.99		-2.03	-4.17	-2.14
	15세 이하	288,531	13.68		-1.9	-2.09	-0.19
	65세 이상	410,149	19.45		3.32	3.66	0.35
발전 시군	계	1,457,516		69.11	1.42	1.11	-0.31
	영유아	101,656	6.97	80.47	-1.17	-3.53	-2.37
	15세 이하	226,554	15.54	78.52	-0.94	-1.33	-0.39
	65세 이상	210,966	14.47	51.44	4.2	4.63	0.43
저발전 시군	계	651,586		30.89	-1.07	-1.23	-0.16
	영유아	24,671	3.79	19.53	-4.9	-6.57	-1.67
	15세 이하	61,977	9.51	21.48	-4.72	-4.62	0.1
	65세 이상	199,184	30.57	48.56	2.46	2.7	0.24
남부권	계	406,303		19.26	-1.12	-1.17	-0.05
	영유아	16,731	4.12	13.24	-4.82	-6.25	-1.43
	15세 이하	42,629	10.49	14.77	-4.55	-4.29	0.27
	65세 이상	114,555	28.19	27.93	2.31	2.76	0.45

주1) 발전시군 :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 홍성

주2) 저발전시군 :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주3) 남부권 :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자료 : 통계청, 각년도

(2) 재정 및 소득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 수요액¹⁷⁾ 대비 기준재정 수입액¹⁸⁾으로 나눈 값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재정보전금, 분권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충청남도 시군의 재정력지수는 0.373을 보이고 있으며, 남부권은 2021년 수요액은 211.9조이며, 수입액은 47.2조로 재정력지수는 0.223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력지수의 기준 재정 수요액은 지자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이고, 기준 재정 수입액은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자체 수입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요액은 104조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22.2조가 증가하여 매우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8〉 남부권 재정력 지수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 조원, %)

구분	2021			시군소계 대비 비중		최근 10년간			
						증감량		증감률	
	수요액	수입액	재정력 지수	수요액	수입액	수요액	수입액	수요액	수입액
시군소계	677.6	252.6	0.373	100.00	100.00	342.6	1,27.6	6.93	15.98
발전지역	331.1	177.5	0.536	48.87	70.29	173.2	92.6	7.40	16.43
저발전 지역	346.4	75.0	0.217	51.13	29.71	169.3	34.9	6.50	14.94
남부권	211.9	47.2	0.223	31.28	18.69	104.1	22.2	6.54	15.69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7)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 시행령 5조, 별표1에 근거한 일반행정비(인건비, 일반관리비, 안전관리비), 문화환경비(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사회복지비(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 복지비, 보건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농업비, 임수산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교통관리비, 지역관리비)를 말한다.

18) 기준재정 수입액은 지방교부세법 제8조, 지방세법 규정 표준세율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말한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중 소득세할 주민세는 주민세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할 주민세중 소득세의 10%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 것으로 주민의 활력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남부권은 2020년 8,254.7조원의 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며, 충남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증감량도 남부권이 저발전 지역보다 증가량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증감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증감률이 높게 나타난 사유는 공주시 9.7%, 논산시 8.22%, 계룡시 10.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자체는 부여군으로서 0.43%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산업구조가 다양하지 않은 농업기반의 산업구조가 고착화되어 산업경제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된다.

〈표 19〉 남부권 소득세할주민세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 조원, %)

구분	2020	시군소계 대비 비중	최근 10년간	
			증감량	증감률
시군소계	62,531.9	100.00	30,380	6.88
발전지역	49,901.2	79.80	24,323	6.91
저발전지역	12,630.6	20.20	6,058	6.75
남부권	8,254.7	13.20	4,161	7.27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3) 사업체, 종사자수

충남 전체 사업체수는 86,455개이며, 남부권은 16,660개로 약 1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시 근교지역으로서 사업체수가 저발전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종사자수는 122,899명으로 충남의 15.66%를 차지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별로는 계룡시가 1.38%, 청양군이 1.66%로 매우 낮으며, 계룡시는

삼군본부가 입지한 특성에 견주어보면 청양군의 사업체수가 매우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양군의 사업체수는 1,438개이다. 이러한 양상은 종사자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청양군의 종사자수는 8,166명으로 나타나며, 전체의 1.04%를 차지한다.

한편, 사업체당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충남은 9.1명, 발전지역은 9.7명, 저발전지역은 7.6명인데, 남부권은 7.4명으로 사업체당 고용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사업체당 종사자수도 역시 청양군이 5.7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낮은 시군은 부여군으로 사업체수 증가율은 1.62%, 종사자수 증가율은 0.97%로 거의 답보상태이다.

〈표 20〉 남부권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 개, 인,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당 종사자수
	개수 (2019)	시군소계 대비비중	최근5년간		명 (2019)	시군소계 대비비중	최근 5년간		
			증감량	증감률			증감량	증감률	
시군 소계	86,455	100.00	18,321	4.88	784,919	100.00	148,060	4.27	9.1
발전 지역	59,523	68.85	13,939	5.48	578,997	73.77	104,508	4.06	9.7
저발전 지역	26,932	31.15	4,382	3.62	205,922	26.23	43,552	4.87	7.6
남부권	16,660	19.27	2,479	3.27	122,899	15.66	21,429	3.91	7.4

자료 : 통계청, 각년도

(4) 노후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은 준공된지 20년이 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30년 이상된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개발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30년 이상 건물이 60%이상 되면 개발소요가 발생하게 되고, 80%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되게 된다.

하지만, 주택 개발수요가 거의 없는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노후주택비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성 감안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것은 공공의 주택 재건축, 도시재개발과 같은 공공 개입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남부권은 33.1%로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편이며, 가장 높은 노후주택 비율을 보이는 시군은 부여군 44.7%, 청양군 41.2%이다. 최근 5년간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과 발전지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계룡시의 노후주택비율이 18.57%로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21〉 남부권 노후주택 비율 및 증감률

(단위 : %)

구분	2020	최근5년간 증감률
시군 소재	27.6	-0.51
발전지역	14.7	-2.99
저발전지역	36.2	0.22
남부권	33.1	-0.64

주) 증감률에서 음의 값일수록 노후주택비율이 호전되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임
자료 : 통계청, 각년도

3) 발전수준 분석

충청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종합하여 지역발전격차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개별 지표값은 모두 상이한 단위로 이루어진 값을 가지고 있어 이를 상호 비교, 합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과정을 거쳤으며, 대표적인 표준화방법은 Z-score로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평균} = \frac{\sum_{i=0}^n x_i}{n}, \quad \text{표준편차} = \sqrt{\frac{n \sum_{i=0}^n x_i^2 - (\sum_{i=0}^n x_i)^2}{n(n-1)}}, \quad \text{여기서 } n = \text{시군수}$$

$$\text{Z-score} = \frac{(\text{시군별지표값} - \text{지표값평균})}{\text{지표값표준편차}}$$

2018년 대비 2022년 현재 시점의 충청남도내 시군별 지역발전 격차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의 격차가 지속 확대 중이며, 순위가 변화한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이 각각 순위가 하락 하였으며, 공주시는 12위, 논산시는 10위,

금산군 8위, 청양군 15위로 하락하였다. 발전격차가 호전된 시군은 보령시. 부여군이 순위가 상승하였다.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격차는 여전하다. 일부 시군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전체 격차는 고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발전시군과 저발전 시군간의 격차는 지속 벌어지고 있는 반면, 중간 시군은 지수가 악화되는 추세로 양극화 추세에 있다고 진단할수 있다.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구, 재정·소득이 격차 확대를 견인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저발전시군의 활력 저하가 고착화가 우려된다. 한편 최근 문화, 복지와 관련이 높은 삶의 질 분야에서는 저발전시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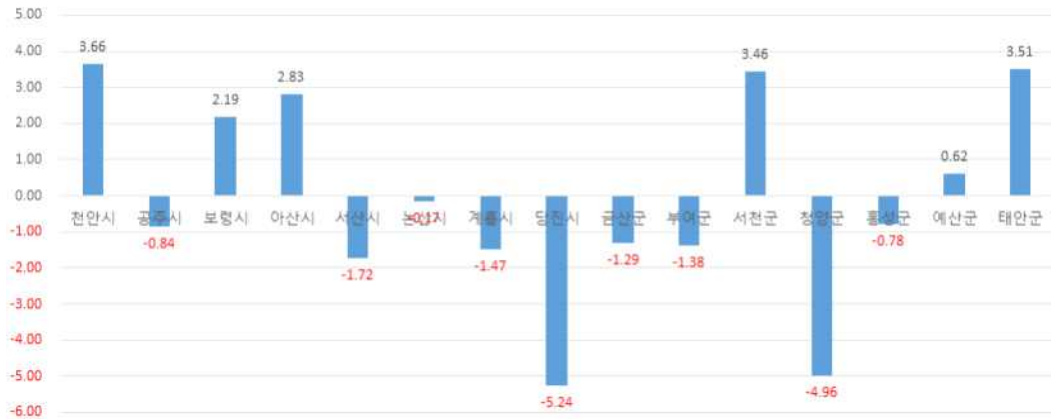
〈표 22〉 충남균형발전 지표 종합점수 및 증감

구분	표준화점수			순위		
	2018	2021	증감	2018	2021	증감
천안시	14.62	18.28	3.66	1	1	
공주시	-2.85	-3.69	-0.84	8	11	-3
보령시	-4.42	-2.23	2.19	10	9	1
아산시	13.57	16.40	2.83	2	2	
서산시	7.26	5.54	-1.72	4	4	
논산시	-2.97	-3.14	-0.17	9	10	-1
계룡시	10.51	9.04	-1.47	3	3	
당진시	5.92	0.67	-5.24	5	5	
금산군	-0.61	-1.91	-1.29	7	8	-1
부여군	-10.82	-12.20	-1.38	15	14	1
서천군	-7.37	-3.92	3.46	13	12	1
청양군	-9.87	-14.83	-4.96	14	15	-1
홍성군	-0.07	-0.85	-0.78	6	6	
예산군	-6.16	-5.54	0.62	12	13	-1
태안군	-5.13	-1.62	3.51	11	7	4
남부권	-2.77	-4.46	-1.69			
발전지역	8.64	8.18	-0.46			
저발전지역	-5.58	-5.45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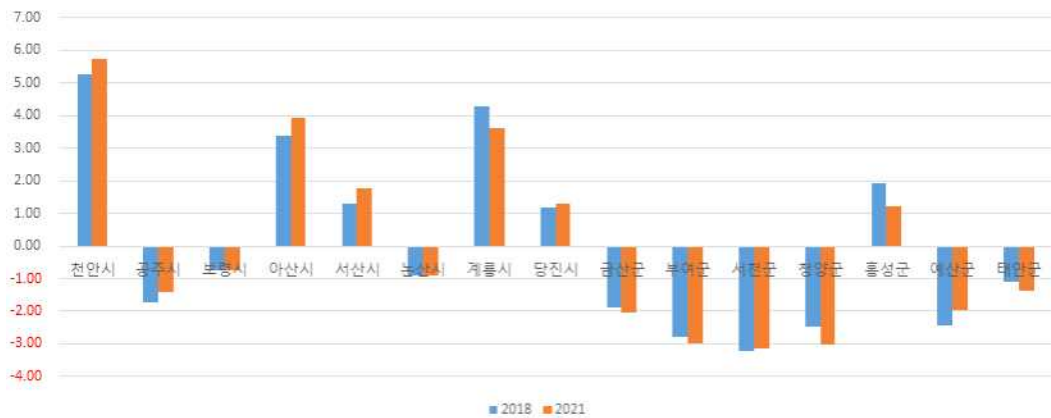
주) 음영은 남부권 시군



[그림 8] 충남 시군별 지역발전 수준 변화



[그림 9] 충남 시군별 종합점수 증감



[그림 10] 충남 시군별 발전 수준(인구 분야) 변화



[그림 11] 충남 시군별 발전 수준(재정·소득 분야) 변화



[그림 12]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고용·산업 분야) 변화



[그림 13]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인프라 분야) 변화



[그림 14]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생활환경 분야) 변화



[그림 15]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교육·문화 분야) 변화



[그림 16] 충남 시군별 발전수준(복지 분야) 변화

2. 지역경제 및 소득

1) 지역내 총생산(GRDP)

(1) 지역내 총생산

지역내 총생산은 해당 시군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한다. 시군의 경제 위치를 파악하고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재분배, 총 수요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활용된다. 지역내의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부권은 지역내 총생산액은 충청남도의 12.95%를 차지하는 1경 4693조원이다. 공주시가 3.27%, 논산시 3.60%, 계룡시 1.33%, 금산군 2.01%, 부여군 1.70%, 청양군 1.05%로 남부권 시군은 매우 낮은 지역내 총생산을 보이고 있다.

증감량은 당해년기준으로는 1,438조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2.61% 증가하였지만, 기준년 가격으로는 545조원이 증가하여 약 38%에 그치고 있고, 당해연도 대비 1.01% 증가하여 실질적인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당해년 기준의 모든 시군이 증가하였지만, 기준년 기준으로 계룡시 -0.14%, 금산군 -0.95% 감소하여 실질적인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⁹⁾

〈표 23〉 시군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9		시군별 비중		증감량		연평균 증감률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충남	113,488,325	112,302,545			12,189,194	11,003,414	2.88	2.61
남부권	14,693,806	13,801,362	12.95	12.29	1,438,302	545,858	2.61	1.01
공주시	3,712,791	3,429,687	3.27	3.05	515,422	232,318	3.81	1.77
논산시	4,080,662	3,833,843	3.60	3.41	541,080	294,261	3.62	2.02
계룡시	1,507,709	1,344,433	1.33	1.20	155,521	-7,755	2.76	-0.14
금산군	227,922	217,614	2.01	1.94	18,650	-84,427	0.21	-0.95
부여군	1,925,260	1,853,906	1.70	1.65	98,007	26,653	1.31	0.36
청양군	1,188,159	1,163,345	1.05	1.04	109,622	84,808	2.45	1.91

자료 : 통계청, 각년도

19) 당해년가격으로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효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거래규모가 경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며, 기준년 가격으로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세금(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나 생산자의 의사결정 분석에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2)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경제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이 25.79%,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업이 18.97%로 지역경제의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부권의 전통적인 산업인 농림어업의 경우 10.03%를 차지하여 지역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발전지역일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활동이 행정과 농림어업이라는 통상적인 시각과 차이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충남 북부권의 발전시군은 제조업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여 크게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1순위 경제활동은 제조업은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으로 대전시와 연접하여 일정수준 기업체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공주시 26.7%, 논산시 23.9%, 금산군 49.8%, 청양군 31.6%를 차지하고 있다. 계룡시는 행정업이 63.3% 차지하여 절대적이며, 부여군은 농림어업이 25.4%를 차지하고 있다. 2순위 경제활동은 행정업인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이며, 계룡시는 교육서비스업, 부여군은 제조업, 청양군은 농림어업이 2순위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공주시의 교육서비스업이 두드러져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남부권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공주시	제조업(26.7%)	행정업(11.6%)	교육서비스업(8.2%)
논산시	제조업(23.9%)	행정업(15.0%)	농림어업(12.7%)
계룡시	행정업(63.3%)	교육서비스업(5.2%)	제조업(4.6%)
금산군	제조업(49.8%)	행정업(7.2%)	농림어업(5.6%)
부여군	농림어업(25.4%)	제조업(17.5%)	행정업(9.6%)
청양군	제조업(31.6%)	농림어업(15.9%)	행정업(11.4%)

주 : 비중은 당해년 기준

경제활동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이며,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이는 경제활동은 광업이다.

한편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경제활동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7.5%, 행정업이 6.0%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저발전시군일수록 행정 등 공공주도 관련 업종의 증가세를 견인하였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에 민간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일정수준 대부분 하락세이거나,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성장세가 둔화되어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인 경제활동들이 대부분이다.

〈표 25〉 남부권 경제활동별 GRDP 증감량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9		비중		증감량		연평균 증감률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당해년	기준년
남부권	14,693,806	13,801,362			1,438,302	545,858	2.61	1.01
총부가가치	13,570,355	12,764,480			1,396,562	590,687	2.75	1.19
농업,임업및어업	1,360,827	1,368,421	10.03	10.72	-151,242	-143,648	-2.60	-2.46
광업	27,079	25,579	0.20	0.20	-15,875	-17,375	-10.89	-12.15
제조업	3,500,173	3,401,428	25.79	26.65	307,745	209,000	2.33	1.60
전기,가스,증기및공 기조절공급업	30,377	37,585	0.22	0.29	-31,974	-24,766	-16.45	-11.89
건설업	664,758	564,467	4.90	4.42	61,535	-38,756	2.46	-1.65
도매및소매업	573,992	569,493	4.23	4.46	48,239	43,740	2.22	2.02
운수및창고업	365,978	402,369	2.70	3.15	-15,396	20,995	-1.02	1.35
숙박및음식점업	285,590	251,211	2.10	1.97	59,050	24,671	5.96	2.62
정보통신업	171,439	188,526	1.26	1.48	-2,423	14,664	-0.35	2.04
금융및보험업	460,892	455,900	3.40	3.57	76,237	71,245	4.62	4.34
부동산업	729,196	696,687	5.37	5.46	29,540	-2,969	1.04	-0.11
사업서비스업	616,340	547,993	4.54	4.29	106,714	38,367	4.87	1.83
공공행정,국방및사 회보장행정	2,574,023	2,256,744	18.97	17.68	534,284	217,005	5.99	2.56
교육서비스업	968,842	894,542	7.14	7.01	144,629	70,329	4.12	2.07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806,859	765,371	5.95	6.00	201,920	160,432	7.47	6.06
문화및기타서비스업	433,990	367,685	3.20	2.88	43,579	-22,726	2.68	-1.49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전반적으로 당해년, 기준년 시장가격의 모두 감소하는 업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이며, 이러한 경제활동의 특징은 전통적인 산업과 압축성장기에 급속하게 확장하였다가 최근 철수하는 산업들이 대부분이다.

당해년은 증가하는데, 기준년도 가격은 감소하는 업종은 보조금등의 부가가치, 유통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산업은 문화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최근 들어서 공공주도로 견인된 경제활동들이며,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지역내에서 안착되었다가 산업·사회구조의 변화 감소에 따라서 규모가 축소되는 사업들인 건설업, 부동산업, 운수창고업 등이다.

당해년은 감소하는데, 기준년은 증가하는 산업은 해당지역에서 새롭게 이입되는 산업들로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들이다. 정보통신업은 5G 등의 민간 통신서비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운수창고업은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에 나타나 대도시 인근으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표 26〉 남부권 당해연도, 기준년도 증감 대비 경제활동

구분	증감률		당해년 증가 기준년 감소	당해년 감소 기준년 증가	당해년 감소 기준년 감소
	당해년	기준년			
남부권	2.61	1.01	건설업, 부동산업, 문화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공주시	3.81	1.77	건설업, 행정업, 문화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업
논산시	3.62	2.02	건설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계룡시	2.76	-0.14	행정업	정보통신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금산군	0.21	-0.95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부여군	1.31	0.36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문화서비스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업
청양군	2.45	1.91	광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전기가스업

2) 소상공인

(1)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저발전지역일수록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규모의 경제를 도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이다.

남부권의 소상공인은 총 16,820명이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 20%에 해당한다. 공주시가 4,503명, 논산시 4,379명으로 많고, 금산군 2,937명, 부여군 2,330명, 청양군은 1,466명, 계룡시 1,205명이다. 남부권의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표 27〉 충남 시군별 소상공인 사업장수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체	소상공인	분포	비중
충남	104,986	84,132	100.0	80.1
남부권	20,640	16,820	20.0	81.5
천안	30,351	24,096	28.6	79.4
공주	5,571	4,503	5.4	80.8
보령	5,246	4,358	5.2	83.1
아산	16,743	13,035	15.5	77.9
서산	7,665	6,133	7.3	80.0
논산	5,435	4,379	5.2	80.6
계룡	1,504	1,205	1.4	80.1
당진	9,926	7,949	9.4	80.1
금산	3,542	2,937	3.5	82.9
부여	2,837	2,330	2.8	82.1
서천	2,490	2,014	2.4	80.9
청양	1,751	1,466	1.7	83.7
홍성	4,823	3,929	4.7	81.5
예산	3,914	3,111	3.7	79.5
태안	3,188	2,687	3.2	84.3

주1 : 소상공인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기준(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과 매출액(3년평균 10억이하 또는 120억원 이하(제조업))으로 분류

구분	소상공인 규모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20억원 이하(제조업)

주2 : 본 분석에서는 고용보험 비정형통계에서 제공하는 기업규모별 통계를 활용함에 따라 세부산업별 상시근로자수만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정의, 기타 소상공인 통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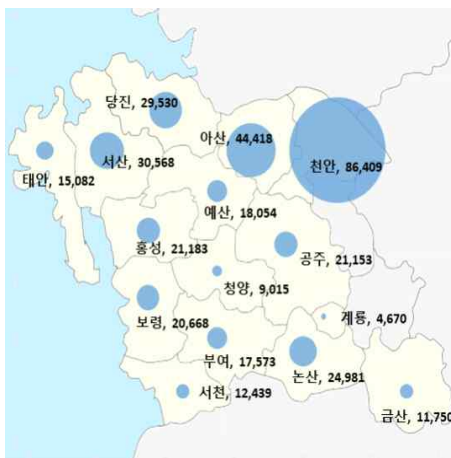
주3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로 1인(가족형태)이 운영하여 고용보험 의무대상 가입이 아닌 자영업자 추이는 별도로 분석함

출처 : 충청남도(2022) 내부자료,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사업장수 통계(2022.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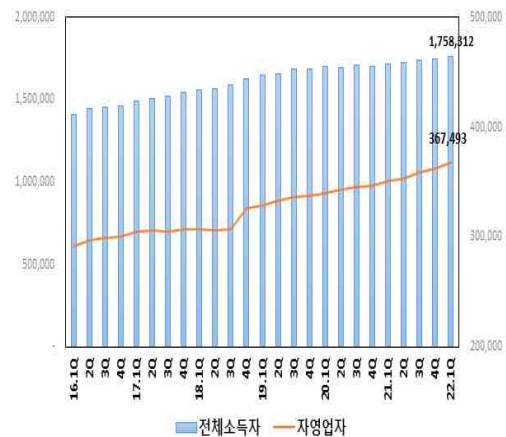
(2) 자영업자 창업 및 휴·폐업, 생멸 추이

충남도내 자영업자는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분포와 유사하며, 2018년 이후 경기침체기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베이비부머세대 창업등이 이어지며 자영업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남부권은 공주시 21,153명, 논산시 24,981명, 계룡시 4,670명, 금산군 11,750명, 부여군 17,573명, 청양 9,015명으로 89,142명이며, 충청남도의 24.3%에 해당한다.



자료 : KCB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에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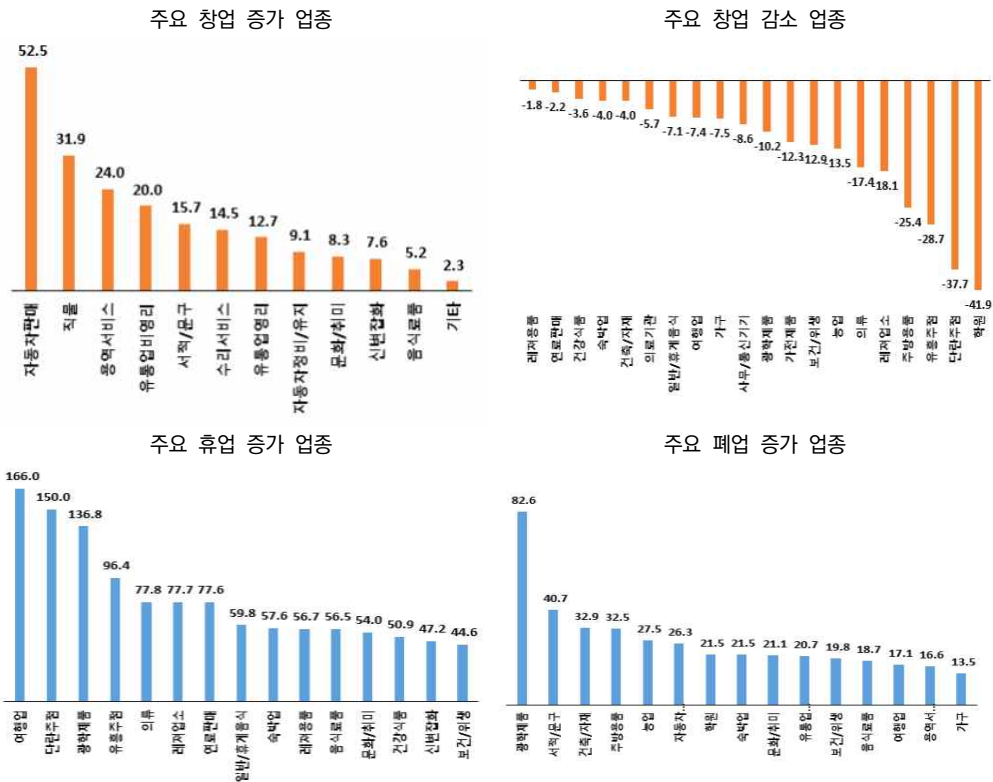


[그림 17] 자영업자 분포현황 및 추이

주로 창업이 증가하는 업종은 자동차 판매, 직물, 용역서비스 유통업 등이며, 창업 감소업종은 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방용품, 레저업소, 의류, 농업, 보건위생 등이다. 주요 휴업 증가업종은 여행업, 단란주점, 광학제품, 유흥주점, 의류, 레저업소, 연료판매, 숙박업, 음식료품업이며, 주요 폐업 증가업종은 광학제품, 서적문구, 건축자재, 주방용품, 농업, 자동차 학원, 숙박업, 문화취미, 유통업 등이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코로나19 감염기를 거치면서 폐업보다는 휴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렇게 휴업하는 사업장은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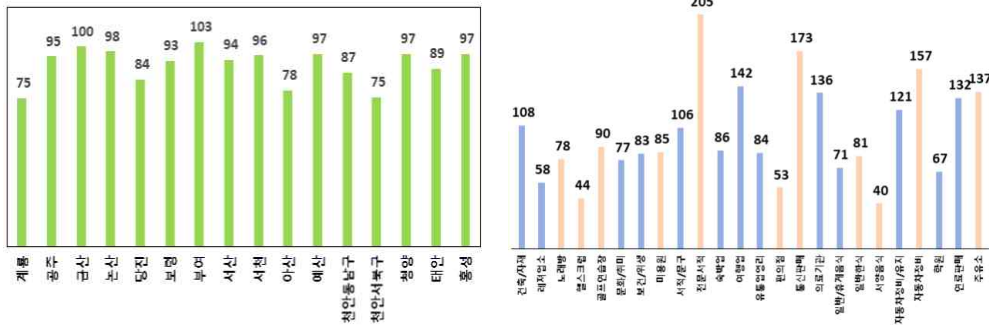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평균 영업 개월수를 살펴보면 공주시 95개월, 논산시 98개월, 계룡시 75개월, 금산군 100개월, 부여군 103개월, 청양군 97개월이며, 충남 평균을 하회하는 시군은

계룡이다. 평균 영업개월수는 상대적으로 일반 서비스업보다 기술 또는 자본집약적 업종에서 길게 나타난 반면,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최근 급증한 업종은 다소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일례를 들자면, 자동차정비·기계공구·건축자재는 기술직 또는 지식 필요한 업종이고, 주유소는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는 업종이며, 최근 급속하게 증가한 업종은 편의점이고, 트렌드 중시 업종은 문화·취미, 서양음식점 등이다.



주 : 2020년 2월~12월 창·폐업 업종의 전년동기비, 휴업은 2020.12월 기준 전년동월비로 분류함
출처 : 충청남도(2022) 내부자료

[그림 18] 코로나 19 발병 이후 주요 창업과 휴폐업 업종



자료 : BC카드 가맹점 자료,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휴폐업 데이터(2022.4월 기준)

[그림 19] 시군별 평균영업개월수 및 주요 업종별 평균 영업개월수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를 주요 산업별로 사업체당 평균 고용 인력과 사업장수 대비 비교하면 농어업은 영세화에서 성장(회복)으로, 소상공인은 성장에서 영세화로, 숙박업은 영세화에서 성장(회복)으로, 교육 서비스업은 위축에서 규모화로, 창장, 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 산업은 성장에서 영세화로, 보건업은 성장에서 규모화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위축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은 영세화되고 있고, 공공행정서비스업은 위축에서 규모화로 전환되고 있다.

〈표 28〉 코로나 19 전후 소상공인 부문 주요 산업별 변화

구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농어업	영세화	성장(회복)
소상공인	성장	영세화
숙박업	영세화	성장(회복)
음식점 및 주점업	성장	성장(회복)
도소매업	성장	성장(회복)
부동산업	성장	성장(회복)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산업	성장	영세화
교육서비스업	위축	규모화
보건업	성장	규모화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축	위축
개인서비스업	영세화	영세화
공공행정	위축	규모화

주) 본 분석에서 정의한 소상공인 정의를 적용, 사업체당평균고용인원=피보험자수/사업장수를 의미함.
 자료 : 고용보험, 비정형통계, 산업별 중분류·규모별 통계(각 연도별 12월 기준)

[그림 20] 코로나 19전·후 소상공인 부문 산업별 변화

사업장수	
영세화	성장
농업/어업 비금속광물 광업 음료/섬유제품/의복제품/가죽, 가방 및 신발/금속가공제품/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제외) 숙박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금융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소상공인 전반 식료품/비금속 광물/ 전자부품/의료정밀기계/전기장비/자동차/가구 등 제조업 수도업, 종합건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보험 및 연금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위축	규모화

사
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코로나 19 이전

사업장수	
영세화	성장(회복)
소상공인 전반 섬유제품/ 펄프, 종이제품/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전자부품 등/기타 기계 및 장비/기타 운송장비/가구 등 제조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금융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농업 비금속광물 광업 식료품/가죽, 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고무 및 플라스틱/비금속광물제품/1차금속/금속가공제품/자동차 등 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 수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연구개발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제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음료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임업, 어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등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수상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위축	규모화

사
업
체
당
평
균
고
용
인
원

코로나 19 이후

(3) 개인사업자 소득, 부채 변화

충남의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3,96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고 있으며, 북부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 소득보다 하회하고 있다. 전체 소득자의 평균소득보다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이 약 98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기타소득자가 포함되어 있어 전체소득자의 평균소득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남부권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02천원이며, 개인소득자는 3,720천원으로 충남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계룡시는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국방 행정과 관련된 특수성으로 보이고 있다.

충남의 부채의 변화는 금년 1분기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 128,315천원,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는 추세이며, 동기간 전체 소득자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78,400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고 있다. 소득과 유사하게 북부권을 제외한 지역은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남부권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전체 소득자는 72,375천원이고, 개인소득자는 118,015천원이다. 전체소득자 대출잔액의 경우 계룡시, 금산군이 평균 이상이며, 개인 소득자는 금산군이 평균이상을 보이고 있다.

부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대출은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하는 양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종시 인근의 공주시는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부채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고, 남부권의 대부분의 시군은 전반적인 쇠퇴로 인한 부채상환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9〉 1인당 평균소득, 대출 잔액 및 타지역 유입 소비 비중

(단위 : 천원, %)

구분	1인당 평균소득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전체 소득자	개인 소득자	전체 소득자	개인 소득자
충남	2,873	3,848	74,060	124,068
남부권	2,802	3,720	72,375	118,015
공주시	2,749	3,722	73,261	131,304
논산시	2,712	3,681	62,552	105,936
계룡시	3,305	3,978	86,842	120,440
금산군	2,708	3,568	81,685	129,282
부여군	2,641	3,659	60,994	98,995
청양군	2,694	3,714	68,915	122,133

주1) 평균소득은 집계기준 인구수에 평균소득을 역환산한 이후, 총소득/전체인구수(집계기준)로 나눈 값을 의미

주2) 평균대출잔액은 집계기준 대출보유자의 평균대출잔액을 역환산한 이후, 총대출잔액/대출보유자수(집계기준)로 나눈 값을 의미

주3) 충남지역 고객이 각 충남 내에서 소비한 것과 충남 외에서 소비한 것의 합을 지역민 총소비로 간주,

(역내소비 비중=역내소비/총소비*100, 역외소비 비중=역외소비/총소비*100 의미함.

주4) 유입소비는 충남 외 지역 고객이 충남 내에서 소비한 것, 유입소비 비중=유입액/각 지역별 지역민 총소비*100

주5) 공주는 유입소비의 약 1/2을 차지하는 단일 정수기업체를 제외한 비중이며, ()는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중을 의미함.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 소득·소비·부채·인구통계 자료 / BC카드 충남지역내·외 소비데이터 (시군구), BC카드 고객 기준(4월 누계 소비액)

(4) 역내외 소비액 및 비중

충남의 역내 소비액 대비 남부권의 비중은 12.52%이며, 역외 소비비중은 13.17%이다. 역내 소비액은 820억원이며, 이중 개인 소비액이 645억원, 법인이 172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외 소비액은 개인 소비액중 역외 소비액은 153억원, 법인 소비액은 46억원으로 나타났다.

남부권 중 가장 많은 역내 소비액을 보이는 시군은 논산시가 303억원이며, 공주시 205억원으로 나타났다. 역외 소비액은 논산시 63억원, 공주시 53억원, 금산군 31억원, 계룡시 31억원, 청양군 9억원이다.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소비되는 소비액은 논산시가 115억원, 공주시가 62억원, 계룡시 25억원, 금산군 73억원, 부여군 72억원, 청양군 16억원이다.

이중 타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소비되는 소비액 중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공주시 494억원, 논산시 88억원, 계룡시 16억원, 금산군 52억원, 부여군 47억원, 청양군 9억원이다. 타지역에서 유입되어 소비되는 소비액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주시 79.2%, 논산시 76.6%, 계룡시 64.1%, 금산군 71.6%, 부여군 66.0%, 청양군 57.3%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이 70% 이상을 상회하며, 청양군이 50%를 점하고 있다.

〈표 30〉 역내외 소비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충청남도	남부권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소비액	비중						
역내	개인	513,956	64,562	12.56	15,248	24,624	4,315	5,742	9,527	5,106
	법인	140,672	17,423	12.39	5,243	5,729	600	2,660	2,112	1,079
	소계	654,629	81,985	12.52	20,491	30,353	4,914	8,402	11,639	6,185
역외	개인	113,834	15,309	13.45	4,076	5,009	2,176	1,793	1,643	613
	법인	37,994	4,689	12.34	1,276	1,295	213	1,310	308	287
	소계	151,828	19,998	13.17	5,352	6,304	2,389	3,103	1,951	900
타지역 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개인	210,596	70,697	33.57	49,409	8,835	1,594	5,221	4,739	898
	비중	70.1	76.5	109.1	79.2	76.6	64.1	71.6	66.0	57.3
	법인	89,829	21,718	24.18	12,949	2,703	893	2,065	2,441	667
	비중	29.9	23.5	78.6	20.8	23.4	35.9	28.3	34.0	42.6
	소계	300,426.3	92,415	30.76	62,358	11,538	2,486	7,287	7,180	1,566

주1) 역내 소비 : 시군내 고객이 시군내에서 소비액

주2) 역외 소비 : 시군내 고객이 시군 외지역에서 소비액

주3) 타지역인이 역내로 유입된 소비 = 타지역 고객이 시군내로 와서 소비액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BC카드 충남지역내·외 소비데이터(시군구), BC카드 고객 기준(4월 누계 소비액), 2022.06

시군내 주민의 역내외 소비비율을 살펴보면 역외비율 20.8%, 역내비율 79.2%로 충청남도와는 각각 2%의 차이를 보이며, 역외비율이 2%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내 비율중 가장 낮은 시군은 계룡시가 67.3%를 차지하고, 가장 높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87.3%를 차지한다. 역외 유출과 관련되는 역외 비율이 높은 시군은 계룡시가 32.7%를 차지하고, 공주시 20.7%, 논산시 17.2%, 금산군 27.0%를 차지한다.

BC카드 중심의 시군내 소비데이터를 기준으로 타지역에서 유입되어 소비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공주시 241.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논산시 31.5%, 계룡시 34.0%, 금산군 63.3%, 부여군 52.8%, 청양군 22.1%로 소비비율이 나타났다.

타지역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중 개인은 공주시 255.7%로 월등히 높고, 금산군 69.3%, 부여군 42.4%, 논산시 29.8%, 계룡시 24.6%, 청양군 15.7%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입소비는 해당지역 외지역의 고객이 지역내로 유입되어 소비하는 비중으로 남부권은 대전시, 공주시의 배후효과 등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의 평균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31〉 시군별 역내외, 역내유입 소비 비중

(단위 : %)

구분	역외비중			역내비중			타지역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비중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개인	법인	합계
충청남도	18.1	21.3	18.8	81.9	78.7	81.2	33.5	50.3	37.3
남부권	20.1	21.8	20.8	79.9	78.2	79.2	72.9	91.4	74.2
공주시	21.1	19.6	20.7	78.9	80.4	79.3	255.7	198.7	241.3
논산시	16.9	18.4	17.2	83.1	81.6	82.8	29.8	38.5	31.5
계룡시	33.5	26.2	32.7	66.5	73.8	67.3	24.6	109.8	34.0
금산군	23.8	33.0	27.0	76.2	67.0	73.0	69.3	52.0	63.3
부여군	14.7	12.7	14.4	85.3	87.3	85.6	42.4	100.9	52.8
청양군	10.7	21.0	12.7	89.3	79.0	87.3	15.7	48.8	22.1

주1) 역내 소비 비중 : 시군내 고객이 시군내에서 소비한 비중

주2) 역외 소비 비중 : 시군내 고객이 시군 외지역에서 소비한 비중

주3) 타지역인이 역내로 유입된 소비비중 = 타지역 고객이 시군내로 와서 소비액 / 시군내 소비액

자료 : KCB 신용정보 자료(18세-104세 기준), BC카드 충남지역내·외 소비데이터(시군구), BC카드 고객 기준(4월 누계 소비액), 2022.06

3. 남부권 주요 계획

1) 발전 방향

충청남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시군별 발전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미래상은 장기간에 추진해야할 방향성을 표방하는 것으로 2020년과 2040년 목표연도에 비추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계획수립시기의 주요 이슈에 대응하여 작구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주시는 역사문화교육도시에서 스마트도시, 5도2촌에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변화하였고, 논산시는 도농통(복)합형 전원도시에서 행복도시,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로 변화하였다. 계룡시는 전원, 문화, 국방을 테마로 모범도시, 명품도시, 스마트 자족도시, 사람중심 청정도시로 변화하였다. 금산군은 배후전원지역, 전원도시, 인삼약초 특화도시로 변화하였다. 부여군은 청정농업지역, 문화관광 중심지역, 고도, 문화수도로 변화하였다.

청양군은 생태영농지역, 청정자연생태낙원, 행복공동체 휴양도시로 변화하였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시군별로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시군 기본계획인바, 최근 수립된 시군별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비교시 계획수립주체가 시군이다 보니 시군내의 환경과 자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계획적 적합성을 고려시에는 충청남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유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공주시는 백제왕도, 논산시는 행복, 계룡시는 청정도시, 금산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부여군은 문화수도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기본계획이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업경제부문에 대해서 미흡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문화, 복지, 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시군별 주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계획수립하는 시기에 따라서 주요 쟁점사안에 추가하거나 보완된 사항이 있으나, 대부분 2000년대에 있어서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는 좀 더 가다듬고,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를 보이는 것은 관광분야와 산업분야이며, 관광과 산업분야는 세분화되고, 목표 지향적이며,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와의 관계상에 있어서 도시체계, 교통, 관광이 복합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으며, 산업은 도농교류를 넘어 특화산업도시로 발전토록 전략을 설정하였다.

논산시는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관광, 산업분야에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분야에서 국방혁신클러스터, 혁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라이프케어산업, 농촌 융복합산업의 축진을 전략으로 하고 있다. 관광분야에서는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지역자원 기반형의 관광전략을 도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고 있지 않다.

계룡시는 도시 특성상 방향에 있어서 변화가 적은 지역이며, 군과 관련된 정주 인프라 등은 퇴색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금산군은 산악자원형의 관광과 인삼약초에 기반한 산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관광은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테마형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산업은 인삼약초산업의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전통, 문화예술 기반 관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백제문화도시 조성을 방향을 잡고 있으며, 농산업을 기반한 스마트 농업, 바이오 소재

산업 등을 새로운 산업발전 원동력으로 설정하였다.

청양군은 칠갑산, 지천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활성화는 한풀 꺾인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은 구기자, 고추의 가공, 유통, 브랜드화에서 축산바이오 클러스터, 4차산업 기반 첨단산업, 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까지 다양한 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 시군별 발전방향 변화

구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 계획 (01)	금강과 어우러져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교육 도시	첨단농업의 도농통합형 전원도시		인삼과 약초, 산악자원이 어우러진 배후전원지역	전통의 역사문화가 있는 청정농업지역	청정 자연경관을 갖춘 친환경 생태영농 지역
	수정 계획 (08)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SMART CITY	도농복합형의 자족형 전원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전원·문화·국방의 모범도시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관광의 중심지역	에코 파라다이스(Eco-Paradise) 청양
	재수정 계획 (12)	기업하기 좋은 5都2村 주말·관광·SMART CITY	활력있는 경제도시, 자연과 문화가 하나되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행복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있는 명품도시	자연과 생명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전원도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古都 Greenomics 부여	충남의 중심, 청정자연생태 낙원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공주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따뜻한 행복공동체, 더불어 행복한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국방의 메카, 스마트 자족도시 계룡!	모두가 누리는 행복터전, 살기좋은 인삼약초 특화도시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 문화수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행복공동체 휴양도시, 청양
시군 별 기본계획		날마다 흥미진진 백제왕도 공주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논산	민관군이 하나가 된 사람중심의 청정도시 계룡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공존과 상생, 동아시아 문화수도	

주1)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목표연도는 2040년임
 자료 :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재수정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
 2035 논산 도시기본계획, 2035 계룡시 도시기본계획, 2040 금산군 기본계획, 2040 부여군 기본계획

〈표 33〉 시군별 주요 추진 전략 변화

시군	부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공주시	도시체계 및 교통		행복도시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국도 중부내륙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과 신성장 거점 조성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입체적 광역교통체계 구축	고속·광역교통망 활용 지역발전 견인	고속·광역교통망 활용 지역발전 견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관광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성있는 전통·문화예술기반 조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제관광휴양도시 기반 강화	세종시와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강화 (MICE산업, 국제관광 중심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
				금강주변 친수공간 개발을 통한 수상레저·관광 강화	
	산업	대덕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집적지 조성	근교도시 장점을 활용한 농업·농촌의 전략적 육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5도2촌 주말도시 기반 강화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도시 육성
	도시정주환경	역사문화와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녹색생태도시 건설	신개발과 기성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교육 창조지역 육성	
				지속발전이 가능한 녹색 SMART CITY 조성	
	삶의 질				다양한 문화와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행복 복지도시 구현
논산시	도시체계 및 교통				사통팔달 논산 조성을 위한 광역 연계 교통망 확충
	관광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 역사문화자원과 농촌·산악자원을 연계한 관광휴양기반 마련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기반을 구축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 체험도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재정비 및 광역적·산업적 연계 추진

시 군	부 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산업	서해안시대에 대비 광역적 연계체계 강화 및 대도시근교지역으로서 교통·물류기반 구축	산업·유통단지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	활력있는 경제 도시	
		미래를 여는 첨단 농업·산업의 기반 구축	특화작물 생산·육성 및 생산구조 개편 및 농촌지역 인재 육성		
			관광농업의 적극적 육성		
			군사문화 관광 및 국방관련 산업클러스터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국방혁신 클러스터 조성(전력지원 체계, 국방 문화관광산업)
					혁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도시의 新성장 동력 확보 (라이프케어산업, 농 촌융·복합산업화 촉진)
	도시 정주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은 친절하고 쾌적한 도시	사람 중심의 행복하고 쾌적한 삶이 있는 도시 환경 조성
	삶의 질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성과 중심의 자치 역량 강화 도시	
계 룡 시	도시 체계 및 교통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축 정비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축 정비	
			생활권 설정 및 거점 특화개발	생활권 설정 및 거점 특화개발	
	관광				
	산업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연(地緣)산업 인프라 구축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연(地緣)산업 인프라 구축	
				특화된 국방도시 조성(제대군인촌,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시군	부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금산군	도시		민군화합도시('Civilita ry')를 지향하는 국방모범도시를 지향		국방의 중심 계룡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방허브도시 기반 강화
					작기 때문에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전환
	삶의 질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도시 조성	쾌적한 녹색자연환경의 보전과 녹지축 형성으로 생태도시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술문화도시 구현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교육문화도시 구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도시 체계 및 교통				지역 상생발전과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관광	산악자원, 지역특산품,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반 구축	생활문화형 사계절 관광개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 관광 개발	지역 특화자원의 발굴과 테마를 활용한 관광거점 육성
	산업	인삼·약초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인삼·약초 특화지구로 육성	특화산업의 전략적 계획 수립과 생명농업패러다임 구축	인삼·약초 등의 건강·웰빙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다각화(요양산업, 웰빙산업)	지역산업의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마련(금산 인삼의 세계화·명품화, 6차 산업화 및 인삼약초 광역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농산물 및 지역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내발적 농업패러다임 구축(고급화, 브랜드, 근교농업, 벤처농업 등)	

시군	부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도시	대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첨단산업단지 및 전원주거단지 조성			
			어메니티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공공사업	경관·생태·환경자원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형 주거 시설과 정주 환경 조성
	삶의 질		선진복지 패러다임 도입 및 정착		
부 여 권	도시 체계 및 교통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서 입체적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서 입체적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세계역사도시로서 국제적 문화관광지역으로 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	
	관광	백제의 고도(古都)로서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전통·문화예술기반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국제적 거점관광지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전통·문화예술기반 육성	1400년전 대백제의 전통문화예술 육성 및 시설기반 확충	백제문화의 가치창출을 통한 동아시아 백제문화도시 건설 (세계문화유산도시 특화 관광지, 세계화를 위한 컨텐츠 사업)
				농촌과 도시가 소통하는 전원적인 녹색여가 복합공간도시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창조되는 금강과 하나 되는 부여	
	산업	토마토, 양송이 등 지역특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첨단유기농법 등 기술집적으로 첨단생태농업지대로 육성하며 관광농업과 체험형농원, 농경지 등을 확충하여 관광 자원화	경쟁력을 갖춘 첨단 농업기반 구축	첨단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복합생활공간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농업 모델 구축 및 지역 통합먹거리체계 확충
			농촌어메니티자원을 이용한 농촌소득기반 확충		

시군	부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교통네트워크 구축(바이오 소재산, 교통물류거점 간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				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친환경 생활기반 조성
	삶의 질		농촌복합생활공간화로 침체된 농업지역을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존과 상생의 도시환경 조성
청양군	도시 체계 및 교통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지역간선도로망을 확충·정비하여 접근성 향상		세종시,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간선도로, 중심시까지 등)	
	관광	칠갑산도립공원휴양림 ·지천천장호·칠갑호 등 산악 및 수변공간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및 장승공원, 장승제·산신제 등 마을전통 문화자원과 지역문화축제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화	칠갑산·지천 중심의 문화관광 활성화	칠갑산·지천 중심의 문화관광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그린투어의 메가로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그린투어의 메가로 육성	
					실버세대를 겨냥한 휴양도시로 도약(관광브랜드, 실버 정주도시)
	산업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고추 등 지역특산품의 가공·유통시설 설치,			

시 군	부 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당초계획 (2001)	수정계획 (2008)	재수정계획 (2012)	
		공동브랜드화 등 환경농업지식기반농 업화의 선도지역으로 발전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 육성(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축산바이오클러스터)	
					‘그린뉴딜’ 생태기반 지역경제 조성(청정자원형 생태클러스터, 지역순환경제, 창조적 4차산업 기반 첨단산업)
					‘사람중심’ 공동체가 선도하는 농촌의 새로운 진화(인력양성, 생활공동체, 플랫폼 등)
					튼튼한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농촌형 스마트 타운 조성
	도시 정주	중심도시기능 강화 및 교육·의료기반 확충으로 내적 통합성을 강화하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주거단지, 저밀도 산악휴양주거단지, 노인들을 위한 보양 및 휴양단지 등 차별화된 미래형 정주환경 조성			
	삶의 질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나. 고령친화 공동체도시건설(복지 전달체계, 생활SOC, 스마트 농촌권)

2) 계획 중인 주요사업

(1) 도시·거점 개발 및 교통

도시 및 거점 개발 분야는 기존의 KTX 공주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를 계획에 반영한 곳은 공주시, 계룡시이며, 공주시는 제2단계 공공기관 유치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화가 미흡하고, 계룡시는 국방연구원을 유치하여 국방연구혁신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교통 분야의 주요 사업은 충청권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① 광역 동서간으로는 충청 산업문화철도, 보령~상주간 고속도로, 부여~대구간 고속도로를 ② 광역 남북간으로는 허부내륙고속도로를 ③ 세종시와의 접근성 위해 행복도시~공주간, KTX 공주역, 부여간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④ 대전시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논산시, 계룡시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확충을 계획하였으며, ⑤ 남부권 내의 동서방향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지도 68호선을 계획되어 있다.

〈표 34〉 시군별 도시·거점개발 및 교통분야 주요 사업계획

구분	도시·거점 개발	교통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공주역 성장거점육성 •세종시인접지역 2단계이전공공기관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산업문화철도 •행복도시~공주간 BRT •행복도시~정안IC~충남혁신도시연결도로 •행복도시~KTX공주역~부여연결도로 •국도39호선(신풍~유구)확장 •국도39호선(청양~신풍)시설개량
논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논산~상주간 고속도로 •호남선논산역~가수원역간직선화 •충청권광역철도 강경~계룡구간의 광역철도확충 •국지도68호선(논산IC~금산)개선 추진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국방연구원 유치 등 국방연구혁신거점화 •계룡대실지구 · 하대실지구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권광역철도(신탄진~계룡)추진으로 •대중교통연계와환승체계구축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령~논산~상주간 고속도로 •부여~금산~대구간 고속도로 •국지도 68호선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부여~대전~보은고속도로 •행복도시~공주KTX역~부여연결도로 •국도29호선(부여~청양)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산업문화철도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자료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주요계획 정리

(2) 경제·산업

경제·산업 분야는 크게 농림업, 사회적 경제, 제조업·첨단산업, 귀농귀촌·인적자원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농림업 분야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향을 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스마트 농업,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를 부여군이 계획하였다.

사회적 경제영역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시군은 청양군이며, 청양군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형의 사회적 경제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가 경제,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통합 복지전달체계와 복합화하여 추진코자 계획하였다.

제조업 첨단산업분야는 시군별로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데, 공주시는 바이오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논산시는 향노화, 헬스케어의 라이프케어산업, 국방산업 등 전략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금산군은 인삼관련산업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과 연계토록 파생산업을 계획하였고, 기존의 의료, 관광, 휴양기능을 복합하여서 광역 클러스터를 계획하였다. 부여군은 바이오 소재 국산화 허브단지 등을 계획하였고, 청양군은 일반산업단지와 과학기술 기반 전략기업 유치와 의약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였다.

공통적인 전략산업은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으로 헬스케어, 향노화, 뷰티, 식품등의 산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산업 구체화가 요구된다.

〈표 35〉 시군별 경제·산업 분야 주요 사업계획

구분	농림업(향토산업)	사회적 경제	제조업·첨단산업	귀농귀촌,인적자원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푸드복합타운육성 •거점산지유통센터(A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경제허브(hub)센터 •지역공동체주도형공유경제3R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바이오산업육성 및연구기관유치 •남공주일반산업단지조성 •상생일반산업단지 •신공주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귀향상생센터조성 •폐교를활용한농촌휴양마을
논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센터 •스마트농업복합단지 •직거래온라인시스템 확충 •문화·관광형전달식품 클러스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밀착형공유사업(물건·지식·공간)의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스케어,향노화,뷰티수요급증 대응한 대도시권역 라이프케어산업기반확충 •폴리텍대학,건양대학교(병원)등R&D,교육·훈련,벤처창업등이가능한인프라를활용한융·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창직·창업등다양한활동을보장하기위한청년플랫폼 •복지,주거,일자리,문화·여가,참여·권리등제영역별청년정책시행

구분	농림업(향토산업)	사회적 경제	제조업·첨단산업	귀농귀촌,인적자원
			<p>컴플렉스 조성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국가산업단지외조기조성과산단내입주기업지원시설을집적화 •전력지원체계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R&D, 교육·훈련,벤처창업등다양한지원기능(시설)및관련국방기업유치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논산등과연계하여국방R&D개발,인력양성등을추진하기위한경제공동체네트워크구축및운영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산업을기반으로건강과 라이프케어 중심의용·복합산업기반을구축하고다양한체험,건강과힐링을테마로한6차산업육성 •세계중요농업유산홍보관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다양한인삼관련산업발굴및육성 •인삼약초산업과한방·의료, 관광·휴양기능을보유한라이프케어용·복합광역클러스터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약초관광기반구축을위한중간조직구성,역량강화등전문성확보 •산림관광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등산림과관련한다양한직업군을육성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기술을활용한스마트팜컴플렉스지원센터 •무인자동화농업생산단지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유기농6차산업지원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산바이오소재공급및기술지원을위한바이오소재국산화허브단지조성및바이오소재허브(플랫폼)구축 •바이오산업특화형일반산업단지조성및첨단소재기업유치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굿래충남창농사관학교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단지조성을통해21세기에맞는진화형농촌마조성 •지역관광자원연계및체험,힐링관광활성화및지역농특산물의과학적생산및유통지원을아우르는특화된타운조성 •목재를둘러싼산업생태계구축을통한산업선도산림 경영단지 및목재산업 클러스터 •정원산업육성과관광인프라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희시설기반한교육·인큐베이팅·제조·판매의플랫폼구축 •사회적경제혁신타운,청양군 푸드플랜 종합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일반산업단지조성 •친환경차부품,바이오의약, 고부가정밀화학, 산업용섬유, 첨단소재, 물류등청양이경쟁력유위업종유치 •과학기술기반의자율주행및드론기술관련전략기업유치(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소프트웨어개발) •고령화로확산되는의약바이오산업시장선점을위해생명공학연구기관유치및연구생태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들이참여한공동체(네트워크)를통한지역사회문제해결·문화복지서비스제공인재등발굴 •소외된우리들의오래된미래인부모세대를위한복지전달체계구축(지역사회돌봄통합선도사업)

자료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주요계획 정리

(3) 관광 및 문화예술·교류·협력

관광 및 문화예술과 관련 분야는 남부권에서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각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주요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공주시는 금강변과 백제를 주제로 설정하였고, 논산시는 국방산업, 유교문화, 근대 역사를, 계룡시는 국방을, 금산군은 자연경관생태를, 부여군은 백제를, 청양군은 관광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없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여군이 백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영역을 확장하여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을 설립하고, 고대 삼국축제를 개최를 계획하였다.

〈표 36〉 시군별 관광, 문화예술, 교류·협력 분야 주요 사업계획

구분	관광	문화예술·교류·협력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장리세계구석기테마유적공원조성 •공산성복원 •금강수변공간역사공원조성 •공주목, 충청감영복원 •백제문화스타케이전조성 •금강변공나루역사탐험선운영 •자전거천리순환길 •금강과계룡산일원의유니버설스마트전망대 •마이크로모빌리티서비스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의문화예술 복원 •중고제판소리를복원 •공주문화공연장(MR오픈공연장) •제민천뮤지엄 •공주봉황예술마당 •금강내고마수상예술공원 •계룡산철화문청사기도요지 복합·단지화
논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영문화와한류스타를활용한밀리터리(military)한류콘텐트개발및연관산업(관광및엔터테인먼트)간 융·복합 전문화생태계조성 •밀리터리문화산업과국방관련기업도시가용·복합된국방문화도시조성 •탐정호내간휴양·상업시설및공공의기반시설조성·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경읍의근대역사·문화자원의체계적인정비와복원 •유교문화재생사업및충청유교문화원광역관광개발 •노성산성,개태사지등문화재보존·복원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안보관광클러스터 •향적산 산림복지단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계절분산형신(新)관광지개발 •생태·자연관광자원을활용한생태탐방로 •금강친환경강변길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박람회개최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제역사성과미래가치를담는‘스마트100JE(백제)타운’조성 •부여군~공주시간의스마트헤리티지벨트조성 •국내최대의청동기시대중심지인‘송국리유적’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추가등재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정비및기반시설조성 •백마강일대를 정비(누정선유길조성,누정정비,시화문화관및테마공원조성등) •고대백제수도를느낄수있는경관사업(한옥풍건축물,백제문양의담벼락등)및문화유산기반의견고싶은길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해상실크로드복원(탐험선운행,나루터개선,금강-동아시아연결해상벨트조성등)기반조성(금강권 5개도시간연계협력) •동아시아역사도서관,컨퍼런스홀,백제학연구소,튜디오등‘국립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을건립 •고천문역사박물관을건립 •고대삼국축제(엑스포)개최 •지역주민과국내·외관광객이함께하는문화예술축제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특산물(구기자및고추)브랜드를 뛰어넘는 관광브랜드 개발 •칠갑산 천장호출렁다리등에머물러있는청양군대표관광자원의개발과추가관광상품개발추진 •세종과 대전,천안·아산등충청권의도시민으로하며,맞춤형 관광상품개발추진 	

자료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주요계획 정리

3) 부문별 사업비

충남에는 130.6조원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중에 남부권에는 25%인 32조 7,148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교통 분야이며, 충남 대비 비중에서 남부권이 높은 분야는 역사문화자원 91.3%, 농산업 66.8%, 문화관광 43.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반대로 산업경제 분야는 2.8%로 매우 낮다.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32,788억원을 계획하였고, 논산시 76,087억원, 계룡시 830억원, 금산군 131,368억원, 부여군 82,070억원, 청양군 4,003억원을 계획하였다.

〈표 37〉 남부권 부문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시군	합계	도시,거점개발	교통	산업경제	농산업	문화관광	역사문화 자원
충남	130,623,400	2,424,805	102,159,245	20,636,798	792,609	3,613,732	996,211
부문별 비중		1.9	78.2	15.8	0.6	2.8	0.8
남부권	32,714,876	994,173	28,139,028	586,122	529,077	1,557,131	909,345
부문별 비중		3.0	86.0	1.8	1.6	4.8	2.8
충남 대비 비중	25.0	41.0	27.5	2.8	66.8	43.1	91.3
공주시	3,278,852	562,381	2,438,500	21,700	15,700	181,571	59,000
논산시	7,608,780	60,000	6,253,600	351,500	16,750	871,560	55,370
계룡시	83,034	5,000	29,534	-	-	48,500	-
금산군	13,136,800	-	13,136,800	-	-	-	-
부여군	8,207,088	350,092	6,280,594	22,600	463,227	295,600	794,975
청양군	400,322	16,700	-	190,322	33,400	159,900	-

주1) 각부문별 합은 다음과 같음

- 도시,거점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정비, 스마트도시 등/ 교통: 도로교통, 대중교통, 철도, 항공, 항만, 정보인프라 등 / 산업경제: 산업기반,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유통 등/ 농산업: 농어촌경쟁력강화, 생산기반, 스마트팜 등/ 관광: 관광지개발, 문화관광, 생태공원

자료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주요계획 저자 정리

4.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1) 인구 전망

인구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공간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40년까지 향후 남부권의 장래 인구를 전망하였다. 인구추정방법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장래인구를 추정하였으며, 비요소적 방법에는 등차급수, 등비급수, 최소자승, 지수함수, 로지스틱 함수, 수정지수함수를 요소적 방법에는 생잔모형조성법, 코호트법을 적용하였으며, 적합도 검증은 MAPE(mean absolute percent error)를 활용하였다.

(1) 시군별 인구 전망

2021년 현재 남부권의 인구는 396천명인데, 2040년에는 45천명이 감소한 351천명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0.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일하게 증가하는 시군은 계룡시이다.

계룡시를 제외한 5개 시군의 연평균 증감률은 -1.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시군은 논산시로 -2.127%이고, 공주시가 -1.169%로 대전시의 영향을 받는 곳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38〉 남부권 인구 전망

(단위 :인, %)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40	증감량 (21-40)	연평균증감률 (21-40)
남부권	396,781	403,749	385,051	367,601	351,352	-45,429	-0.638
5개 시군	363,450	354,409	334,612	316,049	298,588	-64,862	-1.029
공주시	103,145	99,261	93,611	88,044	82,486	-20,659	-1.169
논산시	114,483	109,011	96,535	84,907	76,093	-38,390	-2.127
계룡시	33,331	49,340	50,439	51,552	52,764	19,433	2.447
금산군	50,477	51,811	51,383	51,023	49,647	-830	-0.087
부여군	63,774	62,765	61,640	60,648	59,734	-4,040	-0.344
청양군	31,571	31,561	31,443	31,427	30,628	-943	-0.159

주) 5개 시군은 계룡시를 제외한 수치임

(2) 읍면동별 인구 전망

남부권의 읍면동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읍면부는 -1.0% 감소하여 -48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읍부는 -0.6% 감소하여 -8,330인이 감소하고, 면부는 -1.2% 감소하여 -40천명이 감소가 전망되며, 동부는 0.13 증가하여 3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동지역은 증가하고 감소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면지역이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 계룡시를 제외하면 이러한 양상은 확연하게 뚜렷해진다. 계룡시를 제외하면 읍면부는 -1.57% 감소하고, 읍부는 0.57%, 면부는 -2.1% 감소한다.

현재 읍면부에 거주하는 인구는 70%에 육박하지만 향후에는 65.2%로 감소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농통합시인 공주시는 동부에 57.9%가 거주하지만 향후에는 75%가 거주하고, 논산시는 65.5%가 거주하게 되어 대부분의 주민이 동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은 읍부에 51.5%, 부여군은 읍부에 31.89%, 청양군은 읍부에 43.09%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지역의 인구 감소세가 매우 심각한데, 인구 3천명 이하의 면지역으로는 공주시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사곡면, 신평면으로 우성면을 제외한 모든 면이 해당되며, 인구 1천명으로 전망되는 면은 사곡면이다.

논산시는 취암동이 거대해 지면서, 인구 3천명 이하인 면은 양촌면을 제외한 강경읍, 상월면, 연산면이고, 인구 1천명 이하인 면은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부석면, 벌곡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으로 매우 심각하다.

계룡시의 모든 읍면동은 인구 1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은 금산읍이 주변 면지역을 빨아들이며, 추부면이 6천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금산군 면부는 모두 1천명대에서 2천명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여군은 부여읍, 규암면이 1만 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3천 명대를 유지하는 면은 은산면이 유일하며, 양화면은 1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군은 청양읍의 인구는 13천명으로 증가하지만, 정산면이 인구 3천명대를 유지하고, 나머지 면은 모두 3천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제1계층에 있는 읍면동은 인구가 증가하고, 2계층에 있는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한다. 특히, 전형적인 농산업 지역이거나

산악지역은 향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인구 유출이 진행된 지역보다는 논산시와 같이 본격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의 감소세가 뚜렷히 나타난다.

〈표 39〉 남부권 읍면동별 인구 전망

(단위 : 인 %)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40	비중 (21)	비중 (40)	증감량 (21-40)	연평균 증감률 (21-40)
남부권	합계	396,781	403,749	385,051	367,601	351,352		-45,429	-0.638
	읍면부	277,509	280,494	261,914	245,030	229,067	69.94	-48,442	-1.005
	읍부	80,737	82,221	79,237	76,145	72,407	20.35	-8,330	-0.571
	면부	196,772	198,273	182,677	168,885	156,660	49.59	-40,112	-1.193
	동부	119,272	123,255	123,137	122,571	122,285	30.06	3,013	0.131
5개시군	합계	363,450	354,409	334,612	316,049	298,588		-64,862	-1.029
	읍면부	252,751	241,195	221,740	203,970	187,041	69.54	-65,710	-1.572
	읍부	80,737	82,221	79,237	76,145	72,407	22.21	-8,330	-0.571
	면부	172,014	158,974	142,503	127,825	114,634	47.33	-57,380	-2.113
	동부	110,699	113,214	112,872	112,079	111,547	30.46	848	0.040
공주시	계	103,145	99,261	93,611	88,044	82,486		-20,659	-1.169
	읍면부	43,382	38,742	32,541	26,429	20,801	42.06	-22,581	-3.795
	읍부	7,259	6,557	5,507	4,452	3,473	7.04	-3,786	-3.806
	면부	36,123	32,185	27,034	21,977	17,328	35.02	-18,795	-3.793
	동부	59,763	60,519	61,070	61,615	61,685	57.94	1,922	0.167
논산시	계	114,483	109,011	96,535	84,907	76,093		-38,390	-2.127
	읍면부	63,547	56,316	44,733	34,443	26,231	55.51	-37,316	-4.550
	읍부	21,304	19,859	16,946	14,032	11,118	18.61	-10,186	-3.365
	면부	42,243	36,457	27,787	20,411	15,113	36.90	-27,130	-5.266
	동부	50,936	52,695	51,802	50,464	49,862	44.49	-1,074	-0.112
계룡시	계	33,331	49,340	50,439	51,552	52,764		19,433	2.447
	읍면부	24,758	39,299	40,174	41,060	42,026	74.28	17,268	2.824
	면부	24,758	39,299	40,174	41,060	42,026	74.28	17,268	2.824
	동부	8,573	10,041	10,265	10,492	10,738	25.72	2,165	1.192
	계	50,477	51,811	51,383	51,023	49,647		-830	-0.087
금산군	읍면부	50,477	51,811	51,383	51,023	49,647		-830	-0.087
	읍부	22,381	24,251	24,946	25,410	25,568	44.34	3,187	0.703
	면부	28,096	27,560	26,437	25,613	24,079	55.66	-4,017	-0.809
	계	63,774	62,765	61,640	60,648	59,734		-4,040	-0.344
	읍면부	63,774	62,765	61,640	60,648	59,734		-4,040	-0.344
부여군	읍부	19,575	19,908	19,587	19,304	19,051	30.69	-524	-0.143
	면부	44,199	42,857	42,053	41,344	40,683	69.31	-3,516	-0.435
	계	31,571	31,561	31,443	31,427	30,628		-943	-0.159
	읍면부	31,571	31,561	31,443	31,427	30,628		-943	-0.159
	읍부	10,218	11,646	12,251	12,947	13,197	32.37	2,979	1.356
청양군	면부	21,353	19,915	19,192	18,480	17,431	67.63	-3,922	-1.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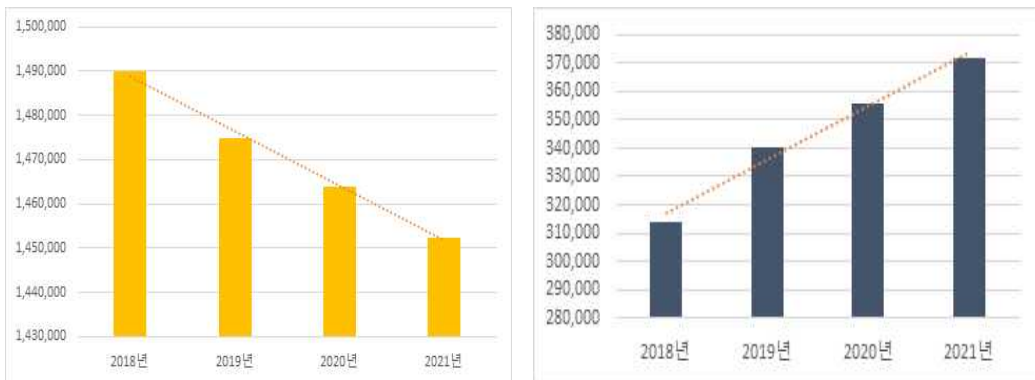
주) 5개 시군은 계룡시를 제외한 수치임

2) 대전시, 세종시 영향권 분석

(1) 개요

충청남도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영향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충청남도의 발전축을 역할을 하는 북부권(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도시,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예산군(내포신도시) 등이며, 반면에 발전 가능성이 낮은 남부권 시·군의 영향권을 행정구역과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영향권 분석은 2021년 12월 기준,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를 감안하여 2018년부터 2021년 12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²⁰⁾하였다.

아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흐름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인구감소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인구증가가 대비된다. 2018년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489,936명에서 2021년 1,452,251명으로 37,685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2018년 314,126명에서 2021년 371,895명으로 5,7769명 증가하였다.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18년~2021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21] 대전시, 세종시의 인구 변화

20)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영향력을 분석한 이유는 2014년 도농통합시의 출범, 2016년 부천시 3개구 행정구역 개편, 2018년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을 감안하여 기준년도를 2018년으로 선정함

분석 자료는 시간 흐름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2022)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여 충청남도의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대전시청과 세종시청을 중심으로 충청남도·충청북도 시·군 간 단순 직선거리(km)를 활용하였으며, 지역 간에 거리는 Arc GIS Point Distance를 활용하여 내포신도시 중심점(도청)으로부터 지역별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하였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제3조③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영향력을 시각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영향력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분석 방법은 라일리(W. J. Reilly)의 귀납적 소매인력법칙(Law of Retailgravitation)을 적용하였다. 라일리의 분할점 방정식(Breaking-point Equation)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원용해, A, B도시의 질량은 인구(P_a , P_b), 거리를 D 로 해 $F = G \frac{P_a P_b}{D^2}$ 으로 나타낸다. 즉, A, B도시 사이에 저차의 중간 도시가 입지할 경우 양 도시가 중간도시(C)에 흡인되는 소매 판매액의 비율은 두 도시의 인구비에 비례하고, 중간 도시까지 거리의 비의 제곱에 반비례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한주성, 2015 ; pp.490-491). 여기서 중간도시(C)의 인구를 P_c 로 하고, AC를 D_a , BC를 D_b (따라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영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식에 적용하면 (수식 1)과 같다.

A_d 는 영향권 범위(km), AB_d 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와 인근 시·군과의 거리(km), B_p 는 인근 시·군의 인구규모(명), A_p 는 연도별 주민등록인구(명)

$$A_d = \frac{AB_d}{1 + \sqrt{\frac{B_p}{A_p}}} \dots (\text{수식 1})$$

(2) 대전광역시 영향력 분석 결과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에 따른 영향력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1년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 1,489,936명 경우에 충청남도에서 계룡시가 12.77km이고, 태안군이 88.32km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에서 청주시 서원구가 16.39km이고, 단양군이 100.59km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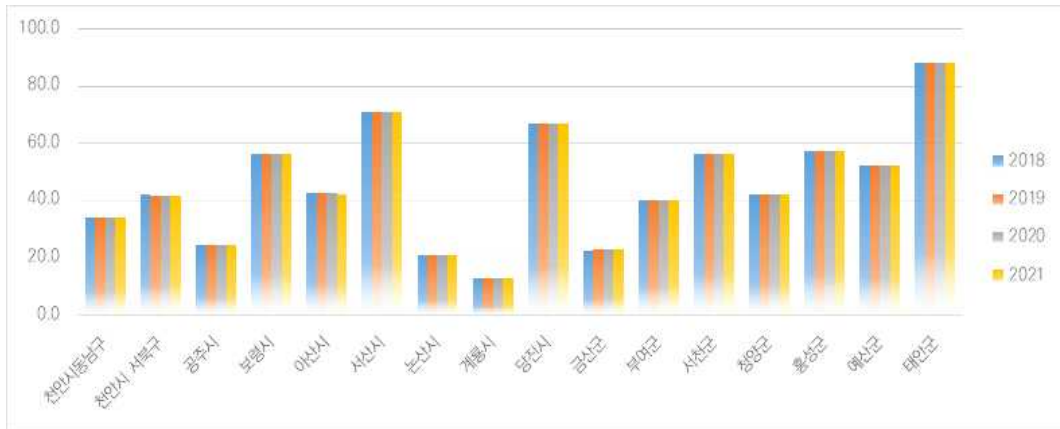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35.3km이고, 고창군이 102.0km로 분석되었다.

〈표 40〉 대전광역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영향력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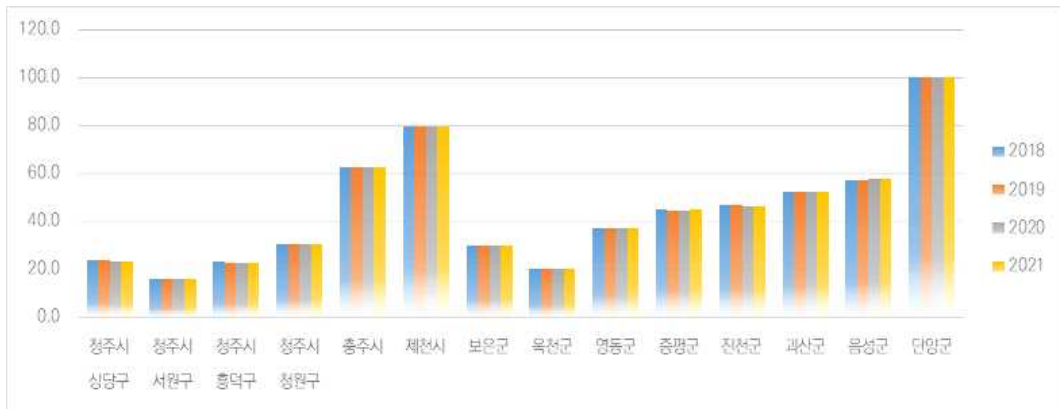
(단위 : km. 인)

구분		대전광역시 영향력(km)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34.02	33.94	33.93	33.94	34.0
	천안시 서북구	41.96	41.80	41.60	41.50	41.7
	공주시	24.62	24.62	24.65	24.66	24.6
	보령시	56.31	56.30	56.31	56.37	56.3
	아산시	42.71	42.61	42.52	42.29	42.5
	서산시	71.11	70.99	70.87	70.75	70.9
	논산시	21.01	21.02	21.04	21.07	21.0
	계룡시	12.78	12.79	12.79	12.77	12.8
	당진시	67.15	67.10	67.08	66.97	67.1
	금산군	22.72	22.73	22.75	22.77	22.7
	부여군	40.17	40.21	40.25	40.31	40.2
	서천군	56.16	56.21	56.25	56.32	56.2
	청양군	42.26	42.29	42.33	42.35	42.3
	홍성군	57.30	57.28	57.25	57.25	57.3
	예산군	52.30	52.31	52.34	52.38	52.3
	태안군	88.31	88.29	88.30	88.32	88.3
충청 북도	청주시 상당구	24.00	23.94	23.72	23.63	23.8
	청주시 서원구	16.27	16.31	16.39	16.39	16.3
	청주시 흥덕구	23.30	23.16	23.09	23.04	23.1
	청주시 청원구	30.91	30.90	30.90	30.87	30.9
	충주시	63.04	62.95	62.90	62.87	62.9
	제천시	79.70	79.66	79.70	79.73	79.7
	보은군	30.05	30.07	30.09	30.11	30.1
	옥천군	20.77	20.77	20.77	20.77	20.8
	영동군	37.22	37.24	37.30	37.38	37.3
	증평군	45.09	45.05	45.08	45.09	45.1
	진천군	47.16	46.96	46.78	46.67	46.9
	괴산군	52.69	52.65	52.60	52.69	52.7
	음성군	57.75	57.74	57.81	57.82	57.8
	단양군	100.34	100.38	100.46	100.59	100.4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44.8	44.9	44.8	44.8	44.8
	전주시 덕진구	41.2	40.9	40.8	40.7	40.9
	군산시	51.8	51.8	51.8	51.8	51.8
	익산시	35.2	35.2	35.3	35.3	35.3
	정읍시	73.4	73.4	73.5	73.6	73.5
	남원시	83.4	83.4	83.4	83.5	83.4
	김제시	60.3	60.3	60.4	60.4	60.4
	완주군	40.1	40.2	40.2	40.2	40.2
	진안군	51.2	51.2	51.2	51.3	51.2
	무주군	48.1	48.1	48.2	48.2	48.1
	장수군	69.5	69.6	69.6	69.7	69.6
	임실군	74.0	74.1	74.3	74.4	74.2
	순창군	92.2	92.3	92.4	92.5	92.3
	고창군	101.8	102.0	102.1	102.2	102.0
	부안군	84.0	84.1	84.2	84.3	84.1
세종특별자치시		17.75	17.50	17.35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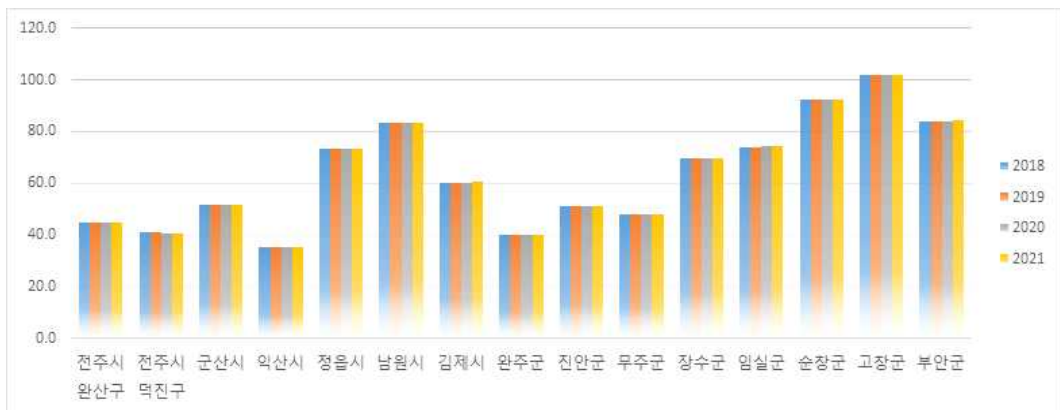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18년~2021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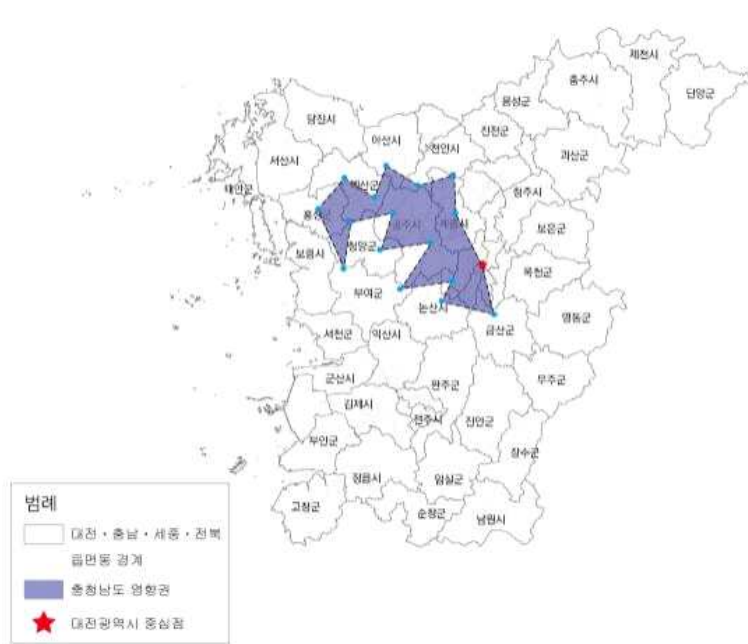
[그림 22]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1(충청남도)



[그림 23]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2(충청북도)



[그림 24]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 결과 3(전라북도)



[그림 25]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그림 26]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그림 27] 대전광역시 영향권 분석2(전라북도)

(2) 세종특별자치시 영향력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영향력은 충청남도 시·군·구별 연평균 영향권은 인접도시인 공주시 (12.33km)이고 ,태안군 65.72km로 분석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연평균 영향권이 유성구 6.04km로 가장 가깝고, 동구(13.30km)와 중구 (13.47km)로 분석되었다.

충청북도 시·군·구별 연평균 영향권은 청주시 서원구가 8.69km이며, 단양군 87.85km로 분석되었다.

전라북도 시·군·구별 연평균 영향권은 익산시가 30.05km이며, 고창군 92.54km로 분석되었다.

〈표 41〉 세종특별자치시 연령별 주민등록인구를 고려한 영향력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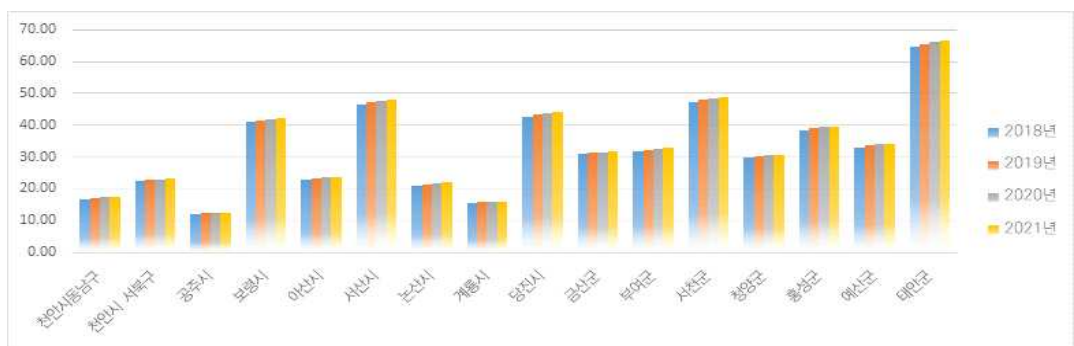
(단위 : km, 인)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영향력(km)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충청 남도	천안시 동남구	16.84	17.14	17.33	17.55	17.21
	천안시 서북구	22.34	22.74	22.88	23.11	22.77
	공주시	12.08	12.28	12.42	12.55	12.33
	보령시	40.91	41.57	41.96	42.41	41.71
	아산시	22.83	23.26	23.48	23.58	23.29
	서산시	46.51	47.28	47.66	48.03	47.37
	논산시	21.11	21.48	21.73	21.98	21.57
	계룡시	15.64	15.84	15.94	16.01	15.86
	당진시	42.59	43.36	43.79	44.14	43.47
	금산군	30.82	31.26	31.52	31.79	31.35
	부여군	31.82	32.32	32.64	32.97	32.44
	서천군	47.28	47.98	48.39	48.83	48.12
	청양군	29.87	30.22	30.46	30.67	30.31
	홍성군	38.42	39.02	39.34	39.70	39.12
	예산군	33.13	33.64	33.96	34.28	33.75
	태안군	64.67	65.55	66.06	66.60	65.72
대전시	동구	12.97	13.24	13.42	13.56	13.30
	중구	13.10	13.40	13.60	13.80	13.47
	서구	10.14	10.38	10.53	10.68	10.43
	유성구	5.90	6.02	6.08	6.15	6.04
	대덕구	8.80	9.00	9.09	9.19	9.02
충청 북도	청주시 상당구	16.71	16.97	16.90	16.99	16.89
	청주시 서원구	8.43	8.64	8.80	8.90	8.69
	청주시 흥덕구	10.45	10.58	10.65	10.75	10.61
	청주시 청원구	17.99	18.33	18.54	18.71	18.39
	충주시	44.18	44.97	45.43	45.91	45.12
	제천시	60.12	61.15	61.80	62.44	61.38
	보은군	29.72	30.09	30.31	30.52	30.16
	옥천군	26.63	26.97	27.17	27.37	27.03
	영동군	42.24	42.83	43.24	43.70	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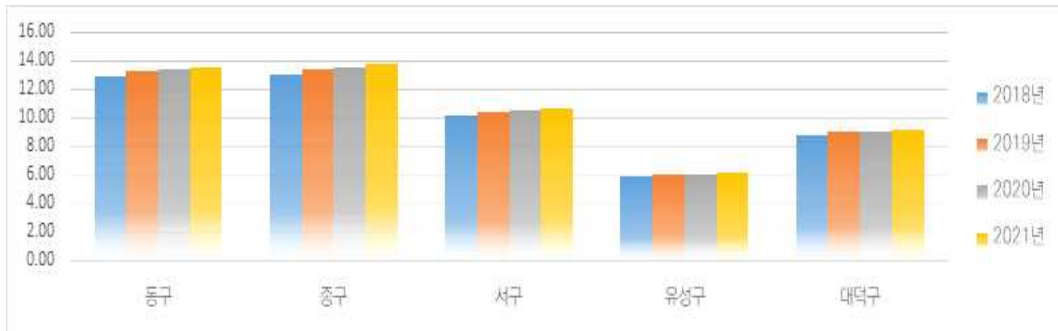
(단위 : km, 인)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영향력(km)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평군	32.85	33.18	33.42	33.64	33.27
	진천군	30.31	30.53	30.59	30.72	30.54
	괴산군	42.89	43.34	43.55	43.96	43.43
	음성군	40.09	40.72	41.17	41.54	40.88
	단양군	86.61	87.60	88.24	88.94	87.85
전라 북도	전주시 완산구	38.03	38.99	39.39	39.94	39.09
	전주시 덕진구	35.62	36.07	36.39	36.68	36.19
	군산시	40.14	41.01	41.52	42.03	41.18
	익산시	29.17	29.90	30.35	30.77	30.05
	정읍시	64.64	65.78	66.53	67.27	66.05
	남원시	78.07	79.31	80.01	80.77	79.54
	김제시	54.35	55.25	55.81	56.38	55.45
	완주군	40.45	41.19	41.55	41.89	41.27
	진안군	56.96	57.54	57.88	58.24	57.65
	무주군	55.52	56.07	56.40	56.72	56.18
	장수군	73.98	74.87	75.32	75.78	74.99
	임실군	74.79	75.83	76.68	77.22	76.13
	순창군	90.00	91.13	91.78	92.57	91.37
	고창군	90.84	92.29	93.10	93.95	92.54
	부안군	75.01	76.12	76.82	77.57	7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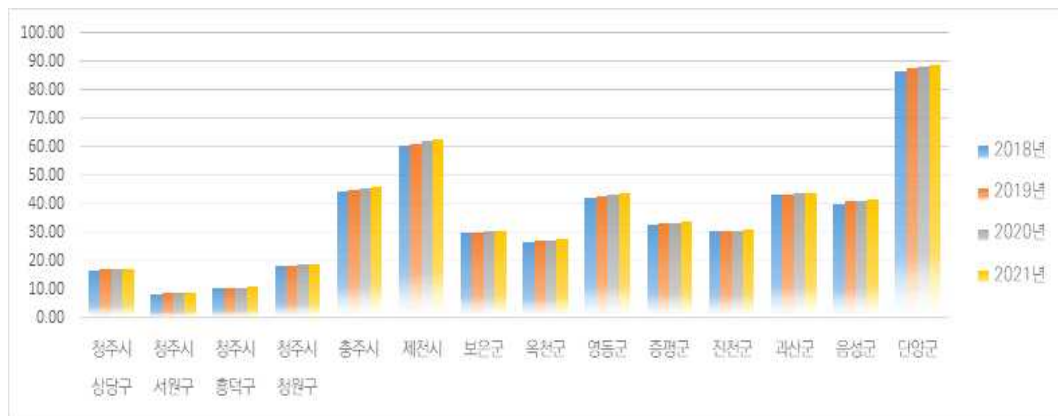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2022), 「2018년~2021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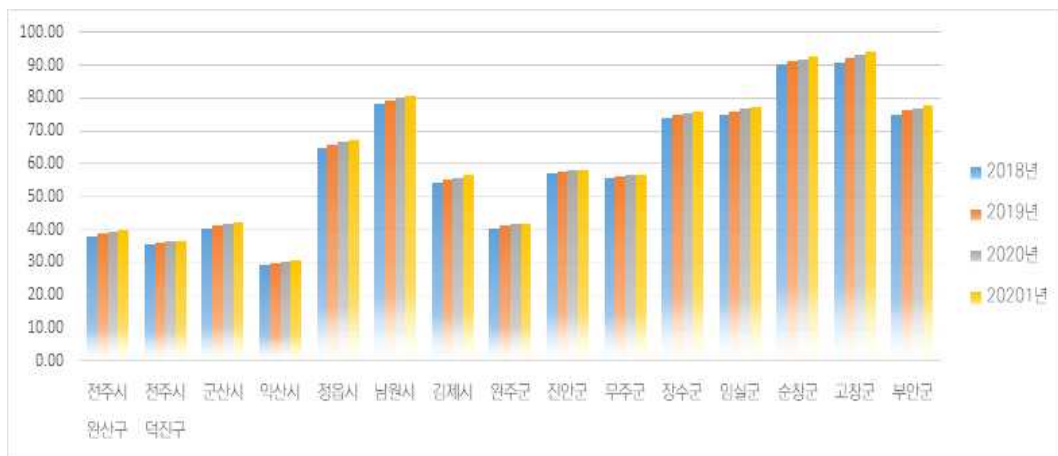
[그림 28]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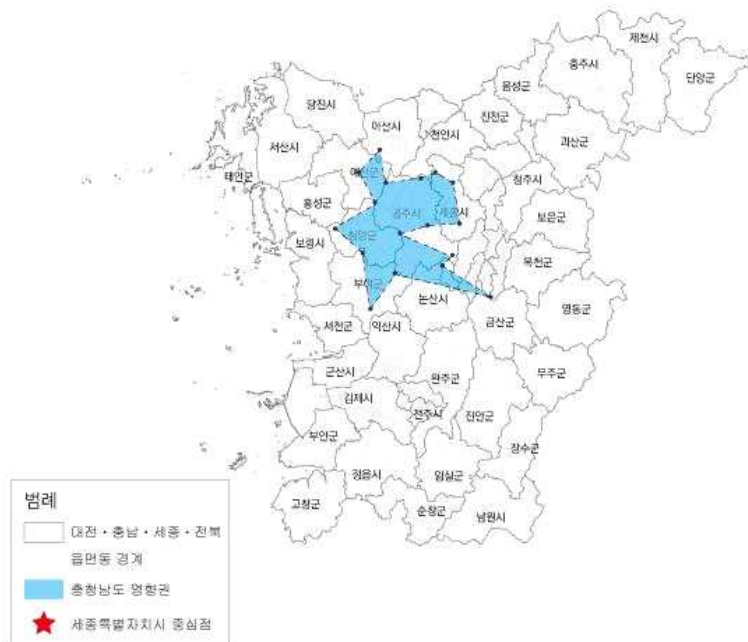
[그림 29]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2(대전광역시)



[그림 30]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그림 31]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4(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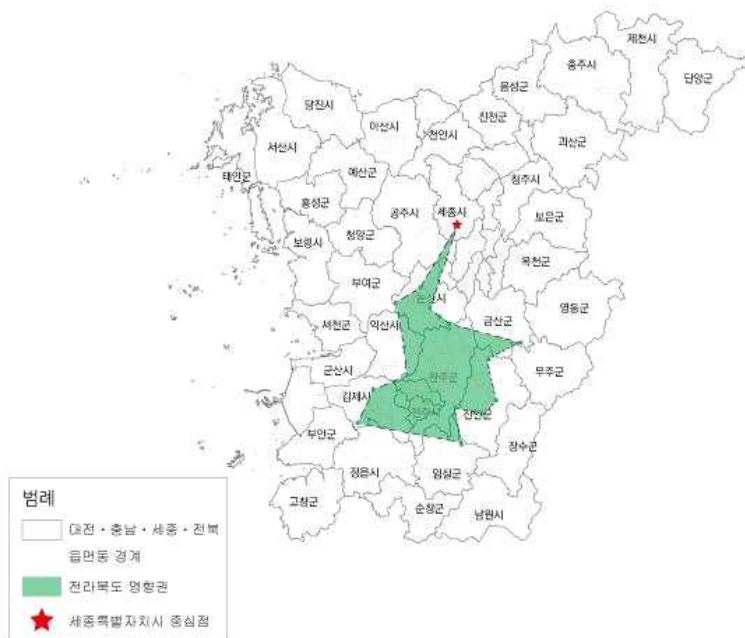
[그림 32]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1(충청남도)



[그림 33]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2(대전광역시)



[그림 34]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3(충청북도)



[그림 35] 세종특별자치시 영향권 분석4(전라북도)

(1) 시·군간 통근·통학 통행량

2020년의 남부권 6개 지역에서 타 지역(천안권, 홍성·예산권, 서산권, 세종시, 대전시 등)의 통근·통학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공주시는 세종시, 대전시 지역과 연계성이 높고, 논산시는 대전시, 홍성·예산권 지역과 연계성이 높다. 계룡시와 금산군은 대전시와 연계성이 매우 높고, 부여군과 청양군은 홍성·예산권이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 남부권 지역내, 지역간 통근·통학 통행량(2020년 기준)

자료: KTDB, 대전세종충청권 PA 목적 통행량(2020년) 자료임. 2020년 자료는 KTDB에서 배포된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남부권 6개 지역의 통근·통학 통행량을 기반으로 2040년의 시·군간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남부권으로 설정된 6개 지역 내에서 통근·통학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논산시 ↔ 부여군, 논산시 ↔ 계룡시, 공주시 ↔ 청양군 등으로 나타난다. 2040년에도 논산시와 공주시는 남부권 6개 지역 중에 통근·통학의 연계성 측면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남부권 외 지역인 대전시와 세종시로 통근·통학 통행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표 43〉 남부권 지역내, 지역간 통근·통학 통행량(204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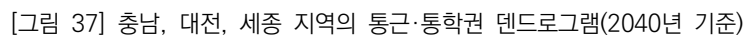
구분		남부권						천안권	홍성·예산권	서산권	세종시	대전시	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남부권	공주시	-	404	300	1	34	1,544	537	2,337	436	17,563	7,197	30,353
	논산시	316	-	1,767	127	4,080	4	67	1,001	181	2,358	11,842	21,743
	계룡시	285	1,739	-	52	6	14	30	27	3	1,306	11,089	14,551
	금산군	10	218	102	-	1	25	80	68	58	207	10,781	11,550
	부여군	41	3,043	7	-	-	347	249	1,458	361	305	1,459	7,270
	청양군	1,230	9	25	26	265	-	514	2,318	1,383	191	641	6,602
	천안권	774	20	43	70	175	770						
홍성·예산권	868	1,333	53	66	802	2,426							
서산권	242	177	4	24	339	1,211							
세종시	17,857	2,308	1,210	237	295	450							
대전시	7,604	13,429	15,879	7,908	1,373	844							
계		29,227	22,680	19,390	8,511	7,370	7,635						

(단위: 통행/일)

주1) 충남 권역은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홍성-예산권(홍성군, 예산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권(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등으로 구분함
주2) 통근·통학 통행량은 PA기반 통행목적 중 '가정기반출퇴근', '가정기반등하교', '가정기반하원' 통행을 합산함
주3) 시·군 내부통행량은 제외
주4) 통근·통학 통행량·거건변화는 2020년(A)과 2040년(B)의 차이(B-A)로 산정함
자료: KTDB, 대전세종충청권 PA 목적 통행량(2020년, 2040년) 자료임. 2020년 자료는 KTDB에서 배포된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TDB(국가교통DB) 센터에서 배포하는 대전·세종·충청권 P/A 기반 목적 통행량이며, 통행목적 중 ‘가정기반 출·퇴근’, ‘가정기반 등·하교’, ‘가정기반 학원’ 통행을 합산한 자료이다. 군집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간 거리(dist)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시·군간 통행량이 많을수록 연계성이 높아 계층화된 군집으로 할당되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근·통학 통행량이 거리(dist)라는 지표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 즉, 통근·통학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거리(dist)는 상대적으로 짧아지도록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간 통근·통학 통행량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하여 거리(dist) 지표로 변환시켰다. 통근·통학 통행량이 가장 많은 값은 거리가 0으로 할당되고, 가장 적은 값은 거리가 1로 할당되도록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통근·통학 통행량 거리(dist)를 0과 1사이로 표준화하고, 계층적 군집분석과 클러스터 덴드로그램을 표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시, 세종시, 천안권(천안시, 아산시) 등의 통근·통학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남부권 지역은 대부분 이러한 지역과 통근·통학 연계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계층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5. 소결

첫째, 충청남도내 15개 시군간의 지역발전 수준 변화이다.

현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17개 지표별로 산정하였는데,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의 격차는 확대 중이다.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등 대전시에 연접한 시군의 순위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부권 시군의 GRDP분석이다.

남부권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은 제조업, 농림어업, 행정업이며, 제조업은 발전 시군의 60% 이상에 비해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어업은 20%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경제규모 축소 중이다.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 전통산업 및 근대기에 확장되었던 산업들이 쇠퇴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공과 관련한 행정관련, 공공이 서비스 투입의 주체 및 보조하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 방향이 공공행정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소득 및 역내외 소비 비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 산업 변화는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 산업은 영세화 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는 업종은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며, 규모화가 진행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업이다.

소상공인의 1인당 평균소득은 2,802천원이며, 개인소득자의 평균소득이 3,720천원으로 나타났다. 남부권 소비의 역외 비중은 20%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높은 시군은 계룡시 32.%, 금산군 27.0%이며, 대전시와의 통근통행이 높은 지역일수록 역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역내로 유입된 소비 비중은 74%로 충남 37.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권에서는 공주시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대전시, 세종시 간의 접근성 정도에 따라 역외 유출 비중도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타 지역내의 역내 유입 소비도 높게 증가한다.

넷째, 남부권의 주요 계획이다.

목표연도 2020년, 재40년의 변화에 있어서 남부권의 미래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다만, 2040년 대비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표현상의 가감은 있을 정도이며, 각 시군별로는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상을 반영하고 있다. 공주시는 역사 문화도시, 논산시는 국방지원 역사문화도시, 계룡시는 스마트 자족도시, 금산군은 인삼약초 특화도시, 부여군은 동아시아 문화수도, 청양군은 행복공동체 휴양도시이다.

추진전략 및 사업에서 남부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관광분야와 산업분야이다. 이 양대분야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보다 세분화되고, 목표지향적이며, 구체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와의 관계상에 있어서 도시체계, 교통, 관광이 복합적으로 설정하였다. 논산시는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관광을 설정하였으며, 산업분야에서 국방혁신클러스터, 혁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라이프케어산업을 새로운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계룡시는 군과 관련된 정주 인프라 등은 퇴색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금산군은 산악자원형의 관광과 인삼약초에 기반한 산업으로 크게 나뉘는데, 관광은 특화자원 기반 테마형 관광거점 육성과 인삼약초산업의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설정하였다. 부여군은 백제의 고도로서의 전통, 문화예술 기반 관광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백제문화도시 조성을 방향을 잡고 있으며, 농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바이오 소재산업 등을 새로운 산업발전 원동력으로 설정하였다. 청양군은 칠갑산, 지천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관광활성화는 다소 주춤한 형태이며, 산업은 축산바이오 클러스터, 4차산업 기반 첨단산업, 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까지 다양한 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이다.

남부권의 인구는 396천명에서 2040년까지 351천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일하게 증가하는 시군은 계룡시이다. 가장 감소율이 높은 시군은 논산시로 -2.127%이고, 공주시가 -1.169%로 전망된다.

남부권의 읍면동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읍면부는 연평균 -1.0% 감소하고, 읍부는 연평균 -0.6% 감소하며, 면부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부는 연평균 +0.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계룡시를 제외하면 읍면부는 연평균 -1.57% 감소하고,

읍부는 연평균 0.57%, 면부는 연평균 -2.1%감소한다.

향후 인구는 동부와 시군청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공주시 75%, 논산시 65.5%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지역은 금산군 읍부에 51.5%, 부여군은 읍부에 31.89%, 청양군 43.09%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면지역이며, 인구 3천명 이하의 면지역이 다수이며, 인구 1천명 이하인 면도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전망은 제1계층에 있는 읍면동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보합하고, 2계층에 있는 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며, 특히, 전형적인 농산업 지역이거나 산악지역은 향후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통근통학에 공간구조는 논산시↔부여군, 논산시↔계룡시, 공주시↔청양군 등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선형형태를 띄고 있고, 공주시, 논산시가 남부권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주시는 세종시, 대전시 지역과 연계성이 높고,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대전시와 연계성이 매우 높고, 부여군, 청양군은 홍성·예산군이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는 공주시는 대전시와 연계성이 낮아지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아지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은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과 청양군은 세종시와 연계성이 약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하면, 공주시는 세종시와 통근·통학 연계성이 높고 대전시와는 별개로 세종시와 군집을 이루게 되고, 논산시와 부여군은 2020년에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2040년에도 계층적 위계가 유사한 형태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와 금산군은 2020년에 대전·세종 군집에 연계되었고, 2040년에는 대전·세종·천안권 군집에 연계된 형태이다. 청양군은 2020년과 2040년 사이에 계층적 위계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충청남도 남부권 관련 인식 조사

1. 전문가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남부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에 대해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충청남도가 가야하는 미래 방향성을 묻고 그에 대해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인식조사와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미래 트렌드를 도출하고 충청남도 남부권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 조사의 대상 및 방향

조사 대상은 전국 혁신도시·신도시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던 학계·연구기관 및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2.11.21.~11.30.(10일간)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4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근무 분야,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 분야별 우선 분야, 잠재가능성 등 각 변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① 현재 대전시의 도시화 단계

‘현재의 대전시는 도시화 단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단계(상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성장 둔화, 주변지역 인구 급증’이라는 응답이 5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3.3%인 ‘5단계(절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감소, 주변지역 인구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 45〉 현재 대전시 도시화 단계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1단계(도시화 초기) : 중심도시, 주변지역 인구 증가, 도시화	
② 2단계(절대적 집중기) : 중심도시 인구 급증, 주변지역 인구 감소	12.5
③ 3단계(상대적 집중기) : 중심도시 인구 급증, 주변지역 인구 증가	
④ 4단계(상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성장 둔화, 주변지역 인구 급증	54.2
⑤ 5단계(절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감소, 주변지역 인구 증가	33.3

②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따른 향후 공간구조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에 따라서 향후 공간구조는 어떻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문항은 세부적으로 4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충남 남부권의 도시발달 정도는 경쟁적 배분체제로 인한 남부권 쇠퇴’에 대해 ‘중기’라는 응답이 43.5%로 높게 나타났다. ‘식량 및 에너지 생산지역의 전략’에 대해 ‘단기’라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닌 곳은 쇠퇴’에 대해 ‘중기’라는 응답이 43.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능 집적지 등장’에 대한 응답은 ‘장기’, 6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6〉 향후 공간구조에 따른 도시발달

(단위 : %)

구분	충남 남부권	응답률		
		단기	중기	장기
메가도시권	경쟁적 배분체제로 인한 남부권 쇠퇴	39.1	43.5	17.4
자족적 고립	식량 및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략	43.5	34.8	21.7
분산적 집중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닌 곳은 쇠퇴	34.8	43.5	21.7
다중심 초연결	첨단 기능 집적지 등장	9.5	23.8	66.7

③ 자원 및 경제성장의 배분에 따른 인구 영향

‘자원 및 경제성장의 배분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도시권(충청권)’ 기준 ‘증가’ 응답이 8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인구10~50만 이하)’ ‘감소’에 대한 응답이 72.0%이며,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인구10만 이하)’는 ‘매우감소’, 72.0%로 나타났다.

〈표 47〉 자원 및 경제성장위 배분에 따른 인구 영향

(단위 : %)

구분	응답률				
	매우증가	증가	관계없음	감소	매우감소
대도시권(충청권)	4.0	84.0	4.0	8.0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인구10~50만 이하)		8.0	12.0	72.0	8.0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 (인구 10만 이하)		4.0	4.0	20.0	72.0

④ 사회경제 발전의 따른 인구 영향

‘사회경제 발전이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으로는 ‘대도시권(충청권)’ 기준 ‘증가’가 64.0%로 나타났으며,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인구10~50만 이하)’ 응답은 ‘감소’, 68.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인구10만 이하)’는 ‘매우감소’, 48.0%로 나타났다.

〈표 48〉 사회경제 발전의 따른 인구 영향

(단위 : %)

구분	응답률				
	매우증가	증가	관계없음	감소	매우감소
대도시권(충청권)	20.0	64.0	4.0	12.0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인구10~50만 이하)		8.0	24.0	68.0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 (인구 10만 이하)			8.0	44.0	48.0

⑤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

‘사회미래 도시 발전에 따라서 충남 남부권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은 세부적으로 18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질문하고 분석하였다.

‘1. 대도시권 중심의 일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적다’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 대도시권의 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제고’, ‘7. 첨단 인프라 및 도시공간 조성’은 ‘적다’가 각 52.0%로 나타났다.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영향에 있어 ‘크다’라는 응답이 높은 항목으로 ‘3. 녹색생산 중심의 내발적 발전 강화’ 80.0%, ‘4. 1차산업 및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 68.0%, ‘5.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안전서비스 중심의 생활권 재편’ 44.0%, ‘6.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64.0%, ‘8. 이중의(dual) 국토공간구조 형성’ 36.0%, ‘9. 인구, 일자리, 인프라 편중으로 지역격차 심화’ 60.0%, ‘10. 비대도시권 지역의 쇠퇴’ 48.0%, ‘11. 대도시 및 중심도시 이격지역의 인구감소로 관리 효율성 저하’ 56.2%, ‘12. 인구 분산으로 인한 대도시 및 중간도시 쇠퇴’ 43.5%, ‘1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64.0%, ‘16. 저이용, 미이용 공동화 국토공간의 관리 효율화로 행정구역 통합’ 64.0%, ‘17. 노후 주거지, 산업단지, 업무 및 상업지역, 노후 인프라 및 관광시설, 문화역사자원 등(고도화, 녹색화, 첨단화)’ 52.0%, ‘18. 인구희박지역의 기능 유지’ 64.0%로 나타났다.

‘크다’와 ‘적다’의 비율이 같게 나타난 문항은 ‘13. 인구 분산과 미래 인프라로 인한 기존 인프라의 효율 저하’ 각 32.0%, ‘15. 재도시화’ 각 32.0%로 나타났다.

〈표 49〉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인구 영향

구분	응답률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적다
1. 대도시권 중심의 일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4.0	24.0	24.0	16.0	32.0
2. 대도시권의 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제고	8.0	8.0	24.0	52.0	8.0
3. 녹색생산 중심의 내발적 발전 강화	8.0	80.0	4.0	8.0	
4. 1차산업 및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	16.0	68.0	12.0	4.0	
5.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안전 서비스 중심의 생활권 재편	32.0	44.0	16.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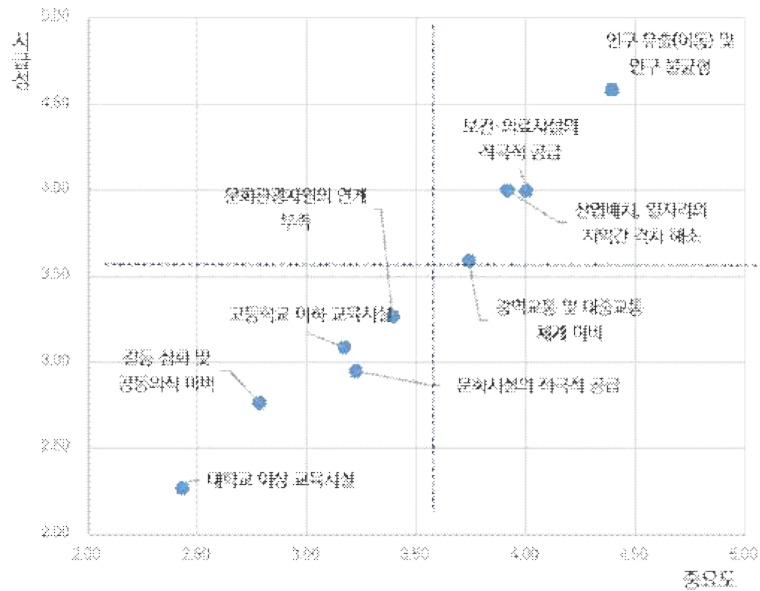
구분	응답률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적다
6.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4.0	64.0	20.0	12.0	
7. 첨단 인프라 및 도시공간 조성	4.0	12.0	24.0	52.0	8.0
8. 이중의(dual) 국토공간구조 형성		36.0	32.0	28.0	4.0
9. 인구, 일자리, 인프라 편중으로 지역격차 심화	16.0	60.0	12.0	12.0	
10. 비대도시권 지역의 쇠퇴		48.0	24.0	12.0	12.0
11. 대도시 및 중심도시 이격지역의 인구감소로 관리 효율성 저하	12.0	40.0	32.0	12.0	4.0
12. 인구 분산으로 인한 대도시 및 중간도시 쇠퇴	32.0	48.0	12.0	8.0	
13. 인구 분산과 미래인프라로 인한 기존 인프라의 효율 저하	4.0	32.0	24.0	32.0	8.0
1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12.0	64.0	4.0	20.0	
15. 재도시화	4.0	32.0	24.0	32.0	8.0
16. 저이용, 미이용 공동화 국토공간의 관리 효율화로 행정구역 통합	12.0	64.0	4.0	20.0	
17. 노후 주거지, 산업단지, 업무 및 상업지역, 노후 인프라 및 관광시설, 문화역사자원 등(고도화, 녹색화, 첨단화)	4.0	52.0	28.0	12.0	4.0
18. 인구희박지역의 기능 유지	16.0	64.0	12.0	8.0	

⑥ 충남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충남 남부권의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유지강화가 필요한 과제으로는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⑤ 보건·의료 시설의 적극적 공급’,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④ 광역교통 및 대중 교통 체계 미비’로 나타났다.

〈표 50〉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구분	중요도	시급성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4.39	4.59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3.91	4.00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3.39	3.27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3.74	3.59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4.00	4.00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3.22	2.95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3.17	3.09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2.43	2.27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2.78	2.77



[그림 38] 충남 남부권 만족도·중요도 IPA 분석(전문가)

⑦ 향후 삶의 여건 변화

‘충남 남부권이 향후 삶의 여건이 지금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서울·수도권’, ‘대전·세종·충남북(충청권)’, ‘충남 전체’는 삶의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응답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충남 남부권은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56.0%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 향후 삶의 여건 변화

(단위 : %)

구분	응답률				
	매우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변화 없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좋아질 것이다
서울 수도권		16.0	16.0	36.0	32.0
대전, 세종, 충남북(충청권)		8.0	16.0	76.0	
충남전체		28.0	16.0	52.0	4.0
충남 남부권	12.0	56.0	8.0	24.0	

⑧ 향후 남부권 미래 모습

‘향후 충남 남부권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의 응답이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 향후 남부권 미래 모습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28.6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71.4
④ 국제교류도시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⑨ 지역발전에 대한 우선적 분야

‘충남 남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광·휴양’에 대한 응답 비율이 23.1%이며, ‘도시발전·정비·재생’ 19.2%, ‘산업·경제’, ‘농산촌개발’ 각 15.4% 순위로 나타났다.

〈표 53〉 지역발전에 대한 우선적 분야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도시발전·정비·재생	19.2
② 산업·경제	15.4
③ 교통·인프라	3.9
④ 농산촌개발	15.4
⑤ 교육·문화·복지	11.5
⑥ 관광·휴양	23.1
⑦ 인적자원 개발미비	11.5

⑩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노후불량 지역 재생 및 정비’의 응답이 56.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는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등)의 확충’ 24.0%로 나타났다.

〈표 54〉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개발가능한 용지 확보	
② 신규 주거단지 개발	16.0
③ 읍면지역 활성화 및 환경 개선	4.0
④ 노후불량지역 재생 및 정비	56.0
⑤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등)의 확충	24.0
⑥ 개성있는 도시환경 및 경관 조성	

⑪ 지역산업 육성 역점 사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문화관광·여가산업’ 응답이 가장 높은 68.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축산바이오산업’이 각 16.0%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55〉 지역산업 육성 역점 사업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16.0
② 전자정보산업	
③ 제조업	
④ 문화·관광·여가산업	68.0
⑤ 농·축산바이오산업	16.0
⑥ 첨단문화산업	

⑫ 소득 증대 측면 시급 과제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응답에서 ‘지역특화산업 개발’ 60.0%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유치’ 12.0%, ‘인적자원 육성’,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민 협동조합’ 각 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소득 증대 측면 시급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4.0
② 기업유치	12.0
③ 산업시설 접근성 개선	
④ 인적자원 육성	8.0
⑤ 교육 문화환경 개선	
⑥ 정주환경 개선	8.0
⑦ 지역특화산업 개발	60.0
⑧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민 협동조합	8.0

⑬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충남 남부권의 농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응답에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농업인력 양성’ 32.0%,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 28.0% 순으로 농업 발전 우선에 필요한 추진 정책으로 나타났다.

〈표 57〉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전문농업인력 양성	32.0
②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	36.0
③ 농업기반시설 개선	
④ 농업유통구조 개선	4.0
⑤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	28.0

⑭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응답에는 ‘주변 시·군 대중교통망 확충’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위로 ‘대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 27.0%,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 19.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8〉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고속철도 운행 확대	3.8
② 고속도로망 확충	
③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	19.2
④ 대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	27.0
⑤ 주변시군 대중교통망 확충	34.7
⑥ 연접 시군 간선도로 정비·확충	15.3

⑮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관광자원 중 가장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응답에는 ‘역사유적 및 유물’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문화 예술자원’ 23.1%, ‘대규모 관광단지’,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등)’ 각 8.7% 순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관광자원 개발 잠재력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등)	7.7
② 대규모 관광단지	3.8
③ 온천	
④ 역사유적 및 유물	57.7
⑤ 전통문화 예술자원	23.1
⑥ 지역특산품(인삼, 술, 음식 등)	7.7

⑯ 관광·휴양 측면 중요 과제

‘관광·휴양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하여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의 답변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으로 시급 과제로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0〉 관광·휴양 측면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신규 관광지 개발	7.7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11.5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홍보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	69.3
숙박시설 확충	
관광 안내시설 확충	
관광지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	
관광지와 소재지간 연결 강화	7.7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	
주민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친절 교육	3.8

⑰ 인근 시·군과 협력 분야

‘남부권 시·군의 역량 부족 분야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기입 가능)’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비율은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광역간)’ 비율이 높은 분야로는 ‘1. 농산업(향토산업) R&D’, ‘3. 농산업 인재 육성(전문 농업인력 양성)’, ‘5. 농축산 온라인 마케팅’, ‘7.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8. 귀농귀촌 지원’,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12. 국제 행사 개최’,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탄소중립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클러스터, 소재부품산업 등)’, ‘19. 기업유치’,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 ‘23. 기업 지원 (금융·기술·인력·수출·창업·경영·판로·마케팅 등)’, ‘24. 사업체 기술 특허지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아산 등 충남 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비율이 높은 분야로는 ‘15. 금강 관광 도로개설’, ‘25. 사업체 자금·용자지원’로 나타났다.

‘남부권 시·군간’ 협력 비율이 높은 분야로 ‘4. 농축산품 브랜드 개발’, ‘6. 농업농촌 통합 판촉’, ‘10. 생산농가 출하회 교육’, ‘11.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민간 참여)’, ‘14.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17.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21. 청년 유치 정책·사업’, ‘22. 청년 지원(취업·창업·주거·금융)’, ‘26. 음식·숙박업 상품 메뉴 개발’, ‘27.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28.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로 나타났다.

‘천안·아산 등 충남 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과 ‘남부권 시·군간’의 답변 비율 같은 분야로는 ‘2. 농축산 바이오’, ‘16. 보건의료자원 공동 활용’으로 나타났다.

〈표 61〉 인근 시·군과 협력 분야

(단위 : %)

구분	응답률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광역간)	충남내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남부권 시·군간
1. 농산업(향토산업) R&D	45.5	30.3	24.2
2. 농축산 바이오	24.1	37.9	37.9
3. 농산업 인재 육성(전문 농업인력 양성)	44.1	32.4	23.5
4.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14.8	22.2	63.0
5. 농축산 온라인 마케팅	46.7	13.3	40.0
6. 농업농촌 통합 판촉	20.6	26.5	52.9
7.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38.7	25.8	35.5
8. 귀농귀촌 지원	45.5	24.2	30.3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55.6	22.2	22.2
10. 생산농가 출하회 교육	0.0	28.6	71.4
11.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민간 참여)	34.5	24.1	41.4
12. 국제 행사 개최	70.0	13.3	16.7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	64.3	25.0	10.7
14.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0.0	44.8	55.2
15. 금강 관광도로개설	29.4	41.2	29.4
16. 보건의료자원 공동 활용	28.6	35.7	35.7
17.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7.1	17.9	75.0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클러스터, 소재부품산업 등)	65.6	25.0	9.4
19. 기업유치	41.4	34.5	24.1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	75.9	13.8	10.3
21. 청년 유치 정책·사업	35.5	25.8	38.7
22. 청년 지원(취업·창업·주거·금융)	27.6	24.1	48.3
23. 기업 지원 (금융·기술·인력·수출·창업·경영· 판로·마케팅 등)	39.3	28.6	32.1
24. 사업체 기술 특허지원	44.8	27.6	27.6
25. 사업체 자금·융자지원	33.3	37.0	29.6
26. 음식·숙박업 상품 메뉴 개발	7.1	10.7	82.1
27.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10.7	21.4	67.9
28.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7.4	33.3	59.3

2. 주민 설문 조사

1)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남부권(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에 대해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인식조사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이 생각하는 정주 의식 및 만족도,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조사하여 충청남도 남부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의 대상 및 방향

조사 대상은 충청남도 남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22.11.21.~12.02.(14일간), 630명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4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거주지역 발전 수준, 중요 및 개선 문제, 미래 방향, 분야별 중요과제 등 각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민 설문 조사 결과

(1) 정주 의식 및 만족도

① 거주의향

‘앞으로도 계속 현재 거주지역에 거주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가 46.8%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다(28.6%)’, ‘생활여건이 나아진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2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거주의향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계속 거주하고 싶다	46.8
② 생활여건이 나아진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	20.5
③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다	28.6
④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4.1

② 이주 희망 지역

‘만약 떠나신다면 ()시군으로 ()년 후쯤 이주할 생각이다.’라는 질문에 ‘대전광역시’ 응답률이 37.5% 가장 높고, 그 다음 순으로 ‘세종특별자치시(13.7%)’, ‘서울특별시(7.9%)’, ‘공주(7.3%)’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결과, 충남 북부권 이동 보다는 광역시와 같이 대도시권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응답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희망 년수는 평균 14.5년으로 확인되며, ‘10년 후’가 20.5%로 가장 높고, ‘5년 이내(19.2%)’, ‘20년 후(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3〉 이주 희망 지역

(단위 : %)

구분		응답률
충남	계룡시	1.7
	공주시	7.3
	금산군	0.8
	논산시	6.3
	부여군	4.0
	청양군	1.0
	보령시	6.0
	서천군	1.7
	예산군	0.6
	홍성군	1.3
천안시	5.1	
경기도		0.6
대전광역시		37.5
서울특별시		7.9
세종특별자치시		13.7
인천광역시		0.2
대구광역시		0.2
전라북도		1.9
제주특별자치도		0.3
충청북도		1.9

〈표 64〉 이주 희망 년수

(단위 : %)

5년 이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25년 후	30년 후	35년 후
32.9	19.2	20.5	10.5	16.7	5.1	11.0	0.3
평균 : 14.5년							

③ 현재 거주지 만족도

‘현재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이 4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보통(30.8%)’, ‘불만족(19.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5〉 현재 거주지 만족도

(단위 : %)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9.50	30.8	47.9	1.7

④ 현재 지역 거주 만족 이유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라는 질문에 대해 ‘자연환경(75.4%)’이 월등히 높고, 그 다음 순위로 ‘예전부터 살고 있어서(61.3%)’, ‘주거환경(38.1%)’, ‘일자리 경제여건(26.2%)’, ‘교통여건(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66〉 현재 지역 거주 만족 이유

(단위 : %)

구분	응답률
교통여건	11.3
일자리 경제여건	26.2
교육환경	6.2
주거환경	38.1
보건의료시설	4.1
복지시설	10.2
문화시설	5.4
자연환경	75.4
예전부터 살고 있어서	61.3
역사관광시설	0.2
주변지인들이 좋아해서	0.2

⑤ 현재 지역 거주 불만족 이유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화 시설 부족’이 51.6%로 가장 1순위이며, ‘지역산업기반 취약(47.5%)’, ‘교육기반 취약(32.2%)’, ‘보건의료시설 취약(30.8%)’, ‘인구 노령화(27.0%)’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 67〉 현재 지역 거주 불만족 이유

(단위 : %)

구분	응답률
대도시로의 접근성 부족	21.0
지역산업기반 취약	47.5
교육기반 취약	32.2
주택 등 주거환경 취약	21.1
보건의료시설 취약	30.8
복지시설 취약	22.9
문화시설 부족	51.6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 부족	9.2
인구 노령화	27.0

⑦ 최근 5년간 발전 수준

‘최근 5년간 우리나라부터 거주지역의 발전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서울, 수도권’은 ‘성장’이 70.8%로 확인되며,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은 ‘전환’되었다는 응답이 47.9% 나타난 반면, ‘응축’에 대한 답변은 ‘충남’은 38.3%, ‘인근 충남 시군(남부지역)(59.4%)’, ‘거주 시군(57.0%)’ 순으로 발전 속도가 더디게 생각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8〉 최근 5년간 발전 수준

(단위 : %)

구분	응답률			
	전환	응축	쇠퇴	성장
서울, 수도권	21.1	8.1		70.8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7.9	4.8	0.2	47.1
충남	42.2	38.3	14.6	4.9
인근 충남 시군(남부지역)	19.2	59.4	20.6	0.8
거주 시군	14.3	57.0	26.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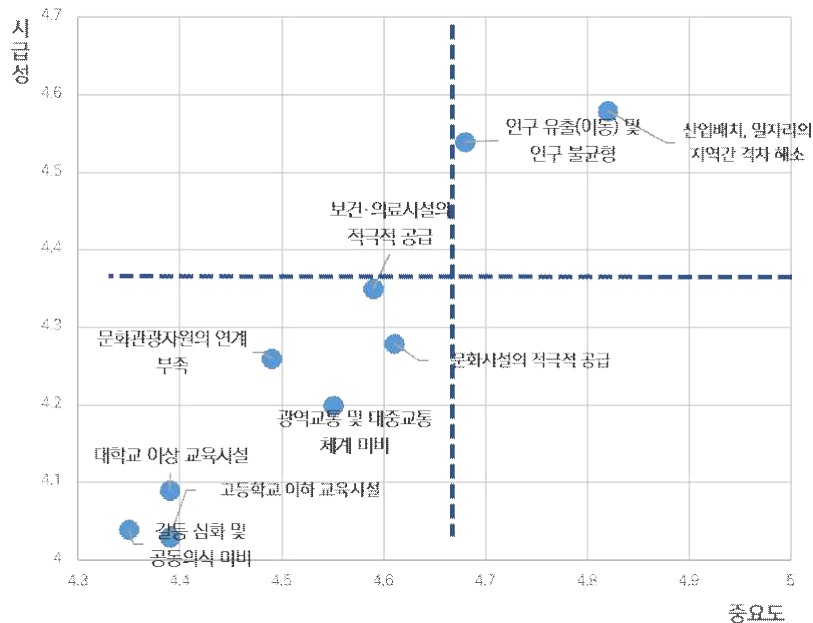
⑧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유지강화가 필요한 과제로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로 확인된다.

〈표 69〉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 과제

(단위 : 점)

구분	중요도	시급성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4.68	4.54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4.82	4.58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4.49	4.26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4.55	4.20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4.59	4.35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4.61	4.28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4.39	4.03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4.39	4.09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4.35	4.04



[그림 39] 충남 남부권 만족도·중요도 IPA 분석(주민)

⑨ 직장 위치 및 통근시간

‘직장 위치와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남 남부권에 거주자 중 ‘논산시’로 출퇴근 하는 비율이 12.4%로 가장 높고, ‘공주시(11.1%)’, ‘계룡시(9.7%)’ 순으로 주변 시 지역으로 출퇴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0〉 직장 위치

(단위 : %)

구분	응답률
계룡시	9.7
공주시	11.1
금산군	9.2
논산시	12.4
부여군	9.2
청양군	9.2
보령시	0.3
예산군	0.2
대전광역시	5.1
세종특별자치시	0.5

⑩ 생활권

‘구매 및 이용지역’으로 현재 기준 ‘가전제품 구입’, ‘병원 및 의원 이용’에 대해 ‘공주시’를 생활권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으며, ‘종합병원 이용’은 ‘대전광역시’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래 기준 구매 및 이용지역 중 ‘일용품 구입’이 ‘대전광역시’가 16.0%로 가장 높고, ‘가전제품 구입’, ‘병원 및 의원 이용’, ‘종합병원 이용’ 또한 ‘대전광역시’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기준 남부권 주민은 미래에 모든 생활·소비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생활권

(단위 : %)

구분		응답률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천안시	서천군	예산군	대전시	세종시	전북	서울	경기	기타
현재	일용품 구입	14.6	17.8	14.4	19.0	15.9	15.6					2.7					
	가전제품 구입	7.5	19.5	9.2	19.2	14.8	8.3	3.7		0.2	0.2	17.3	0.2				
	병원 및 의원 이용	13.3	18.1	11.7	18.6	15.6	12.9	1.3				8.4	0.2				
	종합병원 이용	0.8	13.5		8.6	8.4		3.8	2.2		0.3	54.8	2.5	0.3	4.0	0.3	
미래	일용품 구입	9.7	14.1	10.2	14.4	12.1	11.1	1.0	1.9	0.3	0.5	16.0	3.5		3.7	0.3	1.3
	가전제품 구입	4.4	16.2	6.2	14.3	10.6	5.2	3.3	1.9	0.5	0.8	27.6	3.7		3.7		1.3
	병원 및 의원 이용	8.6	14.9	7.8	13.8	11.7	8.3	1.9	1.9	0.3	0.5	21.1	4.0		3.7	0.3	1.3
	종합병원 이용	0.8	10.5		4.8	5.9		3.3	3.0		0.3	52.7	8.9	0.6	7.8	1.0	0.5
증감	일용품 구입	-4.9	-3.7	-4.2	-4.6	-3.8	-4.5					13.3					
	가전제품 구입	-3.1	-3.3	-3	-4.9	-4.2	-3.1	-0.4		0.3	0.6	10.3	3.5				
	병원 및 의원 이용	-4.7	-3.2	-3.9	-4.8	-3.9	-4.6	0.6				12.7	3.8				
	종합병원 이용		-3		-3.8	-2.5		-0.5	0.8			-2.1	6.4	0.3	3.8	0.7	

(2) 미래상 및 발전방향

① 미래 삶의 여건

‘현재 우리나라·지역이 20년후, 2040년에는 삶의 여건 변화’에 대한 질문에 ‘서울, 수도권’,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충남’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45.0%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인근 충남 시군(남부지역)’에 대한 응답은 ‘변화없다’가 52.7%로 나타났다.

〈표 72〉 미래 삶의 여건

(단위 : %)

구분	응답률				
	매우 나빠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변화없다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서울, 수도권		7.8	24.3	53.3	14.6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0.2	12.5	74.8	12.5
충남		1.3	36.8	61.3	0.6
인근 충남 시군(남부지역)		2.4	52.7	44.9	
거주 시군		3.7	49.7	46.5	0.2

② 향후 거주지역, 인근 충남지역의 미래상

‘거주 지역의 미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겠는가?’에 질문에는 ‘남부권’의 미래상은 인근 충남시군(남부지역) 기준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34.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첨단산업중심지역(25.6%)’으로 나타났다.

거주 시군 기준으로는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28.1%)’, ‘물류유통중심지역(15.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3〉 향후 거주지역, 인근 충남지역 미래상

(단위 : %)

구분		응답률
인근 충남시군 (남부지역)	영농중심전원지역	14.4
	첨단산업중심지역	25.6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34.8
	국제교류도시	6.3
	교육연구중심지역	8.4
	물류유통중심지역	10.5
거주 시군	영농중심전원지역	20.2
	첨단산업중심지역	14.6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28.1
	국제교류도시	7.8
	교육연구중심지역	14.3
	물류유통중심지역	15.1

③ 미래 거주 희망 지역

‘미래(2030년)에 어떤 지역에서 생활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소도시’가 35.4%로 가장 높고, ‘대도시(25.2%)’, ‘농어촌(25.2%)’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4〉 미래 거주 희망 지역

(단위 : %)

구분	응답률
대도시	25.2
대도시 인근지역	14.1
중소도시	35.4
농어촌	25.2

④ 미래 거주 희망 형태

‘미래(2030년) 주거 형태’에 대한 질문에 ‘고층아파트(6층 이상)’이 5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23.7%)’, ‘전원주택(18.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75〉 미래 거주 희망 형태

(단위 : %)

구분	응답률
단독주택	23.7
고층아파트(6층 이상)	52.5
저층아파트(5층 이하)	2.7
연립주택	3.0
전원주택	18.1

⑤ 지역발전 우선 분야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적 분야’로는 ‘산업·경제’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순으로는 ‘도시발전·정비·재생(22.9%)’, ‘교육·문화·복지(13.8%)’, ‘교통·인프라(11.4%)’, ‘농산촌개발(9.8%)’ 순으로 지역발전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로 나타났다.

〈표 76〉 지역발전 우선 분야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도시발전·정비·재생	22.9
② 산업·경제	28.4
③ 교통·인프라	11.4
④ 농산촌개발	9.8
⑤ 교육·문화·복지	13.8
⑥ 관광·휴양	9.5
⑦ 인적자원 개발·미비	4.1

⑥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읍면지역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이 22.1%로 1순위며, 2순위로는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등)의 확충’, 3순위는 ‘개성있는 도시환경 및 경관 조성’으로 나타났다.

〈표 77〉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개발가능한 용지 확보	10.5
② 신규 주거단지 개발	14.9
③ 읍면지역 활성화 및 환경 개선	22.1
④ 노후불량지역 재생 및 정비	11.4
⑤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등)의 확충	21.9
⑥ 개성있는 도시환경 및 경관 조성	19.2

⑦ 지역 역점 육성 산업

‘지역산업 육성 역점 산업’에 대한 질문에 ‘문화관광여가산업’이 24.9%로 1순위가 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19.2%)’, ‘농축산바이오산업(1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78〉 지역 역점 육성 산업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19.2
② 전자정보산업	15.2
③ 제조업	9.0
④ 문화·관광·여가산업	24.9
⑤ 농축산바이오산업	16.3
⑥ 첨단문화산업	15.2

⑧ 산업 관련 중요 과제

‘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측면 중요 과제’로는 ‘교육 문화환경 개선’이 23.2%로 가장 높고, ‘지역특화산업 개발(16.3%)’, ‘인적자원 육성(15.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9〉 산업 관련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7.8
② 기업유치	12.5
③ 산업시설 접근성 개선	7.0
④ 인적자원 육성	15.1
⑤ 교육 문화환경 개선	23.2
⑥ 정주환경 개선	13.2
⑦ 지역특화산업 개발	16.3
⑧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민 협동조합	4.9

⑨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농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1순위로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가 34.6%로 확인되며,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19.8%)’, ‘농업유통구조 개선(19.7%)’, ‘전문농업인력 양성(13.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0〉 농업 발전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전문농업인력 양성	13.3
②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	34.6
③ 농업기반시설 개선	12.5
④ 농업유통구조 개선	19.7
⑤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	19.8

⑩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교통 인프라 측면 중요 과제’로는 1순위 ‘고속도로망 확충’이 25.9%이며, ‘연접 시군 간선도로 정비·확충(17.8%)’, ‘주변시군 대중교통망 확충(17.1%)’,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16.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1〉 교통 인프라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고속철도 운행 확대	11.6
② 고속도로망 확충	25.9
③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	16.3
④ 대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	11.3
⑤ 주변시군 대중교통망 확충	17.1
⑥ 연접 시군 간선도로 정비·확충	17.8

⑪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역점 대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점 대상’으로 ‘노인복지’가 2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20.8%)’, ‘저소득층 복지(20.6%)’, ‘다문화 가정복지(18.1%)’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2〉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역점 대상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아동 청소년 복지	20.8
② 다문화 가정복지	18.1
③ 여성복지	12.7
④ 노인복지	21.9
⑤ 장애인 복지	5.9
⑥ 저소득층 복지	20.6

⑫ 노인 복지 관련 시급 사안

‘노인 복지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1순위가 ‘취업기회 확대’로 30.5%로 확인되며, ‘유무료 양로원 건설(23.3%)’,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21.1%)’, ‘노인회관 건설(14.1%)’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3〉 노인 복지 관련 시급 사안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유무료 양로원 건설	23.3
② 취업기회 확대	30.5
③ 노인회관 건설	14.1
④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	21.1
⑤ 생활비 지원	11.0

⑬ 역점 보건의료 정책

‘역점으로 두어야 할 보건의료 정책’ 1순위로 ‘종합병원 확대’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시설 확충 및 의료인력 보강(26.3%)’, ‘의료비 인하(16.8%)’, ‘24시간 진료체계(1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84〉 역점 보건의료 정책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종합병원 확대	31.7
② 의료비인하	16.8
③ 보건시설 확충 및 의료인력 보강	26.3
④ 정기검진 확대	11.9
⑤ 24시간 진료체계	13.0
⑥ 청년무료건강검진	0.2

⑭ 교육·문화·복지 중요 과제

‘교육·문화·복지 측면 가장 중요한 과제’로 1순위 중요 과제로 ‘의료시설 전문화 및 활성화’가 33.0%이고, 그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25.4%)’,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24.6%)’,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향상(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5〉 교육·문화·복지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향상	8.7
② 의료시설 전문화 및 활성화	33.0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25.4
④ 극장, 도서관 등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24.6
⑤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7.9
⑥ 기타(스포츠시설 부족, 레저시설)	0.4

⑮ 문화 및 예술진흥 시급 과제

‘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22.5%)’,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17.0%)’, ‘관련단체 지원 및 인력육성(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6〉 문화 및 예술진흥 시급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	22.5
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4.1
③ 관련단체 지원 및 인력육성	14.1
④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7.0
⑤ 관람기회 확대(관람회 인하)	12.2

⑩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

‘관광자원 중 가장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자원’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유적 및 유물’이 28.6%로 가장 높고,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등)(24.3%)’, ‘지역특산품(인삼, 술, 음식 등)(16.5%)’, ‘대규모 관광단지(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7〉 개발 잠재력이 높은 관광자원

(단위 : %)

구분	응답률
①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등)	24.3
② 대규모 관광단지	14.1
③ 온천	2.7
④ 역사유적 및 유물	28.6
⑤ 전통문화 예술자원	13.7
⑥ 지역특산품(인삼, 술, 음식 등)	16.5
⑦ 군사박물관	0.2

⑪ 관광·휴양측면 중요 과제

‘관광·휴양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인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이 19.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숙박시설 확충(17.0%)’,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14.6%)’, ‘관광 안내시설 확충(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88〉 관광·휴양측면 중요 과제

(단위 : %)

구분	응답률
신규 관광지 개발	4.4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7.9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홍보	9.7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	19.8
숙박시설 확충	17.0
관광 안내시설 확충	9.8
관광지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	8.7
관광지와 소재지간 연결 강화	6.3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	14.6
주민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친절 교육	1.6

⑱ 지역발전에 도움 되는 우선 지역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위’로는 1순위로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의 소재지’가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순위로는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소재지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웃 동·읍·면의 소재지’가 44.6%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89〉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우선 지역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①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의 소재지	54.1	17.3
② 현재 살고 있는 동·읍·면 소재지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웃 동·읍·면의 소재지	29.7	44.6
③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의 시·군청 소재지	12.2	31.6
④ 현재 살고 있는 시·군청 소재지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웃 중·대도시	0.4	6.5

①⑨ 읍·면 시설 통합 조성 방안

‘개별 읍면동별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몇 개 읍면을 묶어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32.4%)’, ‘반대(18.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90〉 읍·면 시설 통합 조성 방안

(단위 : %)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모름/무응답
	18.4	32.4	41.4	7.8	

②⑩ 이웃지역 시설 이용 의견

‘이웃도시에 있는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 우리 지역에 중복 설치하지 않고 이웃도시 이용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보통’이 37.5%이며, ‘찬성(34.0%)’, ‘반대(25.6%)’ 순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 이웃지역 시설 이용 의견

(단위 : %)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모름/무응답
0.2	25.6	37.5	34.0	2.9	

②⑪ 인근지역 상호협력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이 58.6%이며, ‘매우찬성’ 또한 26.2%로 확인되었다. 인근 시·군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의 비율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2〉 인근 지역 상호협력

(단위 : %)

매우반대	반대	보통	찬성	매우찬성	모름/무응답
	2.1	13.2	58.6	26.2	

②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 분야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해야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크게 2분류로 나눌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남부권 시·군간’ 연계협력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으며, 그 중 ‘12. 국제 행사 개최’,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와 같이 국제 행사,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천안, 아산 등 충남 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 시·군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1순위는 ‘1. 농산업(향토산업) R&D (97.6%)’이며, 2순위 ‘8. 귀농귀촌 지원(97.5%)’, 3순위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97.0%)’ 순으로 나타났다.

‘천안, 아산 등 충남 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 중 1순위는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87.0%)’, 2순위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85.7%)’, 3순위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84.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93〉 인근 시·군과 상호협력 분야

(단위 : %)

구분	응답률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광역간)	충남내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남부권내 시군간
1. 농산업(향토산업) R&D	37.3	69.7	97.6
2. 농축산 바이오	33.2	70.6	92.1
3. 농산업 인재 육성(전문 농업인력 양성)	30.3	68.3	91.9
4. 농축산품 브랜드 개발	25.9	67.3	91.4
5. 농축산 온라인 마케팅	33.8	71.0	92.1
6. 농업농촌 통합 판촉	27.8	68.3	94.0
7.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53.5	77.6	92.4
8. 귀농귀촌 지원	24.6	64.8	97.5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30.0	71.0	97.0
10. 생산농가 출하회 교육	15.2	58.4	93.3
11.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민간 참여)	28.1	67.1	94.1
12. 국제 행사 개최	70.6	84.6	79.2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	69.5	85.7	81.3
14.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28.6	61.1	95.2

15. 금강 관광도로개설	44.6	73.8	92.1
16. 보건의료자원 공동 활용	47.9	74.3	91.6
17.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19.2	58.4	93.8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탄소중립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클러스터, 소재부품산업 등)	83.7	87.0	40.6
19. 기업유치	40.6	71.0	90.8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	49.7	84.8	91.7
21. 청년 유치 정책·사업	27.0	66.8	94.1
22. 청년 지원(취업·창업·주거·금융)	26.7	67.9	92.5
23. 기업 지원(금융·기술·인력·수출·창업·경영·판로·마케팅 등)	48.6	79.8	90.8
24. 사업체 기술 특화지원	57.6	82.4	84.0
25. 사업체 자금·용자지원	38.7	73.2	89.4
26. 음식·숙박업 상품 메뉴 개발	19.8	57.8	92.5
27.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23.2	61.0	93.7
28.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21.6	59.5	94.4

3. 요약 및 시사점

첫째, 도시 발달 정도에 따른 남부권에 미치는 영향 예측이다.

대전시, 세종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부권의 경우, 대전시는 중심도시인구는 성장이 둔화되고, 주변지역 인구는 급증하는 상대적 분산기에 속하며, 향후 다중심 초연결을 지향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상의 메가시티 구성과 관련하여 남부권은 단기적으로는 대전, 세종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구가 대전, 세종으로 흡수되어 식량 및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락하였다가 도시권의 확장에 따라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도시권의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 되고,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닌 곳은 쇠퇴하는 양상을 띠 것으로 예측된다.

대도시권 또는 메가시티 구성에 따라서 향후 남부권에 미칠 영향으로 전문가 꼽은 사항은 녹색생산 중심의 발전, 1차산업 중심의 재지역화, 의료복지안전서비스 중심의 생활권 재편,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특화발전, 저이용, 미이용 공동화 자원의 관리 효율화가 과제로 남는다.

이것은 남부권과 같이 중소도시, 과소지역인 곳은 그 양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도시발달에 따른 이주 의사는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대전시 37.5%, 세종시 12.5%로 나타나 남부권내 이동의사 20.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주 희망년수가

최근 5년을 기점으로 22.5%로 높게 나타나 인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내 소비 등 일일 생활권과 관련하여 현재 역외 유출비중이 20%대에서 일용품, 가전제품, 병원 및 이용을 향후 이용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내 주민서비스의 규모화, 질적 고도화, 효율화가 요구된다.

한편, 미래 삶의 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남부권이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반면, 주민은 변화가 없거나 좋아지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지향해야할 미래 모습 및 방향이다.

전문가는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영농중심 전원지역이 7:3의 비율로 응답하였고, 주민은 관광여가 산업 중심지역이 33%, 첨단산업 중심지역이 29.5%로 응답하여 상호 대비적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남부권의 중요 및 시급한 과제이다.

전문가, 주민 모두 인구유출과 산업배치, 일자리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전문가는 이외에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장 먼저 추진해야할 역점 육성산업은 문화관광여가산업이며,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농축산바이오산업이라 전문가는 응답한 반면 주민은 문화관광여가산업이 1순위이며, 첨단문화산업, 전자정보산업이 뒤를 이었다. 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급과제는 전문가는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주민은 교육문화환경개선을 꼽아서 시각차가 잔재하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 주민 모두 브랜드화를 꼽은 반면, 전문가는 전문온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영농 보급을 꼽았고, 주민은 과학기술 영농 보급, 농업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교통 인프라는 주변시군간 대중교통망 확충을 전문가는 꼽았으며, 주민의 고속도로망 구축을 꼽아서 시각차가 잔재한다.

관광자원의 개발 잠재력에 대해서 역사유적 유물을 모두 중요자원으로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역문화 예술자원을, 주민은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을 2순위로 꼽았다. 중요한 과제로는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전문가와 주민은 공통적으로 꼽았으며, 시설적인 부분의 관광지 개발, 정비보완, 안내시설 확충,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주민은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 숙박시설 확충에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넷째, 시군과 타지역간 연계 협력이다.

전반적으로 이웃지역, 상호 협력을 위해 인근지역과의 연계협력에는 찬성하는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산업 분야에서 남부권내 시군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브랜드개발, 통합 판촉, 생산농가 교육 이며, 시군과 남부권외의 충남 시군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농축산 바이오산업이고, 대전,세종시와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R&D, 농산업 인재 육성, 온라인 마케팅,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귀농귀촌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과학기술기반, 청년층을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남부권 시군간에는 시군별로 동종의 사업을 공동 마케팅하는 통합적 추진이 요구된다.

관광 관련해서 남부권내 시군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브랜드구축이며, 대전,세종시와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행사 개최, 국제기구 가입 및 홍보 등이다. 이것은 농산업과 유사하게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공동의 목적을 갖고서 콘텐츠를 개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수요층을 대비해서는 공동의 판촉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통합돌봄 활동가 양성은 개별시군간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공동활용도 필요하다.

산업 및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남부권내 시군간 연계협력분야는 청년 유치 정책, 청년지원사업, 음식 숙박업 상품 메뉴개발,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별 시군에서 추진해오던 정책, 사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더 이상의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부권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전시, 세종시와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기업 유치, 혁신선도인재 양성, 기업지원, 사업체 기술 특허 지원 등으로 이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남부권이 미흡한 분야로서 광역지자체간 장기간에 걸쳐서 광역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제5장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 발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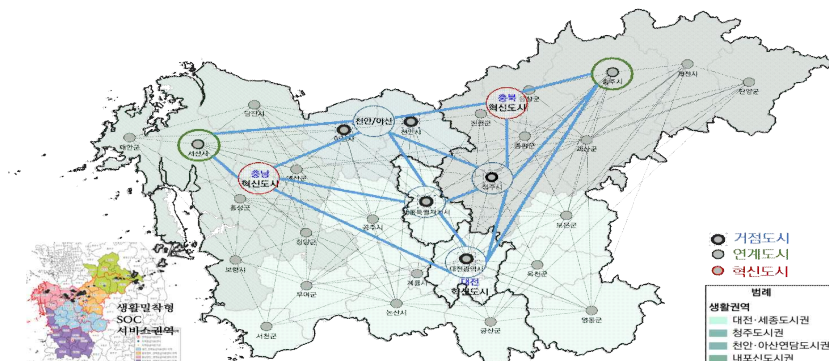
1) 충청남도 남부권의 과제

(1)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 특성화

남부권의 공간정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앞서도 공간구조를 전망하였고, 설문조사에서도 도출된 바와 같이 대전시, 세종에 연접한 남부권은 제 역할을 명확히 해야할 과제가 있다.

광역적 측면에서 충청권은 대전시-세종시-청주시가 연결되고, 천안시·아산시가 연결되는 회랑 도시형태를 띠고 있으며, 회랑도시는 지식집약 중심지가 대도시와 연계한 것으로 네트워크 도시의 일차적인 형태이며, 네트워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방향의 회랑과 연계한 동서간의 발전축을 설정하고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는 승자독식형의 거대 도시가 아닌 전문화·보완관계의 협력과 연계에 의한 외부경제를 형성하고 주변 소도시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용준, 2021)



자료 :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 용역

[그림 40]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스마트 생활권역 구상도

이를 위해서는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대전, 세종, 청주, 천안·아산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도시권 성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자립적 경제권으로 기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남부권 입장에서는 세종시, 대전시를 비롯한 고차원적인 도시기능(국가행정의 중추기능)이 건설되고, 기존의 중심도시들이 특성화하며, 이들이 주변의 소도시지역과 연계되어 상호 보완적인 도시네트워크 속에서 통합되어질 경우 독자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세종, 대전, 청주를 중심으로 중심대도시권으로 중추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중심대도시권에는 행정 및 업무의 중추관리기능, 고차의 문화기능, 첨단과학기술과 벤처산업의 보육기능, 업무 및 전문서비스기능, 관광중심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성장력을 공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지역내 광역도시교통체계와 더불어 주변 도시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선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광역연계 협력축 설정 및 발전축·교통축의 입체화

충청권 메가시티가 자립적 성장함에 따라 국가적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세계적 수준의 도시환경과 시설을 갖추도록 진행됨에 따라 주변도시와 공간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만으로는 국가행정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핵적 공간 구조 형성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도시와 지역은 기능적 고도화와 도시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다핵구조의 분산 네트워크 체계로의 변화하는 양상은 사례를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유럽은 메가시티 리전의 단핵구조(monocentric)와 다핵구조(polycentric)로 성장하면서 주변도시들과 교류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는 광역권 분산 네트워크로 도쿄 중심에서 주변 도시로 분산되고, 도시간 교류 강화되어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다.

우선, 공간구조상 발전축과 연계한 산업기능 보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축과 교통축을 입체화하여야 하며, 발전축에 따른 각 거점별로의 산업분담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모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도시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을 활용한 산업특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례로 대전, 세종이 R&D와 사업화지원, 창업,

Post-BI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청주, 천안은 기업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산업기술의 활용기반 제공이나 기업 간 교류, 정보·기술공유 등이 필요한 첨단소기업의 입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충남 남부권 입장에서 시급하게 추진이 가능한 역할은 중소도시의 장소 활력을 높여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촌지역과 대도시·중심도시·기초도시간의 순환경제체제 도모하는 등 틈새시장을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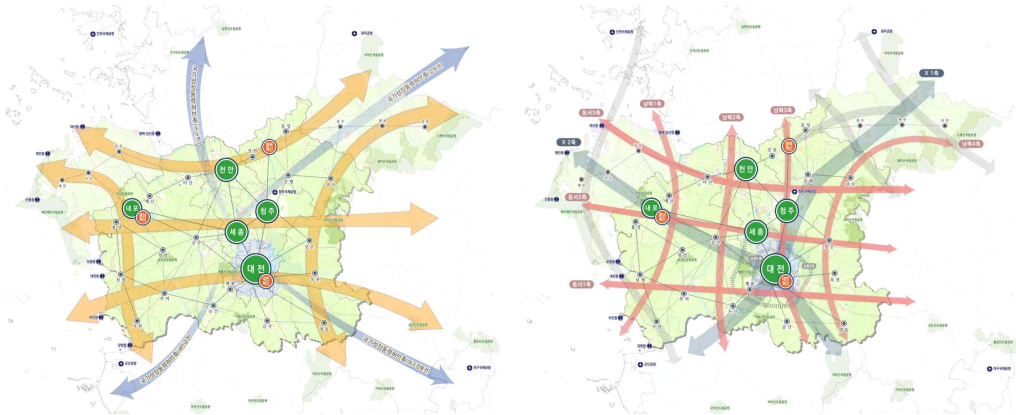
충남 남부권은 산업축·발전축을 통합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방향별로의 교통망을 확충·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남북중심인 경부축과 서해안축의 도시세력권 쏠림을 방지하고, 분산형 네트워크 체계로 전환하며 계획권내의 공간적·산업적 통합성을 지원하기 위해 동서방향 교통망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세종시를 기점으로 내포신도시 등을 연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적 개발축의 연계 강화 지원하고, 주요 도시간 연계발전과 신속한 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남의 공간 통합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미흡한 남북방향 교통망 완성도 필요한데, 기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부축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내륙부 산업발전과 문화관광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교통용량 증가에 따른 내륙 문화관광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과의 지속적 확장에 따라 평택, 화성, 오산, 안성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계획권 남측의 세종, 논산까지 확장한다. 미래 관광 잠재력을 지닌 생태문화자원인 산림지대를 연결하여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잡한 대도시권 순환교통망을 구축하여 대전시 주변부와의 연결성을 제고하고, 주변지역과 KTX역 등 주요 교통거점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용편리성과 공간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주요 교통결절점의 중심지 역할, 기능 강화 및 도심 위상 정립하고, 도시와 도시간 연계를 통해 상호기능 보완, 시너지 효과 창출하여야 하는데, 교통 결절점에 고차서비스·중심상업기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하고, 철도 및 도로 기반 연계를 통해 타 도시간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한다.



자료 :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그림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발전축, 교통축 구상(안)

(3) 문화·관광·레저 기능 강화 및 세계화

고차서비스는 대전시, 세종시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인 남부권은 관광자원 및 시설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관광자원별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세계적인 여행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백제문화권, 금강문화권, 자연·생태·경관 등의 지역문화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거점 조성하여 세계적인 여행지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관리체계 구축 및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세계적 정체성 확보하며, 지역내 역사문화, 경관 등의 특화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남부권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활용하고, 축제 등 세계화 도모토록 하는 데, 역사·문화·예술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별 특화된 문화발전체계 구축하고, 역사도시내의 도시조직, 가로, 옛 물길 등의 보전 관리방안 구체화하고, 보행친화도시로 조성하여 관광 길로 활용하며, 지역별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은 자원유형별로 보전관리방안 마련 및 시행하며, 지역내의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활용하여 지역활성화 및 세계화를 도모한다.

(4)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한 미래 생활권 형성

충남 남부권은 미래에 대전시 생활권에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이 속하고, 세종시

생활권에 공주시, 청양군이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대전시, 세종시의 영향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과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미래 생활권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의 기초적인 구매활동 등은 읍면단위, 해당 시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를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생활권이라고 하며, 범위를 넓혀서 권역 생활권은 자연적·물리적 환경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차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하는데, 상업, 제조업, 서비스,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생활권 내 중심도시 및 주변도시 간 기능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고, 통근권 내 형성되는 권역으로서 통근통행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설정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생활권은 권역 생활권이다.

권역생활권은 미래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한 교통 중심지 기반의 도시기능 육성하기 위해 미래 도시공간구조에 대응한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육성 및 교통 결절점의 복합용도 개발, 원도심의 중심성 강화를 위한 시민의 이용편의성, 공공성 확보, 주요 교통결절점의 중심지 역할, 기능 강화 및 도심 위상 정립이 수반된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결절점에 고차서비스·중심상업기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구축하고, 철도 및 도로 기반 연계를 통해 타 권역 생활권 및 기초생활권과의 연계성 강화한다.

생활권내에서 전략산업 등 특정기능과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의 활력제고를 통해 지역상권의 보전하며, 전략산업 기능 연계한 특화산업 활성화 및 지역자원 기반 고용창출, 청년창업 제고하는 등 산업기능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초생활을 위한 일자리 창출토록 한다.

교통적으로는 대중교통 연계 체계 구축 및 친환경 교통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연결성 제고, 도심내 교통 효율성 제고 및 교통 안전성 제고한다. 광역도시-연접도시간 1시간 내 이동을 위한 고속 연결기능 보완 및 고속화로 접근성 향상하며, 심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확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보급 및 환승 노선 효율화²¹⁾하고, 관광객을 위한 순환형 버스체계 정비 및 관광지 인근 대형버스 주차장 문제 해결하며, 도심내 교통복합화를 통해 도심 교통허브를 육성하고, 통합 환승센터 설치한다.

21) 이용자가 목적지, 인원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실시간 배차가 이루어지는 콜 버스 개념으로, 세종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의 운영을 시작

2) 발전 목표 및 전략

현시점에서 남부권은 대전, 세종이라는 거대한 도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도시 체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요원한 꿈처럼 느껴지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설정하고, 지원하면 도시 조성은 가시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충남의 남부권은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중소도시로서 대도시의 영향을 흡수하고, 이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형태로는 충남 남부권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고, 대전시, 세종시의 생산지대, 분공장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장점을 활용하는 역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네트워크 도시체계에서는 네트워크상에서 도시의 결절성이 도시의 중심성을 결정하고, 도시 간의 관계도 네트워크에 의해 유연하게 연계되며, 상호 보완성에 의해 지지된다는 점 착안하여, 도시 간의 수평적 연계와 쌍방향적 흐름을 통해서 특정 도시의 혁신이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입지적으로 불리한 소도시일 경우라도 혁신을 통해 그 이상의 도시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임동일 외, 2011, p.43).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도시들이 각각 특화된 기능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며, 광역차원, 기초차원에서 위계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다. 광역 차원에서는 생활환경 및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과 도시 간 협력과 연계, 경제주체인 기업 간 상호작용 증진과 같이 도시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고, 기초차원에서는 광역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교통 연계성 제고,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 도시재생,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물리적 계획 위주로 구성된다. (임동일 외, 2011, pp.43-44).

충남 남부권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가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갖고 있던 지역성의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지망의 제고 및 확보, 비공식적 연계를 탄탄히 채우는 **개방형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를 넘어 가시화되고, 정책 개발이나 추진 과정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 있지만, 행정적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범위는 행정구역단위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충남의 남부권은 충청남도의 행정력 보다는 대전시, 세종시의 영향을 더욱 더 많이 받는 지역이고, 지금까지 대전시, 세종시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구상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행정력이 정치적으로 이상적일지 모르나 경제적, 도시적으로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에 지역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별로, 지역혁신의 대상이 되는 자원별로, 공동 활용가능성 중심으로의 재편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시·세종시와 충남 남부권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통합적 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며, 대전시·세종시의 연계효과를 수용하기 위한 명확하고, 직결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첫 번째 전략은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이다.

충남 남부권의 원도심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주택 노후, 지역상권 및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바, 대전시·세종시와의 교통체계 확충 및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전시 서구·유성구,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내부 경제 순환, 주민간 교류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한편, 현재의 도시재생방식 외에 주거환경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경관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을 복합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시대에 맞춘 도시의 내부충진식 개발을 기본으로 하되, 대중교통과 연계된 도시시설의 입지 적정화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충남 남부권 각 시군별로의 전문화된 성장동력의 확충이다.

남부권 시군이 대전시·세종시로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인한 도시체계상의 중위거점 소멸,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발전전략이 대전시·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전문화된 분담기능을 찾아내야 한다.

충남 남부권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생산물이 풍부하며,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조직·운영중에 있으며, 전통적으로 지역내의 향토산업과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또한, 미래 도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도 하나의 산업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자산 기반의 첨단산업과의 접목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이다.

보통 연계 협력사업은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난 연계 교통망, 환경, 도시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연계협력의 대상을 산업, 문화, 관광, 의료, 인적자원등으로 확대하여 지역혁신의 주체자로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 부문별 정책과제

1) 도시·교통 부문

(1) 문제 인식

① 인구 감소, 가구수 증가 추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맞추어 주택의 다양화, 주거환경의 개선, 스마트 도시 조성이 동등하게 충남 남부권에도 요구된다.

주거수요 대상의 특성 변화와 주거정책 주대상이 크게 변했다는 점이 오히려 주거정책 변화에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가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급증은 주거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인구 증가시대에서 가족위주의 일방적 주택공급과 일률적 주거복지 정책으로는 앞으로의 주거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주거의 물리적 공급과 그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민에 대한 주거 관련 서비스의 적재적소 제공이 앞으로의 주거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재춘, 2000)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 고령가구의 급증은 남부권과 같은 농산어촌지역에서 특히 전통적인 가족 중심 구성의 해체와 가족 간의 상호부조, 가구 내 분업 등이 어려워짐을 의미하며, 미래 청년인구의 유출과 청년인구의 유입시 청년인구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인구가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구구성원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마련되어야 하고, 외국인 가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변화와 거주패턴, 삶의 질 기준 변화에

다른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주택다양화, 노후주택의 정비와 빈집관리, 기술과 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도심형 고급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등장 예상되며, 친환경적 입지 선호하고, 멀티 해비테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다.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영역이며, 주거부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주택 유형, 주거 입지, 주거 문화 등이 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권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 산업육성, 스마트 환경조성, 스마트 문화복지 구현 등 분야별로의 전략이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② 충청권 메가시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교통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정부의 효과 발생한다.

충청권 메가시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차원의 초광역 협력을 위해 이동서비스를 구축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시설은 충청남도 상위계획상에서 제시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며, 충청권을 환상형으로 연계하는 순환고속화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에는 스마트 항공 모빌리티(UAM) 체계도 함께 구상되어 충청권 메가시티 전 지역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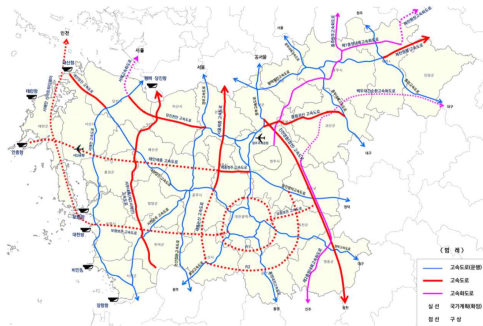
충남 남부권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보다는 산, 강 등의 물리적 한계와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이 제약이 있고, 교통·물류, 관광, 의료, 생활 서비스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은 동서축으로는 세종-공주-청양, 대전-논산-부여의 2개축이 강화되고, 남북방향으로는 세종-공주-논산과 대전-금산이 강화되며, 대전시의 제2순환선으로 인하여 금산-논산-공주가 대전을 가운데 두고 회랑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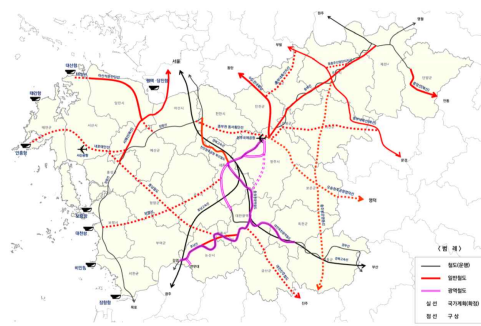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 철도 개선시 접근성 개선으로 인하여 대전시, 세종시 주변의 공주, 논산, 금산, 계룡은 위성 도시로 전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직주분리가 더욱 가속화되는 한편으로, 대전시, 세종시 주변지역의 전원지대에는 새로운 미니신도시 및 집단 거주지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남부권 시군간 공주-논산-금산 간의 공간 통합성은 제고될 것이다.

〈표 94〉 대전시, 세종 주변지역 주요 교통관련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출처
도로	• 보령-보은 고속도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 태안-세종 고속도로	
	• 대전외곽순환도로(순환 1축)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 대전외곽순환도로(순환 2축)	
	• 세종논산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 논산 연장)	제5차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 충청권 메가시티 순환고속도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철도	• 서해선-경부고속도로 연결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호남선 고속화(가수원-논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강경-계룡)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보령선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충남철도	충청남도 종합계획
	• 대전-진주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도로망 구상



철도망 구상

[그림 42] 대전시, 세종 주변지역 광역 교통망

광역교통망의 구축은 사회적 변화에 더불어 수변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장기 휴가, 세컨드 하우스, 여가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과거 수해 등 재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고 활용되지 않았던 수변

공간이 건강, 여가, 레포츠, 주거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거지 근처에서 해양레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변공간은 세컨드 하우스의 입지, 고급 및 보급별 별장으로서의 입지적 강점을 갖게 된다.²²⁾ 미래의 하천은 도로의 지하화, 고가화, 보행 터널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수변공간 이용자의 편의와 어메니티 제고를 위한 문화, 상업 시설의 집적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하에 도시 관광이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삶의 질에 대한 추구 경향이 강해지고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욕구가 높아질 경우, 여가수요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외 교통 정체를 피하고, 고급 도시서비스를 누리며,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잠재력이 높다.

③ 도시재생 영역의 확대, 스마트 내부 충전식 개발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규 개발은 감소 전망된다.

과거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서 기존의 용지개발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형태가 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형태의 개발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을 수반하였고, 최근은 농지·산지의 가치가 제고됨에 따라 개발용지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신규 용지 수요가 둔화되는 한편, 자원·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은 경제성이 낮고, 합의과정이 복잡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적용이 다르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책·사업이 도시용지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 지식기반산업 입지, 지하공간 개발 등은 기존의 도시용지 수요를 감소시키고, 경제수준 향상, 문화적 가치관의 다양화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수요는 상당히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고, 현재의 도시용지는 이러한 수용을 담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용지

22) 대도시의 경우 수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우수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나는 것과 유사

수요는 신규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 영역은 현재의 단기간의 단편적인 개발사업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④ 주택에 영향을 주는 트렌드는 주택유형의 다양화, 주거 어메니티에 대한 욕구 증대, 녹색 지능형 주택 보편화를 전망(국토연구원,2009)²³⁾된다.

주택유형의 다양화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는 도심형 고급주택 및 미니주택 보급,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개발, 의료형·코커형·여가형·이동식 주택 증가, 외국인 주택 수요 증가, 주택수요의 다양성 증가,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 등이다. 주거 어메니티에 대한 욕구 증대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는 전원주택, 교외 실버타운, 여가형 주택 증가, 자연친화적 주거환경 선호 경향 등이다. 녹색 지능형 주택의 보편화에 영향을 주는 메가 트렌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개발, 그린 주택·지능형 주택·재해에 안전하나 주택 증가 등이다.

한편 아파트 등의 고층·집단 형태의 주택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충남 남부권과 같은 지방 소도시는 리모델링, 저층저밀화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중 저출산·고령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압축적 도시성장 고려시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고,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아파트는 초고층화, 리모델링, 저층저밀화, 슬럼화될 가능성이 잔재한다. 주택수요의 증가시에는 주변지역 아파트단지 공급, 시가화지역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이 전개되고, 주택이 수요가 감소시에는 저층저밀의 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정책과제

① 대전시, 세종시 생활권별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 및 입지유도 정책 가시화

- 주요 중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 생활권을 구성·운영

장래의 인구, 교통, 관광지, 산업 등의 변화에 대처토록 생활권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 및 도시구조 재편될 것이다. 수위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점성을 확보하며, 인접 먼지역으로의 교통 접근성을 체계화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3) 국토연구원(2009), 국토 대예측 연구(I),p164

노후 산업단지·농공단지 및 관광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생산·일자리 중심지로 재편하고, 창업지원, 교류·협력 등 혁신공간으로 조성하여 생활권 계획과 연계토록 한다.

- 주거기능, 도시기능의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고, 분산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지 유도 정책의 가시화

대전시·세종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대도시 근교형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서비스 층축 대안 마련하고, 도심기능 콤팩트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집단화, 도시기능 입지유도를 위한 계획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주거기능과 도시기능의 외연적 확장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분산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도심내의 서비스 거점성을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내부에 과도하게 설정된 상업지역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공간적 압축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전시·세종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미니신도시 개발 및 기존 거점 리모델링 및 다양한 주택의 공급

- 대전시 청장년층 대상 전원생활 모색형 유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 개발
최근 대전시와의 출퇴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대전시의 고차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자연·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수요층을 고려한 미니 신도시 개발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전원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분산적 전원주택공급 수요에 대응한 문화, 복지, 보건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기 위한 전원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도 함께 고려한다.

- 지역내의 대학교, 관광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지와 연계 복합단지로 리모델링
도시공간구조상 특정목적을 수행하던 관광, 산업, 교육기능 중심으로 조성된 기존의 거점지역들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지역사회와의 분리 현상이 발생하여 방치·쇠퇴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절대적 감소, 젊은층의 인구 유출로 발생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 거점대학과 산업기능간의 융복합·연계를 도모하고, 지역내 인적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주, 논산, 금산 등의 캠퍼스의 개방하고, 도심내 대학교 지역 사회연계 Lab 조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새로운 젊은 층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스마트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이크로 그리드화를 도모한다.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주택의 규모 및 시설 수준 정주환경여건 가격등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을 보완하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한다. 도심 내부, 농촌지역 방치된 빈집,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역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슬럼화 방지 및 공동체성 유지한다.

자연과 함께 휴식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한다. 숲, 강변 등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 조성한다.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녹색기술 주거 단지 구현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설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외부 자연환경과의 조화 적용한다. 빗물순환, 생활하수 처리, 폐자원의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주택 건설한다.

- 도시공간의 변화, 교통 수단 다양화에 대응한 주택, 교통인프라 등과의 복합화

공중, 지하 등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확대를 통해 건물의 복합적 이용 활성화 및 첨단 교통인프라 설치하며, 물류·유통 혁신에 따른 지하공간의 효율화에 대응한 공간과 주택 복합단지 조성한다.

③ 공공주도형의 자율적 도시재생 확대 및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 노후주택 관리를 도시재생차원에서 수용 대응

지역내 청년층 거주비율에 대한 조사분석하고, 청년층, 특히 청년 1인가구 주택 자산 형성 과정을 지원(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지원제도 등) 하며, 청년 1인가구 자산형성을 위해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유형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저이용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요계층을 식별하고, 소요계층과 매칭되는 구매가능주택을 공급한다.

- 도심내 전력공급망의 재편 및 기본복지형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 뉴딜전략의 지속 확대 전망에 따라 도심내부의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를 형성하기 위한 도심내 전력공급망의 재편될 것이다. 에너지 충전 스테이션을 조성함에 있어 주민이 일정 지분을 참여하여 소득·편익을 제공받는 기본복지형 에너지 자립시스템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그린에너지기술과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삶의질과 도시 경쟁력이 높은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구현하며, 재생에너지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주민이 참여토록 한다.

④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성장관리형 토지이용 관리

- 농촌형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환경성·농촌다움 제고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택, 축사·창고·공장등이 혼재되는 등의 난개발이 심화되고, 주민의 건강·안전을 보장하며, 농촌성의 매력저하를 초래함을 극복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의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실제 농촌지역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고, 주민의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위해 시설에 대해 집중·이전함으로써 농촌 위해 환경 영향을 저감토록 한다.

- 거점지역내 부문별한 확산방지를 위한 성장관리형 토지이용 관리

토지이용 수요와 남부권의 전략적 방향을 결합한 적합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이 요구된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어하기 위한 농촌형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각 토지유형별 개발행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시기능 입지 유도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⑤ 교통인프라 연계 및 광역교통체계 운영

대전시, 세종시와 충남 남부권간의 연계교통망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와 충청남도 전역과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도권과의 긴밀한 협력 및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는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편리한 환승체계구축, 친환경·스마트 교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전시, 세종시 중심으로 광역간선 급행버스

체계(BRT)를 인접도시로 확대토록 계획하고 있다.

기존 남부권의 시군 중심지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철도, 시외 및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등을 입체적으로 연계운행 할 수 있도록 터미널, 철도,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통합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2) 산업·경제부문

(1) 문제 인식

- ① 충남 남부권은 지역발전 격차발생의 주요 요인인 제조업의 특화업종이 식료품으로 다양하지 않고, 기술집약적이지 않으며, 영세업종이며, 산업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 출하액 기준으로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가장 많은 종사자수를 보유한 시군과 각 시군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업종을 도출하면, 충남 남부권특화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이다.

이러한 업종은 국가주력사업분류표에서 제시한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다는 점인데, 국가 주력산업이 갖는 특징은 고용구조, 산업생산, 창출하는 부가가치 등이 여타 산업에 비해 우위에 있어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산업, 해당 산업의 발전이 타 연관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효과가 큰 산업, 즉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산업, 산업의 질적 수준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으로, 한 국가의 부존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루어진 산업으로 역사성과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 산업 군집의 구성산업 중 중요도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데, 남부권은 이와 관련된 산업이 전혀 입지하지 않고 있어서 산업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표 95〉 충남 시군별 특화업종

구분	종사자수 기준 특화업종		출하액 기준특화업종	
	지역기준 상위	업종기준 상위	지역기준 상위	업종기준 상위
공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논산	식 료 품	-	식 료 품	-
계룡	식 료 품	-	식 료 품	-
금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부여	식 료 품	-	식 료 품	-
청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자료 : 광업제조업조사(산업분류별 주요지표(10명 이상), 통계청, 2020년 기준)

②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인 첨단산업 관련산업은 공주시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 유일하다.

첨단산업이란 반도체·생명 공학·우주 항공·신소재·원자력·컴퓨터·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첨단업종에 대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종 입지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²⁴⁾ 이와 관련하여 충남 남부권의 첨단산업은 공주시가 유일하다.

〈표 96〉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첨단업종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5단위)	업종 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2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
전기장비 제조업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
12개 분야	85

자료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첨단업종)

24)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단위) 기준으로 12개 분야, 85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③ 남부권에 혁신역량 보유실적은 거의 없으며, 인근 대전시, 세종시는 혁신역량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사용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함으로써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고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확산 및 지역별 기술투자 방향, 비전수립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충청권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대전 16,264건, 세종 2,120건의 특허 출원하였다.

지역별 연구원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는 해당 지역의 투자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수립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1,919조 400억원) 대비 연구개발비는 4.64%로 세계 2위 수준이다. 충청권의 연구원 수는 총 연구원의 약 14.4%, 1인당 연구개발비는 183.4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7〉 전국 권역별 연구원수 및 1인당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전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연구원 수		538,136 (165.5)	350,654 (177.5)	7,084 (73.0)	73,258 (183.4)	80,921 (123.9)	24,210 (110.4)	2,009 (86.8)
공공 연구 기관	소 계	40,069 (253.8)	11,350 (189.0)	943 (101.4)	16,746 (324.9)	7,258 (244.2)	3,312 (198.3)	460 (127.6)
	국·공립	6,028 (138.6)	892 (196.0)	470 (85.6)	1,592 (91.1)	1,630 (156.2)	1,237 (143.0)	207 (213.1)
	정부출연	23,933 (326.2)	5,333 (226.8)	138 (225.6)	14,102 (364.5)	3,274 (348.4)	1,025 (267.4)	61 (183.0)
	지방자치 단체출연	1,750 (136.0)	446 (138.1)	179 (121.2)	101 (89.1)	497 (185.8)	453 (114.1)	74 (21.8)
	기타비영리	7,177 (159.0)	3,732 (149.2)	82 (22.0)	875 (164.5)	1,818 (155.9)	552 (278.6)	118 (15.4)
	국·공립병원	424 (42.1)	321 (51.6)	11 (4.7)	16 (6.6)	36 (24.2)	40 (5.7)	-
	사립병원	757 (170.6)	626 (200.6)	63 (11.0)	60 (45.0)	3 (32.7)	5 (12.0)	-
대학	소계	110,619 (66.6)	57,931 (67.6)	3,592 (49.7)	16,011 (66.6)	22,966 (62.3)	9,202 (77.7)	917 (70.3)
	국·공립	43,795 (74.8)	11,817 (77.3)	1,926 (54.7)	10,441 (71.3)	12,304 (72.1)	6,412 (87.5)	895 (71.0)
	사립	66,824 (61.3)	46,114 (65.1)	1,666 (44.0)	5,570 (57.7)	10,662 (51.0)	2,790 (55.1)	22 (41.4)
기업 체	소계	387,448 (184.6)	281,373 (199.6)	2,549 (95.3)	40,501 (171.1)	50,697 (134.5)	11,696 (111.2)	632 (81.2)
	정부투자기관	2,891 (300.5)	519 (267.9)	47 (96.8)	1,653 (382.7)	449 (112.7)	204 (194.0)	19 (136.8)
	민간기업	384,557 (183.7)	280,854 (199.5)	2,502 (95.3)	38,848 (162.1)	50,248 (134.7)	11,492 (109.8)	613 (79.4)

주) ()는 1인당 연구개발비 현황임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기준

-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과제와 전략이 모호함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18세기 산업혁명이 후 생산성과 삶의 질의 획기적 향상과 경제-사회적 시스템 변화를 가져 온 4번째의 산업기술(manufacturing technology)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트렌드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혁신의 가장 큰 특성은 2년마다 CPU 용량이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Moor's Law)과 18개월 마다 디지털 카메라 픽셀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핸디의 법칙(Handy's Law)와 같이 혁신이 기하급수적 속도 (exponential speed)로 "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의 혁신이 또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연쇄적으로 "융·결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융·결합적 혁신은 독자적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하나의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범 학문적 분야"의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특성이 있다.

〈표 98〉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과 융합기술혁신의 특징

구분		주요 내용
3대 분야 핵심 기술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기술	IoT, 블록체인, 공유경제기술 로봇공학, 3D프린팅, 무인운송기술, 신소재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기술혁신의 특성	가속적 혁신 융합적 혁신 범 학문 분야의 융합기술혁신	Moore's Law, Handy's Law, 기하급수적 속도 인터넷+컴퓨팅 결합, 개별기술/제품간 결합 독자적 작동원리 분야의 경계를 넘어 모든 학문분야 융합기술의 혁신 초래

자료: 김용웅(2018), 전개서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특성은 융합기술혁신에 따른 생산방식의 획기적 변화로 부의 창출 원 변화, 자원관리 및 소유 형태변화와 함께 경제적 작동원리뿐만 아니라 거래방식과 비즈니스 조직 형태까지 전반적인 경제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 인간 통제 기계생산 → 지능형 기계의 자동생산
- 물리적 현장생산 → 가상공간연계 생산
- 중심거점 내 집중적 생산 → 거리 분산생산 (maker space 창출)
- mass production → mass customization으로 생산방식의 변화하고, 부의 원천변화는
- 토지, 물적 자원 → 정보, 지식 및 기술자원로
- 제품생산 및 판매 → 서비스 판매(비행기 엔진/물류정보 등) 자원관리, 소유형태는

- 자원의 독점적 지배 → 지식정보의 만인화
- 배타적 소유 필요성과 수요 → 공유와 수요충족(소비) 수요 증대경제성 원리와 비즈니스 모형은
- 규모의 경제 → 네트워크 경제
- 완제품 일괄생산 → 부품형 모듈 분산생산, 공동 활용 기술 플랫폼 가치 증대
- 중앙집중형 → 분산형 참여모형: 계층구조
- 지시·통제, 비밀주의→ 수평적, 개방적, 자율적
-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변화(송두범외, 2018)

따라서, ICT 기반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발전정책에선 제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의 기회요인의 극대화와 부정적 파급효과의 극복방안을 지역의 제도 및 재정적 한계에서 실천이 가능한 전략과 시책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지역은 새로운 융합기술혁신을 위한 R&D 촉진이나 관련 미래 산업 육성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용한 첨단융합기술을 지역 내 농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 등 서비스 산업에 접목하여 이들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촉진하여 이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치중하고, 가용한 첨단기술을 주택과 도시 인프라 및 각종 공공 서비스 공급에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관련 ICT산업을 육성토록 해야 한다. 이밖에 지역특화 R&D와 신기술 혁신산업의 육성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 ⑤ 국가경제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차별성 인식 미흡으로 인한 정책영역의 혼란을 발생함에 따른 정책영역 명확화 필요하다.

지역경제는 지역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융합기술 혁신 촉진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간 균형적 산업경제발전을 방향으로 설정하지만, 국가경제정책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다만,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국가정책을 지역적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전략과 시책을 마련 하여 국가경제정책의 지역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치중할 필요성은 있다.

일례로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제시한 전략산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메타버스 융합클러스터, 초와○역 소재부품 클러스터,

미래 신소재개발 R&D 플랫폼, 가속기 연계 R&D 플랫폼, 지방투자 금융체계 강화 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차원의 새로운 경제를 육성하고, R&D, 지식정보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국가경제의 영역에 속한다.

〈표 99〉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차별성

구분	국가경제	지역경제
목적	경제현상에 대한 거시적 진단과 대응	지역산업 및 경제현상의 실질적 문제와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
목표	장기적이고 생산과 수요 및 산업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	단기적 현안적 문제해결과 지역주민 및 지방기업의 체감형 정책대안 마련
	새로운 산업의 육성	기존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진 등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형 정책 추진
공간	비공간적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	지역내 생산연계와 지역화 및 지역내 소비 진작 및 생산-소비의 순환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대응	융합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R&D,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	첨단정보기술의 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용과 활용방안
기업	투자의 효율성과 국가의 산업경쟁력 증진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술혁신과 생산 확대에 집중	주민의 취업 및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업의 생산성 향상과 활성화에 집중
대상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 및 금융정책 등 산업과 경제 활성화	농업, 상업, 제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재정 및 행정 지원과 입지여건 개선
효과	총량적 생산과 투자의 확대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경제정책 촉진사업)
우위성	육성산업과 기술의 국제적 상대 우위성 선점	지역의 자원, 입지, 우위성을 중시

자료: 김용웅(2018), 지역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저자 재정리

(2) 정책과제

① (신산업) 산업집적지의 형성과 연계·협력 장기적으로 추진

충남 지역산업의 공간적 집적 특징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집중되어 있고, 서산, 당진 등의 서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경쟁력 있는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간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또는 연계산업을 선정하고, 신산업 집적지 형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균형, 양극화 원인의 시발점인 산업화, 경제성장 미흡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육성하고, 지역내 수용태세 마련이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민간주도의 전략산업의 경우, 대부분 고차, 고임금, 고학력 인력의 경향을 보이고, 산업시설이 입지하더라도 공장 자동화로 인한 지역내 인력수급 측면에서 지역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저발 전지역은 근로자 수용 태세, 직주분리로 인한 지역내 안정적 정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요구된다.

인력 공급, 고급 문화서비스 제공 미흡, 교통서비스 불편, 타 수위도시 대비 높은 지가 등으로 정주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인력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충남 남부권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하고, 대전시, 세종시산업과 연계성을 지닌 상호 보완적인 산업이어야 한다. 신산업은 메가시티에서 지향하는 발전 목표와 연계성이 높으며, 과학기술과 지역의 자산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충남 남부권은 기존 주력산업인 국방산업의 스마트화, 지역 특화자원 활용형 신산업화, 치유 및 바이오산업, 광역유교관광 등을 추진이 유력하다.

공주시는 천안·공주 산업벨트, 첨단소재 중심 R&D 창업공간 조성, 첨단소재산업, 바이오 소재산업, ICT 융합산업, 에너지 관련 산업등이며,

논산시, 계룡시는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충남국방벤처센터, 국방기술기획평가원, 방위산업진흥원, 국방국가산업단지 등 조성 한다.

부여군과 청양군은 농업, 산림 바이오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금산군은 인삼 기반의 농축산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은 대전, 세종의 바이오메디컬산업 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 추진될수 있도록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표 100〉 충남 남부권 및 대전,세종 주요 전략산업

구분	지식산업	미래전략산업					관광산업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의료·의약·뷰티	에너지 (수소·태양광·이차전지)	농업	
대전	ICT 융복합 ²⁵⁾ 국방ICT ²⁶⁾ 지능형 이동시스템 (미래차, 드론, UAM) 기술이전 및 사업화	스마트부품 AI/로봇 SW모듈 지능화 HW모듈 연구부품장비 태양광 및 풍력 관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메디컬(의료기기, 신약,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건강기능식품소 재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소부장) 이차전지 ESS		

구분	지식산업	미래전략산업					관광산업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의료·의약·뷰티	에너지 (수소·태양광·이차전지)	농업	
	중이온가속기 R&D	소부장					
세종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실감형 콘텐츠 ICT 융복합 실증	첨단수송기기 부품 스마트그린 소재부품		바이오메디컬(의료신소재)			
공주		첨단소재부품 섬유·화학				농업산림	역사문화 (세계문화 유산) 생태관광
논산	국방ICT 국방R&D 국방산업 스타트업 지원					농축산 바이오	근대문화유산 유교문화 마리나 (탐정호)
계룡	국방ICT						MICE산업 국방안보관광
금산	국방ICT					융복합 농업(인삼) 농축산 바이오	산림치유 (국립자연 휴양림)
부여		농업바이오 소재				융복합 농업(굿뜨레)	역사문화 (세계문화 유산)
청양		산림바이오 소재				융복합 농업 산림생명산업	생태관광

• 도시산업단지 조성의 개념 정립 및 유형별 적절한 입지선장개발(이현주, 2022)

4차산업혁명 및 산업생태계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적인 진화와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 유연성과 기능 융복합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바, 미니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간의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를 동시 고려하여야 한다.

미니산업단지는 도시내 증가하는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활용 도시공간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소규모 산업단지(1-10만㎡)를 적극 도입하여 복합기능공간으로 활용하고, 특화기능 집적 유형은 R&D 허브단지, 3D프린터 제조단지 등으로, 특화업종 집적 유형은 드론벤처 미니산단, 농산업 미니산단 등으로, 테마중심 집적단지는 농축산

25) 4차 산업혁명 신기술(IoT, 5G, 무선플랫폼, 빅데이터, AI, 지능형 기계·장비)

26) 드론, AR/VR, 로봇, 웨어러 플랫폼, UAM

바이오 복합단지(R&D + 제조 + 판매·체험 + 교육 + 관광)으로 조성한다.

네트워크형 산업단지는 기존 단일공간 집적형태의 산업단지를 다수의 공간에 분산 배치한 분산적 집중형태로 조성하며,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호 보완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제고한 형태이다. 건물연계형은 용도전환 공공건물 + 벤처지원 건물 + 창업보육시설을, 토지연계형은 난개발 공장집적지 + 미개발 공원 일부를, 복합연계형은 기존 노후산단 + 이전적지 + 창업보육시설을 조성한다.

②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기존 지역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구조 개선 및 디지털화

저발전지역내 수위중심지는 음식, 도소매업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산업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지만, 지역내 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업 전환 노력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서비스업으로 이전하더라도, 폐업율이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는 온라인 E 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인하여 지역내 전통시장, 상점가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 이익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농어업에 생산력, 판매 다양화, 서비스 질 개선 등의 체질개선 시급하다. 저차 중심지,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농어업은 고령화 및 인력공급의 외국 노동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경쟁력은 감소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업외 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로서, 농업 부문의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혁신은 기존산업의 쇠퇴화와 대량실업의 발생과 함께 전 생산 및 산업분야의 자동화로 일자리 축소라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으로, 지역 경제정책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 하에 지역쇠퇴산업의 쇠퇴산업의 구조 조정과 산업전환을 지원, 촉진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자동화 및 융합기술혁신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 특히 기존 취업인구의 재훈련 체계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산업별 생산성 향상 도모
- 농축어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촉진(스마트 팜)
- 전통시장 및 도소매 분야 디지털화 촉진

- 중소기업분야의 자동화 촉진
 - 산업별 협력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화 촉진방안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화폐 및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촉진
-
- 삶의 질 분야 정책 과제로는 급격하게 쇠퇴하는 건설업의 기술 이전 및 적용
 - 주택, 건축물 재생에너지 기술보급 확대
 - 스마트홈, 건물, 생활분야 스마트기술활용확대
 - 도시 인프라, 서비스 행정관리 디지털·자동화
-
- 노동집약 루틴화 산업 구조 조정 및 산업전환
 - 노동집약 쇠퇴산업 구조조정과 산업전환 지원
 - 쇠퇴산업 기술고도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
- 취업구조 변화와 재훈련
 - 하드 스킬 위주 일자리 감소 대응 산업인력 재훈련
 - 산학협력 창의적 인력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 일자리 부족 시대 종합대응
 - 미래형 일자리 창출 : 고령화와 생활스타일 변화 관련 신규 일자리, 빅데이터, 디지털기술 및 사회적 기술, 복합문제 해결 전문인력 양성
 - 무임일자리 상품화/job sharing

③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비즈니스화 확대

농업과 타산업의 연계, 농촌자원과 도시 간의 직간접인 연결 등 농업의 6차산업화, 로컬푸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농업의 비즈니스화 확산 -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는 농업을 비롯해 농자재산업,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외식산업 등 농업에 기초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후방산업을 포괄적으로 연계해 농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부권의 대부분의 농산업에서 나타나는 1차 농산물의 수요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점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농촌지역에 귀속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농업 비즈니스화 추진 확대되는 추세이다. 농업의 비즈니스화는 경영주체에 따라 농가, 농협 등 생산자그룹이 주도하는 농가주도형과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 그룹이 주도하는 농업비즈니스화는 추진형태에 따라 수평적 다각화와 수직적 다각화로 구분되며, 수평적 다각화는 단작화에 따른 투입의 제약성, 가격이나 수량 등 급변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복합경영을 통해 품목의 다각화(농업, 축산, 시설농업 등의 연대를 통해 연중 경영)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직적 다각화는 농업을 토대로 가공 등 2차산업과 직거래를 포함한 유통, 외식업, 농촌관광 등 3차산업으로 비즈니스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복합화가 확대되면서 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팜, 농약살포 드론 등 정밀농업기계 보급 확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산물 품질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등 기대된다.

스마트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출하량 조절, 개인맞춤형 농산물 주문 시스템 도입,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직거래 확대 등 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환경 변화 촉진 기대되고, 소셜 네트워크에 기초해 규모화·집단지화 등 경제공동체 개념이 확산되고, 농지·주택 등 농촌자원을 공유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모델 확산 기대된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기술의 국내 농업 적용은 스마트팜 위주로 확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7.9% 증가, 1인당 생산량 40.4% 증가, 고용 노동비 15.9% 절감, 병해충·질병 53.7% 감소 등을 통해 농가 총수입이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지식산업정보원, 2018)²⁷⁾. ICT 융합 스마트팜 기술개발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2세대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인공지능이 첨가된 3세대 기술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7) 지식산업정보원(2018), ICT기반 스마트농업 전망과 기능성식품/발효산업 연구동향

〈표 101〉 한국형 스마트 온실 추진 단계

구분	1세대	2세대	3세대
의사결정(제어)주체	관리자(사람)	컴퓨터 + 사람	컴퓨터(인공지능)
목표(효과)	편의성 향상	생산성 향상	플랜트 수출
주요기능	원격 모니터링 + 제어	지능형 정밀생육관리	전과정 시스템화 / 자동화
기술개발 내용	기존기술 + ICT적용	1세대 + 빅데이터 생육 모델 화용 정밀 생육관리 기술	2세대 + 로봇·무인자동화 및 지능형 시스템 통합 제어 기술
투자비용	낮음	중간	높음

자료: 농업진흥청 제출자료(2016.12)

재인용: 지식산업정보원(2018). ICT기반 스마트농업 전망과 기능성식품/발효산업 연구동향 .

- 청년 신규 취농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진입장벽 해소

이주 초기 젊은 귀농인과 청년 신규 취농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생계, 농업 교육훈련, 영농기반 등 청년 신규취농의 3대 진입장벽 해소 - 일정한 교육훈련을 거친 청년 귀농자를 대상으로 자본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초기 진입을 원활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농촌 정착 초기 단계의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 지원 - 교육훈련 중에 있는 청년 신규 취농자에 대한 영농창업 인턴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및 확대 추진한다.

농업경영이양 촉진 정책 강화 - 농업 부문에 신규 진입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등 영농기반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기존의 경영이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체계화 - 농지 유통화와 관련하여 농지은행의 청년 농업인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 농식품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대응책 마련 -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등 포스트 휴먼 사회의 기술이 농식품산업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와 대응책 마련 필요하고,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예측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이 식품생산, 유통, 소비자, 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과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필요하다. IT 기술을 이용하여 식품 공급, 유통, 서비스 등에 대한 각 데이터가 수집되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한 식품 평가 및 정보 공유가 소비자들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통계 등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기존 전통식품 중심의 정책에서 일반·가공식품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국산 식재료 사용 활성화, 식품 포장 및 기자재 등 식품정책 외연 확대 필요하다.

농식품 기업이 지역으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면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 및 역량 개발과 기업의 생산비용 및 유통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식품기업이 농촌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및 경영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판로개척을 촉진하여 해당 지역의 진흥을 유도 - 농업의 신수요 창출 및 식품산업 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 농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R&D 추진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책 및 지원체계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와 기존 식품산업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식품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제적·사회적·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한다.

식품산업은 기술적인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산업적 적용에 대하여 소비자의 시각에서 예측하고 선제적 대응책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사례 확대를 위해 농가에서 성공적으로 생산한 농식품 생산데이터를 공유하는 남부권 차우너의 플랫폼 구축과 함께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자료, 성과물 등에 대한 신뢰도 향상시키며, 빅데이터 시장의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이 투자하여 구축한 공공데이터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지원한다. 공공데이터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 연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함이 요구된다.

-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관장할 수 있는 농산업 허브기관의 구성·운영이 요구된다.
(일명, 충남 (남부권) 농산업 진흥원)

농업분야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R&D기관과 충남도 농정국을 포함한 행정기관이 연계하지만, 기존의 시군단위별로 추진하던 기존 업무를 고도화하고, 규모화 하는 한편, 신규로 요구되는 R&D산업을 시군에게 일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농산업 전체를 관장하고, 시군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가칭) 충남 농산업 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별도로 요구된다. 한편, 기업과 농업의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한 모델 발굴 및 홍보도 요구된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에서 수행되었던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해 기업과 농업의 공동 수익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모델 발굴 및 홍보 추진하며,기업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농업계와 협력사업 추진토록 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농식품 산업 육성하고,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형 식품포장·유통 등 안전기준 및 규격 기술, 식품 품질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존성 향상 및 유통 효율을 위한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 구축 기술, 식품의 전후방 연계사업 확장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 식품 기자재·포장 기술 개발 등에 우선되어야 하며, 외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외식경영 표준 프로세스 개발 및 자가 경영진단 시스템 구축과 경영 컨설팅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식기업 창·취업 박람회 개최 및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한식 건강 식단 및 식재료 개발, 식자재 및 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진단 기술 개발, 푸드테크 활용 확대를 통한 외식서비스의 다양화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시켜야 한다.

3) 문화·관광부문

(1) 문제 인식

- ① 다양한 관광지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호간에 연계되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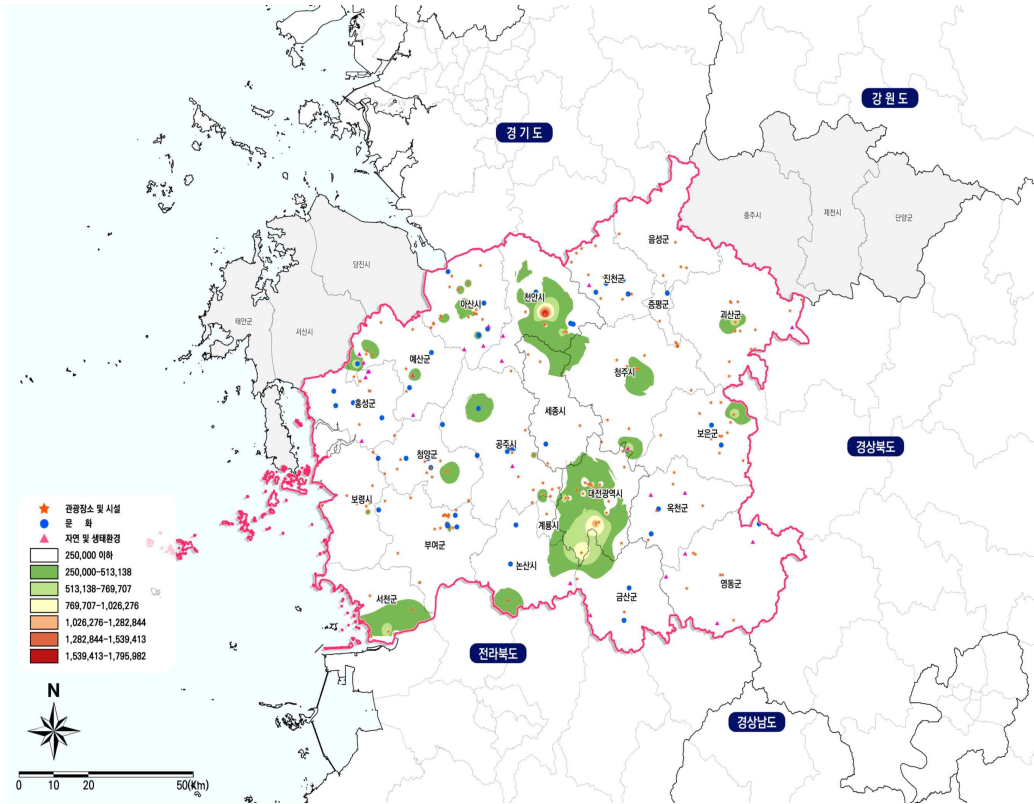
관광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류된 주요 관광지점 중 지자체 관광진흥 정책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표지점은 선정하고, 주요관광지점은 ‘관광장소 및 시설’, ‘문화’, ‘자연 및 생태환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전시, 세종시의 주요관광지점별 관광객수에 의한 관광거점은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과 뿌리공원이다.

관광지점별 관광객수에 의한 영향권 범위를 분석해 보면, 주요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지점들이 각각의 관광권으로 묶여지고 있으며, 그 외 경우 주변과 연계되는 관광지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연계관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거점의 육성과 더불어 주변 연계관광프로그램 및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표 102〉 남부권 주요 관광지점

구분	주요 관광지점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갑사, 동학사, 병사골, 상신, 신원사지석굴, 천정), 고마아트센터, 골드리버CC, 공산성, 한옥마을, 산림휴양마을 목재체험관, 국립공주박물관, 마곡사, 석장리박물관, 송산리 고분군, 수리치골성지, 웅진백제역사관, 임림미술관, 자연사박물관, 풀꽃문학관, 프린세스 골프 클럽, 황새바위성지
논산시	관촉사, 명재고택, 대둔산, 백제군사박물관, 선사인랜드
계룡시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
금산군	개삼터공원, 보석사, 산림문화타운, 역사문화박물관, 인삼관, 에딘버러 컨트리클럽, 칠백의총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 굿뜨래웰빙마을 글램핑, 능산리고분군, 롯데리조트, 롯데스카이힐부여CC, 만수산 자연휴양림, 무량사, 백마강레저파크, 백제문화단지, 백제보 금강문화관, 백제컨트리클럽, 부소산성, 국악의전당, 생활사박물관, 청소년수련원, 기와마을, 유람선선착장, 사비도성 가상 체험관, 서동요테마파크, 신동엽문학관, 인삼박물관, 정림사지, 홍신동헌
청양군	고운식물원, 다락골 줄무덤, 모덕사,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알프스마을 (도농교류센터), 장곡사, 천장호 출렁다리,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송의 청소년수련원, 고추문화 마을, 동강리오토캠핑장, 칠갑산오토캠핑장, 칠갑산도립공원(산장로), 칠갑산자연휴양림, 칠갑산 천문대

자료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20년 기준



자료 : 행복청(2022),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그림 43] 주요관광지점 입장객수에 의한 영향권

②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호텔업은 공주, 부여에 2개소로 매우 미흡하고, 대전시, 세종시에 비해 낮은 관광수용력을 보인다.

관광호텔업은 대전시 17개소, 충청남도 27개소이며, 남부권은 4개소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등급 중 1성급 2개소이며, 상위등급인 4·5성급 호텔은 없다.

공주시의 관광호텔은 호텔힐리데이계룡산(공주시 반포, 53객실), 공주 하숙마을(공주시 반죽동, 7객실), 부여군의 관광호텔은 백제관광호텔(부여군 부여읍, 85개소), 호텔롯데(부여군 규암면, 322개소)이다.

여행업은 남부권에 241개 업체가 있으며, 공주시 77개, 논산시 45개, 계룡시 15개, 금산군 34개, 부여군 52개, 청양군 18개개소로 대전시 593개, 세종시 105개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현황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천석 이상되는 공연장은 없다.

〈표 103〉 관광호텔업 등급별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기타(*)
대전시	17	1	3	6	1	-	6
세종시	-	-	-	-	-	-	-
남부권	4	2					2
공주시	2	1	-	-	-	-	1
부여군	2	1	-	-	-	-	1

주) (*)은 기간만료, 등급없음, 심사중, 판정 보류, 휴업중, 미지정 등
 자료 :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기준

〈표 104〉 여행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일반	국외	국내	국내외
대전시	593	88	271	234	-
세종시	105	17	33	30	25
남부권	241	8	78	85	70
공주시	77	-	24	29	24
논산시	45	2	16	15	12
계룡시	15	1	5	5	4
금산군	34	1	10	12	11
부여군	52	4	17	17	14
청양군	18	-	6	7	5

자료 : 각 지자체 통계연보

③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로 생태계 혁신 요구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 종사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소당 종사자수는 14명에서 8명대 이하로 감소하였고, 종사원 1인당 매출액도 지속적인 둔화추세이다, 이마저도 제주도를 비롯한 대표 관광지를 제외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근원적인 이유는 영세한 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매출 10억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86%를 상회하고 있다. 종사자 10명 미만이 82.6%, 비정규직은 20%대를 돌파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 영역은 숙박, 항공, 식음료, 여행사, 관광지였으나, 최근의 융복합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의료, MICE, 문화예술, 스포츠, CTS, ICT, 제조업으로 확장되었지만, 이러한 영역에 대한 관광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관광 디지털화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관광목적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평균적인 여행자가 50회의 온라인 검색, 38개의 웹사이트 방문, 12개의 리뷰 검토, 15주간 자료 검색하여 관광목적지를 결정함에 따라서 수요자의 구매 욕구를 촉발하지 못하는 미흡한 콘텐츠를 갖고 있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쇠퇴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하는 거래액 중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른다.²⁸⁾

한편, 정부의 관광정책은 스마트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분야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지만, 남부권의 관광형태는 아직 전통적인 시설중심의 공급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계를 맞고 있다.

(2) 정책과제

① 외부 영향에 민감한 관광서비스업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적응 태세 마련

관광은 외부 경제 및 환경에 매우 민감한 분야이고, 그 변화는 세계적, 전국적 수준의 흐름으로 지역내의 콘텐츠, 서비스 수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있다. 한편, 음식 서비스업의 형태가 고급화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고령화, 인식 변화 지체, 시설 개선 미흡 등으로 한계를 노정하는 상태이다.

지역관광은 지역성을 기반으로하는 교류활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성, 경제성, 주체성, 혁신성이 담보되어야지 현재의 패러다임을 따라갈수 있다. 지역성은 지역의 총체적 요소, 지역성을 판매하는 것 지역다움, 고유성의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정체성을 담은

28) 2019년 2월 기준, 온라인 쇼핑에서 총 9조 5,966억원 중에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1조 3,296억원, 1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4.4%를 차지한다.

브랜드 전략이며, 경제성은 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객 유치하여 관광수익의 지역내 순환하는 것이며, 주체성은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 주민 삶의 질 향상, 시민의식의 성숙 주민의 참여와 주도, 애착과 긍지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창조와 교류를 도모하고, 혁신성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대응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광니즈와 형태에 대응한 공급전략 경험중시, 개성과 진정성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심원섭, 2019)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 파워가 지역 관광 경쟁력의 근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콘텐츠의 생산·활용, 체험을 파는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105〉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전환

구분	현재	미래
인력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관광서비스인력 양성 중심	창의력에 기반한 기획과 전문인재, 산업간 연계 융합인력 양성
자원	노동, 하드웨어, 자본에 의한 대규모 고비용 저효율의 요소투입형 관광자원 개발	재구조화, 재개발, 재생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관광자원 개발 지원
추진체계	개별 관광주체간 수직적, 물리적 연계	다양한 관광주체간 수평적, 화학적 협력관계 형성
환경	양적 성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구축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지식, 콘텐츠, 기술 등에 기반한 융합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조성

자료 : 심원섭(2019), 전제서

• 관광 역량 구축을 위해 지역 청년, 주민, 관광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인적 플랫폼 구축

물리적 관광시설 개발방식 가급적 지양, 지역관광의 역량 확충 필요이 지역관광 활성화의 첫발이다. 관광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하여야 한다. 창의적 사업기획, 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훈련,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한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는 훨씬 진보된 인적 역량이 갖춰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관광혁신역량플랫폼으로 지역관광협의회 활용을 활용하고, 지역단위 관광 발전 혁신 주체(지역관광기획가 등)을 양성하고, 지역 단위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창업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며, 관광 분야 산관학 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한다.

• 새롭게 부상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의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숙박, 항공, 식음료, 여행사, 관광지 등의 전통적인 관광영역에서 융복합 관광산업은 엔터테인먼트, 문화콘텐츠, 의료, MICE, 문화예술, 스포츠, ICT, 제조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바, 지역특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주민주도형 지역관광생태계 조성하고,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생태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화 요소 활용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산관학 연계형 지역관광 혁신클러스터 육성,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구축 (관광벤처 육성, 지역관광혁신센터 등), 지역주민, 소상공인 연계 관광생태계 육성(관광두레 등), 창의,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육성이 요구된다.

•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사업 추진

지역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개발 사업방식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관광사업 모델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가 주도함에 따라서 지역 특화 자원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며, 지역주민의 관광창업까지 고려한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광은 관광객에게 지역민의 안방을 내어주는 형태였다면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사업은 지역주민 관광 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시도하여야 한다.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에 의거한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광은 도시관광에 접목이 가능하고, 일본처럼 소도시 관광에 접목이 가능하다.

• 문화예술의 진흥과 함께하는 도시관광

도시관광은 다양성을 추구하나 발전과정상 유사한 관광환경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도시관광은 문화·예술산업이 중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문화·예술을 집적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관광은 수요창출을 위한 개발전략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서 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마케팅하는데에 매우 효과적이다.(이영주 외, 2004) 현장에서 도시관광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관광은 대부분 관광지를 도시내가 아닌 경관 우수지역, 해안가 등에 입지함에 따라서 지역내의 소재지로 관광 소비효과가 전달되지 않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소도시, 시골관광**

남부권의 면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멸·회박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면지역의 시골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자연환경, 역사, 이야기 거리에 기반한 지역특색이 잘 드러나는 곳이며, 난개발 없이 자연경관을 대체로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도시,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더 작고, 더 깊으며, 더 정감 있고, 낭만적인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② **관광분야 연계개발 및 공동 마케팅**

고부가가치 여가시장의 확대 및 양질의 관광콘텐츠 소비가 증가 추세이고, 다양한 개성적 휴가스타일을 추구하며, 고령화로 인한 실버관광이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생활권 내 여가관광의 일상화와 자연친화 관광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남부권은 청주공항, 세종시를 통한 관광객 유치의 전진기지적 입지로 중요하며, 미래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개선으로 인한 광역교통망의 구축에 유리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공공 중심의 다지역간 관광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다지역 관광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사전 협력 TF구성, 협력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과 공동협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역관광코스 발굴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등을 통해 소도시 자원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을 도모한다. 또한 지역 간 또는 주요거점 간 연계도로망을 활용한 네트워크 관광 상품 개발은 연계도로망 주변 지역의 농어촌 체험 관광상품을 연계패키지화하는 방안과 도로망 자체를 관광도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광역관광 주유 루트 형성 및 촉진**

관광객의 지역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 촉진한다. 남부권내에 걸친 테마성과 스토리성이 있는 매력 있는 관광지역을 네트워크화하고, 내방객에게 여행자의 주유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 촉진사업은 각각의 광역관광주유루트의 실시 주체가 여행객에게 소구력 있는 콘셉트에 맞게, 복수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주유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코스를 제시하는 것으로, 각 루트별 추진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된 주유 루트는 각각의 콘셉트에 부합토록 백제문화, 누정문화, 종교문화, 정신문화, 유교문화, 불교문화 등 각종 관광계획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대전시, 세종시와 충남도가 함께 홍보·마케팅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③ 음식 서비스 품질 제고

• 맛, 음식, 식문화가 관광과 접목되어 관광의 중요 요소로 작용토록 음식문화를 개발

음식은 숙박 시설과 함께 관광지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관광에서 음식은 관광 매력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여행자에게 관광 유인이 되고, 여행자의 관광 체험이 된다. 방문지 선택시 주요 요인으로 이미지, 볼거리, 음식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동거리나 경비가 여행지 선택에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여행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행비용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국내여행 1인 평균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관련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식관광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는 자치단체로는 제천시와 대구시가 대표적이다. 제천시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음식 전문 부서인 관광미식과²⁹⁾를 신설하고, 미식투어 코스 개발 및 맛집을 점검하는 암행조사 등의 시책을 실시하였다. 세명대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연계하여 미식관광학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대구시는 2019년부터 미식분야 관광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인 '잇히어로'를 운영하고, 2020년에는 미식관광 특화 창업교육을 시행하였다.

29) 제천시 미식관광과는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미식마케팅팀, 드림 팸랜드팀으로 구성된다.



모집대상

- 대구에 기반을 둔, 만 19세~39세의 청년 중 관광 분야의 창업 희망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창업을 진행한 초기 창업자

모집기간

- 2020년 2월 14일(금) ~ 3월 1일(일)까지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관광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 세부 커리큘럼 및 신청서 제출방법 등은 홈페이지 참조

교육생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 자부담 없음, 교육생 전원 250만원 상당의 교육프로그램 무료 지원
- (인큐베이팅 캠프) 총 5회의 현장 답사 및 창업 전문가 초청 캠프 프로그램 지원
- (연계사업 지원) 교육생 전원 대상 '3대문화 스타트업 공모전' 지원서류 컨설팅 제공
- (포상) 대구광역시장상·대구관광부로 대표이사상 각 3명 산발
- (우수 수료생) 총 4,000만원 상당의 일대일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수료증) 80% 이상 수료 시 수료증 발급

'미식관광'의 창업 범위는?

음식을 기반으로 대구의 식문화, 특산물, 3대문화(전통문화) 등을 아우르며 다양한 형태로 대구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라면 모두 가능

교육과정

구분	일정	교육내용
미식관광 전문가 과정	8주 교육 (수·야간, 토·일 운영) 3월 11일(수)~4월 29일(수)	관광 콘텐츠 기획 및 미식관광 트렌드 교육, 상품화 브랜딩 및 창업 기초 교육
미식관광 창업 캠프	2박 3일 4월 중 시행	미식관광 신진자 견학(타지역) 및 전문가 초청 창업 캠프
사업화 인큐베이팅	5월~6월 중 시행	우수 수료생 아이디어 중심 일대일 사업화 지원

[그림 44] 대구시 '잇 히어로' 모집 포스터

전남 신안군은 맛의 예술섬을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였다. 식자재의 생산, 관광 클러스터 형성, 로컬푸드와의 접목, 식문화 교육과 전문 인재 양성, 향토음식 개발과 스토리텔링 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전남은 토속음식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며, 인천은 섬 주민 대표 음식을 개발하였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미식이 있을 정도로 음식은 창의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³⁰⁾ 네트워크에는 공예, 민속예술, 문학, 영화,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미식이라는 7개 분야가 있다. 미식분야에는 23개국 36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주시가 가입되어 있다.

30)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유네스코가 2004년 10월부터 지역, 소득 수준, 역량, 인구규모가 다양한 도시들이 그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 산업의 영역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가입된 도시를 말함

- **특산물 활용한 치유음식 개발 및 인적자원 육성하고, 외식 상품을 개발**

특산물과 연계하여 우수한 먹거리 보장 및 지속성 강화하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공동체 형성한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 실습과 실무 교육을 시행한다.

충남 남부권의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외식 메뉴개발하며, 남부권에서 생산되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품화, 포장재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한다. 남부권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가치 조명과 음식 문화 인식 제고하며, 음식문화 자원의 산업화 및 고부가가치화 전략 모색한다.

④ 광역·지역간 DMO 조직 구성·운영

관광객들은 단일 서비스만 요구하지 않고, 여러 서비스를 동시다발로 요구함에 따라, 지역에서는 다양한 관광관련 사업자를 조정 가능한 기능이 필요하여 설립하게 되었고, 최초의 DMO는 1864년 스위스 센모리츠에서 설립되었으며, 전세계 1만여개 이상의 DMO가 존재한다.

일본형 DMO는 지역관광의 매력도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의미하나, 일본형 DMO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를 연계하며,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관광지역 만들기를 실시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법인을 총칭하는 말이다. 일본 DMO는 다양한 관계자의 합의를 형성하고, 각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명확한 컨셉 및 전략을 책정하고, 관계자가 실시하는 관광관련 사업과 전략의 융합성에 관한 틀을 만들고 사업자를 지원한다.

DMO는 각 지역의 주민·행정기관·교통사업자·음식점·숙박시설이 망라돼 관광 유치 전략을 짜는 법인이라고 할수 있으며, 규모별로 복수의 광역 단체로 된 광역 연계 DMO, 광역단체 단독이나 기초단체 연합인 지역연계 DMO, 기초단체 단독의 지역 DM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준 정부조직인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 컨벤서 뷰로와 민간의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를 연계하는 관광협의회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DMO는 DMO 핵심사업, 기획사업을 지원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지원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육성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인 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일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다.

〈표 106〉 한국형 DMO의 주요 기능

구분	주요기능	주요내용
관광사업기획/계획	계획수립/사업기획	· 관광진흥계획 수립, 행정의 계획수립 지원 · 관광사업을 기획, 행정의 부문별 계획 수립 지원
	관광관련 조사연구	· 각종 관광관련 조사연구
	지역 관광사업평가	· 목표(KPI)설정 및 성과관리
관광홍보마케팅	관광데이터수집	· 중점시장 설정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주요 관광시장 마케팅 분석
	마케팅전략수립	·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집계, 관광객행태,만족도조사
	국내홍보 및 프로모션	· 지역관광 마케팅 실행 등
	국외홍보 및 관광객유치	· 국외 관광 마케팅 직접 실행(국외인플루언서팸투어등) · 국외 관광 마케팅 협력 실행(NTO,RTO협력박람회등)
관광자원관리	관광자원 및 관광지관리	· 지역관광 자원 및 관광지 관리
	관광상품 및 콘텐츠개발/관리	· 역사박물관 VR체험관 조성, 농박프로그램, 관광패스, 역사유적 야간경관 프로그램, 박물관 오감체험전시회 등
	축제지원 및 운영	· 지역축제 지역내 역할분담 및 갈등조정 등 지원기능 · 지역축제의 운영을 상시사업으로 시행
관광산업지원	관광비즈니스 창업/육성지원	· 관광펀드 조성 및 창업 지원 · 마을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관광비즈니스 컨설팅지원	· 관광비즈니스 컨설팅 운영(전문가멘토링,법무,세무,회계컨설팅 등) · 지역 관광상품/특산물 판로개척 지원
관광품질관리	관광산업 품질관리	· 숙박/음식/쇼핑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지역적 대응강화 - 한국관광품질인증 취득지원, 바가지요금퇴치캠페인등
	관광안내서비스 등	· 관광안내소 운영 및 안내체계 개선

자료 : 심원섭(2019), 전제서

4) 연계·협력 부문

(1) 문제 인식

① 지자체간의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 협력이 중요

최근 지역간 불균형과 정책갈등, 지자체간 중복투자와 소모적인 경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지자체간에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지역개발 협력모델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지역간 공동발전 정책목표로 설정할 정도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지역간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자체간 공동발전 및 협력프로그램은 지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갖추고 있다. EU에서는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INTERREGⅢ을 운용되었고, 미국의 경우 지자체간 협력법(Interegional Cooperation Act)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② 지자체간 연계협력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합의된 협력사업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박양호 외, 2004; 진영환, 2005)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잘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단일사업보다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는 사업이 공동의 관심을 유발하기에는 더욱 적합하다. 그리고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커서 양보가 곤란한 일발성 대형사업보다는 복수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경험을 학습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참여 지자체의 필요를 바탕으로, 참여주체들이 지역간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지역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유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의사결정권자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한편, 민선자치단체장의 의향과 리더십에 너무 좌우되지 않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 실무진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간의 과열경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공동추진을 기본으로 하되 주관 지자체를 윤번제로 교체하여 주도권 경쟁을 예방하는 방식의 채택도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단체 등간의 교류와 협력도 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지자체간 연계협력 성과는 공유되어야 하며, 경쟁요인은 조속히 제거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간 공동사업으로 연계 되는 세외수입, 예산절감, 중복투자 방지 등 편익의 가시화는 발의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장은 물론 담당 실무진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은 차후의 다른 협력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협력사업 추진주체들의 과당경쟁은 협력사업을 교착상태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사업 발의단계에서 협약서 또는 협의회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동기획단(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주체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을 활용한 갈등조정 장치도 필요하다.

④ 지자체간 연계협력 조직은 단계적으로 진화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역간 협력과 공조를 위한 추진체계로 광역지자체간에는 대전·세종·충남 행정협의회³¹⁾를 활용하도록 하되, 대전·세종·행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를 채택한다. 행정협의회 산하에 협력 부문별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문별 협력 및 공조사업의 선별, 추진방안의 구상, 집행과정의 협의·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지역협력의 필요성과 효과가 커짐에 따라 보다 본격적인 공동발전의 모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이 경우 여러 분야 가운데 여건이 성숙된 분야의 전문전담기구를 3개 시도 및 중앙정부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가칭)대·세·충 지역발전전담기구는 지역의 경제산업발전에 관한 전략

31) 기초지자체간도 협의회 운영은 가능하다.

수립과 사업추진, 지원 등을 담당함으로써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업무와 각종 개발사업 집행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조직은 현재 충청권 메가시티,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정책과제

① 관계인구 증진 및 농촌 재생 측면의 도농상생복합거점 조성(성주인, 2022)

•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중앙정부 건의)

도시민 거주지 이동전에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지역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조성하고, 빈집정비와 다양한 형태의 농촌형 주거단지 조성 운영하며, 지역단위 빈집은행 운영하고, 다지역 거주확대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비하는 것이다.

취득세는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주택 배제하고, 양도세는 농산어촌 신규 주택의 취득 후 기존 도시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기간, 금액을 현행보다 확대하며,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수 합산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농산어촌 주택 다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농산어촌형 임대주택 입주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농산어촌형 스마트 워크 기업 활동 지원(시군간, 광역간 연계협력)

도시지역 소재한 기업체의 농산어촌 위성사무소 설치 지원하고, 농산어촌 위케이션 프로그램 정착 및 주거, 업무공간, 여가 인프라 확충한 스마트 워크 마을 조성하며, 기업에서도 스마트 워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및 입법 추진한다.

농산어촌 마을 인프라 정비하여 농산어촌 마을 재구조화를 위해 장래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육성할 농산어촌 마을 선별, 인프라 개선지원하고, 농산어촌 취약한 주거·서비스 기반 확충위한 거점시설을 도입 운영하며, 농산어촌마을의 환경·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방지 등 뒷받침하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화한다.

-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하여 도시민과 현장을 매개하는 재능은행 도입(시군간 연계협력)

다양한 인재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 참여하도록 지역차원의 재능 은행 도입하고, 잠재적 관계인구 대상 사전 교류 프로그램 지원한다. 농촌재생 리빙랩 사업 추진하여 현장의 민간조직, 창조계층 인력 등과 함께 사회실험 프로그램 지원한다.

② 기존의 교통, 환경, 상하수도 등부터 시작하여 기초지자체간, 광역지자체간으로 연계협력을 넓혀나간다.

2개 이상의 (기초·광역)지자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하여 생활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혼잡도로 개선, 환승 시설 설치, 가로경관 조성, 수변구역 및 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부권 입장에서는 BRT를 비롯한 연계 교통서비스 도입³²⁾,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대여 프로그램, 환경시설 공동 설치·운영³³⁾이다.

•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적 구성·운영 및 네트워킹 강화

남부권 입장에서는 주민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일반농산어촌지역, 성장축진지역, 도시 활성화지역 등에서 각 부처별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간 지원조직은 기초적인 역량은 배가되었으나, 타 분야와의 업무적 중복성이 발생하고, 역량의 전문화,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성이 현장에서 있다.

최근 일반농산어촌지역에서는 농식품부가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맞추어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협약센터, 농산업융복합센터, 소상공인센터, 일자리 센터 등 지자체 나름으로 조직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경주중이다.

중간지원조직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탈관료화, 거버넌스 체제로의 전환, 효율적·탄력적인 중간지원조직 문화개선 및 정착 등이 요구되지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제공, ② 행정

32)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버스요금 단일화,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간 통근버스 지원

33) 장사문화공원 공동 조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동 설치,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등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시설의 광역 단위 설치와 운영을 말하며, 충남의 남부권이 공주의 화장장과 추모공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환경의 개선, ③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강화가 요구된다.(최인수, 2020)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확보·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단계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관련 대학원과의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제공(예: 전문분야 인력 유입 및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과제 중심형 학습과정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정책환경 및 사회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 교육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과제 중심형 학습과정 도입 필요 등을 전문가들은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전문성 확보·강화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간지원조직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채로운 조직들 간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간지원조직 자체가 전문성을 모두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얼마나 많은 전문적 자원과 연대·협력할 수 있는가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현장사례를 바탕으로 특수성과 보편성을 통해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해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 **농촌인력 양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이다.**

· (남부권 인력 공급) 남부권 농촌지역은 농업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시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데 한계가 있는바, 주변 도시로부터 주민 직업 교육 공동 운영, 도시의 취약계층을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이다.

· (산학연 네트워크)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은 남부권내 시군이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하여 고도의 기술을 교육받고, 상호가 이해를 돕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남부권 입장에서는 광역 농산업 클러스터 및 지역전략식품 산업의 개발, 산지유통시설 등 시·군간 주산지 단위 협력사업 등 지역농업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내의 유사한 직종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공주시 관광순환체계, 논산시의 딸기 등 특작, 금산군의 소상공인 기업지원체계, 부여군의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및 스마트팜, 청양군의 사회적 경제 조직화 등은 지자체간 상호 경쟁하지 말고, 지자체가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필요로 하는 자영업 경영진단, 창업컨설팅, 현장체험 멘토링, 자영업 클리닉, 시설개선 지원,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자영업 협어화, 골목 창업학교 등의 영역은 남부권의 6개 시군은 새로운 영역이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서 경험이 많은 대전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전시·세종시는 농수산물 가격정보, 물가정보, 소상공인 입찰정보, 도매시장 정보, 착한가격 업소 등의 정보를 남부권에 제공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창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는 남부권내 시군단위로 도시학생 대상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및 농어촌체험 교과과정 등의 도입, 학군 조정, 초중학교 공동급식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노력도 고려할 수 있다.

- (의료 사각지대) 사각 없는 지역 복자의료에는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의 지원 역할을 생활권 단위로 유연하게 조직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 자원봉사활동 참여 주체를 생활권 단위로 조직하여 복지 서비스 개선하고, 거점병원에 계약직의사를 채용하여 일부시간은 진료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장순회 진료하는 시스템, 도시지역 병원의 구급차량 운영 및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관리 의료 인프라 구축, 생활권 내 지자체 간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분담 및 특화하는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특화와 협력 등의 사업이 있다.

③ 지역경제 연계협력을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 운영

중앙-지방 산업경제시책·사업의 산발적 추진으로 지역경제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지역 내에는 다양한 산업 및 경제관련 시책과 사업이 다양한 중앙 및 지역의 조직과 기관에서 상호간 전략적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과 낭비, 정책의 4각 지대가 발생하고 정책추진과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와 산업발전의 촉진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정책수립 및 추진 절차를 규정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영국은 1989년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에게 경제발전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statutory basis)을 제공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서는 지방당국은 여하한 상업 및 산업 및 공공사업의 확장이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 또는 보호하는 데 있어 재정(financial) 및 기타 지원(other assistances)을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David Miller, 1990)³⁴⁾

• 지역단위 중앙-지방기관 간 연계와 협력촉진 방안과 제도적 틀 마련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방차원의 산업·경제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적 지역경제발전정책의 추진이 어려워 관련 중앙과 지방기관과 조직간 협력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체제마련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수단의 미비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계를 충남도 선도로 구축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산업·경제정책의 협력적 추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과 제도적 틀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체적 관련부서 협력체제와 정책연계방안 제시 필요하다. 충남지역경제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권한으로 가능한 도내 산업 및 경제관련 시책과 사업의 연계추진과 관련 부서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과 함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산업·경제정책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지역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첨단기술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용도제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완화와 혁신이

34) David Miller (1990) The Future of Local Economic Policy: A Public and Private Sector Function, in Mike Campbell(ed.) Local Economic Policy, Cassell, London

동반되어야 한다. -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전략의 하나로 많은 나라에선 신기술 제품의 테스트와 실용화 및 새로운 R&D 축진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하는 스마트 도시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민간주도 추진체계 구축이다. 정부나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시민, 지방정부 관리, 민간기업,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계 구축, 운영³⁵⁾ 하는 것이다.

규제혁신 병행하여 초 연결, 초 지능 및 자동화로 특징되는 디지털 융합기술혁신과 변화에 맞지 않는 기존의 도시계획, 토지이용 및 건축법규 등 과감한 규제혁파와 제도 개혁 추진한다. 캐나다 토론토 시티랩 스마트도시 재생지구의 경우, 결과기반 용도제 (outcome-based zoning)와 용도전환이 자유로운 건축허용으로 환경오염, 진동 및 소음 등 이웃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어떠한 용도이용도 허용하고 있다.(CityLab 2022; 196)³⁶⁾

35) Smart Kalasatama-Smart City District of Helsinki

36) <https://www.bloomberg.com/citylab>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 요약

□ 관련 이론 및 정책검토에서 접목가능한 시사점

저발전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중요한 요소가 지역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이다. 대부분의 저발전지역이 농산어촌인 바, 해당지역의 수동적, 의존적 발전에서 탈피한 자립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발전지역에서 나타나는 단편화·파편화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관련 산업간의 융·복합(inter-sectoral convergence)함으로서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관건이다.

12년간의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과제도 역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유사동종 정책사업과의 통합화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으로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추진사업, 국가균특회계 지원사업, 낙후지역 지원사업 등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지역-저발전지역을 아우르는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사업의 요구 증가이다. 저발전지역은 고급 인적자원을 자체 육성, 공급하기에는 한계를 가지므로, 미래 신산업 육성, 고급인력 공급체계 연대, 직업 교육·훈련 선순환체계 구축 등 발전시군 나아가서 대전시, 세종시와의 연계협력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창생 정책은 중장기적 전망하에 사람과 일자리, 자원과 마을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 공간구조 재편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이다.

□ 충남 남부권의 지역격차와 특성

현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17개 지표별로 산정하였는데,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간의 격차는 확대 중이다.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등 대전시에 연접한 시군의 순위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부권 시군별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경제활동은 제조업, 농림어업, 행정업이며, 제조업은 발전 시군의 60% 이상에 비해 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림어업은 20%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경제규모 축소 중이다.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업 등 전통산업 및 근대기에 확장되었던 산업들이 쇠퇴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저발전지역일수록 공공과 관련한 행정관련, 공공이 서비스 투입의 주체 및 보조하는 경제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의 소득 및 역내외 소비 비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요 산업 변화는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관련 산업은 영세화 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는 업종은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부동산업이며, 규모화가 진행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공공행정업이다. 대전시·세종시와의 통근통행이 높은 지역일수록 역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역내외로 유입된 소비 비중은 74%로 충남 37.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부권에서는 공주시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인구 및 공간구조 전망

남부권의 인구는 396천명에서 2040년까지 351천명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일하게 증가하는 시군은 계룡시이다. 가장 감소율이 높은 시군은 논산시로 -2.127%이고, 공주시가 -1.169%로 전망된다. 남부권의 읍면동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읍면부는 연평균 -1.0% 감소하고, 읍부는 연평균 -0.6% 감소하며, 면부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부는 연평균 +0.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계룡시를 제외하면 읍면부는 연평균 -1.57% 감소하고, 읍부는 연평균 0.57%, 면부는 연평균 -2.1%감소한다.

향후 인구는 동부와 시군청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인구가 공주시 75%, 논산시 65.5%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군지역은 금산군 읍부에 51.5%, 부여군은 읍부에 31.89%, 청양군 43.09%가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소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면지역이며, 인구 3천명 이하의 면지역이 다수이며, 인구 1천명 이하인 면도 출현하게 된다.

현재의 통근통학에 공간구조는 논산시↔부여군, 논산시↔계룡시, 공주시↔청양군 등으로 대전시를 중심으로 선형형태를 띠고 있고, 공주시, 논산시가 남부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주시는 세종시, 대전시 지역과 연계성이 높고,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대전시와 연계성이 매우 높고, 부여군, 청양군은 홍성·예산군이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는 공주시는 대전시와 연계성이 낮아지고 세종시와 연계성이 높아지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은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군과 청양군은 세종시와 연계성이 약간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남부권의 발전방향

충남의 남부권은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중소도시로서 대도시의 영향을 흡수하고, 이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수동적인 형태로는 충남 남부권은 계속 낙후지역으로 남아있고, 대전시, 세종시의 생산지대, 분공장 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네트워크 도시체계의 장점을 활용하는 역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특정 도시의 혁신이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입지적으로 불리한 소도시일 경우라도 혁신을 통해 그 이상의 도시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충남 남부권은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지역사회, 문화, 공동체가 폐쇄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담보되어야 하며, 지역사회가 갖고 있던 지역성의 협소한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적 지지망의 제고 및 확보, 비공식적 연계를 탄탄히 채우는 **개방형 지역사회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전략은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기존 도시의 재구조화이다.

충남 남부권의 원도심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주택 노후, 지역상권 및 산업기반 약화로 인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바, 대전시·세종시와의 교통체계 확충 및 접근성 향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전시 서구·유성구,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내부 경제 순환, 주민간 교류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한다. 한편, 현재의 도시재생방식 외에 주거환경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경관사업, 공동체 활성화 등을 복합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시대에 맞춘 도시의 내부충진식 개발을 기본으로 하되, 대중교통과 연계된 도시시설의 입지 적정화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충남 남부권 각 시군별로의 전문화된 성장동력의 확충이다.

남부권 시군이 대전시·세종시로의 쏠림현상 가속화로 인한 도시체계상의 중위거점 소멸,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발전전략이 대전시·세종시와 윈윈할 수 있는 전문화된 분담기능을 찾아내야 한다.

충남 남부권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생산물이 풍부하며,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조직·운영중에 있으며, 전통적으로 지역내의 향토산업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또한, 미래 도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업,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문화, 관광도 하나의 산업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자산 기반의 첨단산업과의 접목을 고려하여 성장동력화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광역적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이다. 보통 연계 협력사업은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난 연계 교통망, 환경, 도시시설에 국한되는 것이 한계로 나타났다. 연계협력의 대상을 산업, 문화, 관광, 의료, 인적자원등으로 확대하여 지역혁신의 주체자로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 향후 과제

첫째는 본 연구는 도시공간구조, 지역경제, 산업, 문화관광, 연계협력 등 다분야를 다루고 있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국한되어서 즉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시기키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전시, 세종시와 연계협력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간 새로운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고, 인구감소, 지방쇠퇴에 따라서 남부권 시군이 처한 상황은 제 각각 다르며, 연계협력의 대상인 분야별, 대전시, 세종시, 충남내 타 지자체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지만,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이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발굴 및 구체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뿐만 아니라 남부권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각 주체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충남 전역의 공간 통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충남 남부권과 북부권, 서해안권간의 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권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David Miller (1990) The Future of Local Economic Policy: A Public and Private Sector Function, in Mike Campbell(ed.) Local Economic Policy, Cassell, London
- Mankiw N. G., Romer D. and Weil D.(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 407-37
- 강현수(2003),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단의 효과성
- 강현수(2007), “주요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건설교통부(2007), 낙후지역 개발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 경기도(2013),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 낙후지역정책의 발전방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9),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2019), 7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지정 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2009), 낙후지역 성장촉진을 위한 지역계획 개선방안.
- 김선기 외, 2014. 지역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시백, 2019.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핑, 전북발전연구원.
- 김용웅 외(2000),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 김용웅(1997), 21세기 지역개발시책의 새로운 접근. 국토, 1997년 9월호, 국토연구원.
- 김용웅(1999), 지역개발론, 법문사.
- 김용웅(2003a), 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체제의 구축방안, 국토 (통권257호), 2003. 3월호, 국토연구원.
- 김용웅(2004), 3대특별법 성공적 추진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 3월호, 국토연구원.
-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2003), 지역발전론, 한울 아카데미.
- 김정호(2016),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
- 김한중(2016), 도농간 인구이동 현황과 시사점, 농촌지역 인구문제 세미나 자료집, 전북연구원

- 김현호(2007), 자립적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200-235.
- 김현호·한표환(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배 외(2008), 지역진단 지표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남원시(2016), 활기찬사업 예비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2016),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방향 연구
- 다카노 도시후미(2002), “일본 가나자와시의 지방발전 연구와 그 한국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2004),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호 국정과제회의
- 동경대학교 온디맨드교통팀(2010), 지속가능한 온디맨드교통
- 박 경(2005), “한국농촌의 장기비전과 발전전략”, 농정연구센터 제13회 연례 심포지엄 발표자료.
- 박 경(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발적 발전론”,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47집
- 박 경·강현수(2005), 분권형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산업자원위원회.
- 박승규 외(2008), 지역간 경제성장격차 변화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울특별시(2015),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지원 안내
- 성경룡 외(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성경룡(2007),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이론과 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이론과 실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58-109.
- 송두범 외(2018)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충남도 지역산업정책 연구, 충남연구원
- 신동호 외, 2021.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및 과제. 충남연구원
- 심원섭(2019), 관광환경 변화와 지역관광 발전 과제, 국토연구원
- 오용준 외, 2021. 제4차 충청남도 도종합계획. 충남연구원.
- 오용준 외, (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우영진, 최명섭, 김의준, 2008. 권역별 사회지표의 지역격차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 11권 1호 pp. 63~73.

원광희(201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유정복(2006), 외국의 낙후지역개발 성공사례로 본 낙후지역 활성화정책 개선과제,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윤성경(2012), 경기 남북간 지역격차 분석 및 동반발전방안 모색, 국토지리학회지

이소영·김현호(2008), 지역재생사업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영주·최승담(2004), 도시관광개발의 특성과 향후 연구방향, 국토연구 제43권, 국토연구원

이인로, 2021. 충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및 거주자의 역외소비,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이재춘외(2020), 인구·가구구조 및 주거특성의 변화 전망과 주거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방향, 국토연구원

이희창 외, 2006. 지역격차 현황과 과제:경기북부 저발전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0권 2호

임동일 외, 2011,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국토연구원.

임형빈 외, 2017. 대도시 근교 지역인 충남 남동권역 발전 전략: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을 중심으로.

전대욱(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대책,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1호, 전북발전연구원(2010),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운영방안.

정연우(2010), 낙후지역의 성장잠재력 지표개발을 통한 지역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정운선·윤기확(2019),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조명래외(2013), 신균형발전 보고서, 충남연구원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를 재정리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최인수(2020),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채성주(2010), 일본 과소지역의 자립촉진방침과 자립촉진계획, 충북개발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2016), 지역 고용동향, 한국의지방소멸에 관한7가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사회통합

한국은행 울산본부, 2013. 울산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연구보고서.

한상욱 외, 2020. 2021-2030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충남연구원.

한상욱(2009),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균형발전사업 추진(3년차)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

한상욱(2010),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발전방향”, 권역별 균형발전전략 및 방안 합동워크숍 발표자료, 충청남도.

한상욱외(2012),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한표환(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자치부(2009),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접근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허문구 외, 2015. 지역소득 역외유출경로 추적과 생산분배소득 격차요인 분석 (경남지역의 생산분배소득을 중심으로),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경남본부.

황영모(2016), 농촌지역 과소화 현실과 지역의 대응방향, 전라북도

〈부록 1〉 지역내 총생산(권역별, 남부권 경제활동별)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가격 (2019)	연평균 성장률 (2015-2019 , 기준가격)	비중 (2019, 당해가격)	시군내 비중 증감량 (2015-2019, 기준가격)
지역내 총생산	계	113,488,325	0.0261	100.00	
	북부권	64,508,870	0.0301	56.84	
	서해안권	34,285,649	0.0254	30.21	
	남부권	14,693,806	0.0101	12.95	
남부권 경제 활동별	순생산물세	1,123,451	-0.0096	7.65	-0.6185
	총부가가치	13,570,355	0.0119	92.35	0.6476
	농업, 임업 및 어업	1,360,827	-0.0246	9.26	-1.4920
	광업	27,079	-0.1215	0.18	-0.1387
	제조업	3,500,173	0.0160	23.82	0.56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377	-0.1189	0.21	-0.1980
	건설업	664,758	-0.0165	4.52	-0.4608
	도매 및 소매업	573,992	0.0202	3.91	0.1601
	운수 및 창고업	365,978	0.0135	2.49	0.0383
	숙박 및 음식점업	285,590	0.0262	1.94	0.1112
	정보통신업	171,439	0.0204	1.17	0.0544
	금융 및 보험업	460,892	0.0434	3.14	0.4014
	부동산업	729,196	-0.0011	4.96	-0.2303
	사업서비스업	616,340	0.0183	4.19	0.12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74,023	0.0256	17.52	0.9637
	교육 서비스업	968,842	0.0207	6.59	0.26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6,859	0.0606	5.49	0.981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33,990	-0.0149	2.95	-0.2812

자료 : 통계청, 시군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2016-2019)

〈부록 2〉 시군별,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변화 추이(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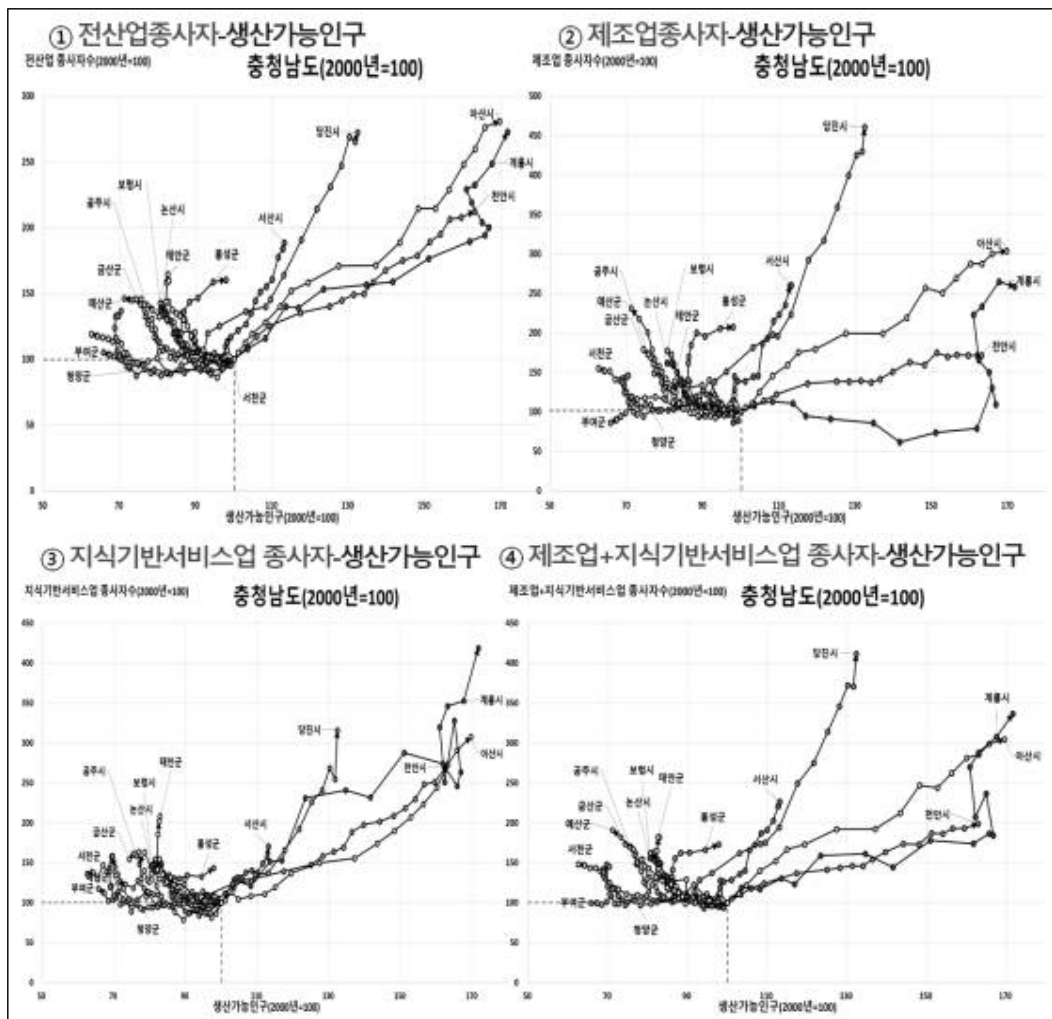
구분	경제활동별	2019 당해년가격	증감량 기준가격	연평균 성장률(CAGR) 기준가격	시군내 비중 당해년 가격(2019)	시군내 비중 증감량 기준가격(2019)
남부권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4,693,806	545,858	0.01	100.00	0.00
	순생산물세	1,123,451	-40,823	-0.01	7.65	-0.62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3,570,355	590,687	0.01	92.35	0.65
	농업, 임업 및 어업	1,360,827	-143,648	-0.02	9.26	-1.49
	광업	27,079	-17,375	-0.12	0.18	-0.14
	제조업	3,500,173	209,000	0.02	23.82	0.5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377	-24,766	-0.12	0.21	-0.20
	건설업	664,758	-38,756	-0.02	4.52	-0.46
	도매 및 소매업	573,992	43,740	0.02	3.91	0.16
	운수 및 창고업	365,978	20,995	0.01	2.49	0.04
	숙박 및 음식점업	285,590	24,671	0.03	1.94	0.11
	정보통신업	171,439	14,664	0.02	1.17	0.05
	금융 및 보험업	460,892	71,245	0.04	3.14	0.40
	부동산업	729,196	-2,969	-0.00	4.96	-0.23
	사업서비스업	616,340	38,367	0.02	4.19	0.1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574,023	217,005	0.03	17.52	0.96
	교육 서비스업	968,842	70,329	0.02	6.59	0.26
공주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6,859	160,432	0.06	5.49	0.9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433,990	-22,726	-0.01	2.95	-0.28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3,712,791	232,318	0.02	100.00	0.00
	순생산물세	282,583	29,431	0.03	7.61	0.37
	총부가가치(기초가격)	3,430,208	202,915	0.02	92.39	-0.36
	농업, 임업 및 어업	222,334	-24,099	-0.02	5.99	-1.26
	광업	6,960	1,074	0.05	0.19	0.02
	제조업	947,917	150,439	0.04	25.53	2.7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034	-6,242	-0.14	0.16	-0.21
	건설업	173,546	-10,924	-0.02	4.67	-0.65
	도매 및 소매업	150,666	9,635	0.02	4.06	-0.02
	운수 및 창고업	91,230	414	0.00	2.46	-0.19
	숙박 및 음식점업	94,586	9,924	0.03	2.55	0.13
	정보통신업	32,877	-2,436	-0.02	0.89	-0.15
	금융 및 보험업	147,515	26,815	0.05	3.97	0.53
	부동산업	194,645	980	0.00	5.24	-0.36
	사업서비스업	285,583	44,332	0.05	7.69	0.84
논산시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25,997	-74,853	-0.06	11.47	-2.95
	교육 서비스업	353,646	63,654	0.06	9.53	1.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6,924	34,681	0.06	5.03	0.71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09,748	-7,081	-0.02	2.96	-0.42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4,080,662	294,261	0.02	100.00	0.00
	순생산물세	276,775	2,898	0.00	6.78	-0.47
	총부가가치(기초가격)	3,803,887	292,139	0.02	93.22	0.49
	농업, 임업 및 어업	418,191	-48,070	-0.03	10.25	-2.26
	광업	540	-939	-0.23	0.01	-0.03
	제조업	897,175	73,473	0.02	21.99	0.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0,009	-5,356	-0.09	0.25	-0.18
	건설업	182,703	-18,913	-0.03	4.48	-0.87
	도매 및 소매업	171,640	11,479	0.02	4.21	-0.04
	운수 및 창고업	97,804	-5,323	-0.01	2.40	-0.35
	숙박 및 음식점업	75,044	7,193	0.03	1.84	0.06

구분	경제활동별	2019 당해년가격	증감량 기준가격	연평균 성장률(CAGR) 기준가격	시군내 비중 당해년 가격(2019)	시군내 비중 증감량 기준가격(2019)
계룡시	정보통신업	51,783	3,406	0.02	1.27	-0.03
	금융 및 보험업	150,399	24,278	0.05	3.69	0.37
	부동산업	203,161	-2,015	-0.00	4.98	-0.48
	사업서비스업	168,518	-15,337	-0.02	4.13	-0.7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52,804	222,907	0.10	18.45	4.79
	교육 서비스업	245,226	5,079	0.01	6.01	-0.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7,572	47,436	0.06	5.82	0.85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41,318	-10,870	-0.02	3.46	-0.56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507,709	-7,755	-0.00	100.00	0.00
	순생산물세	48,124	8,494	0.05	3.19	0.65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459,585	-16,174	-0.00	96.81	-0.64
	농업, 임업 및 어업	3,700	-1,768	-0.09	0.25	-0.13
	광업	0	0	0	0.00	0.00
	제조업	64,376	5,736	0.03	4.27	0.4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149	-1,465	-0.08	0.21	-0.11
계룡시	건설업	53,552	-30,269	-0.12	3.55	-2.22
	도매 및 소매업	69,948	13,456	0.06	4.64	1.02
	운수 및 창고업	34,251	7,481	0.06	2.27	0.57
	숙박 및 음식점업	19,877	2,005	0.03	1.32	0.16
	정보통신업	22,904	832	0.01	1.52	0.07
	금융 및 보험업	24,116	2,483	0.03	1.60	0.19
	부동산업	66,723	2,714	0.01	4.43	0.23
	사업서비스업	21,385	5,838	0.10	1.42	0.4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2,791	-44,129	-0.01	59.22	-2.94
	교육 서비스업	84,751	7,007	0.02	5.62	0.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2,191	14,336	0.07	4.12	1.0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5,871	1,659	0.01	2.38	0.14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2,279,225	-84,427	-0.01	100.00	0.00
	순생산물세	272,690	-63,224	-0.05	11.96	-2.36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006,535	-19,848	-0.00	88.04	2.43
금산군	농업, 임업 및 어업	93,872	-38,793	-0.08	4.12	-1.55
	광업	4,996	-13,339	-0.28	0.22	-0.58
	제조업	1,010,191	24,701	0.01	44.32	2.7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580	-6,598	-0.13	0.33	-0.28
	건설업	69,697	-18,683	-0.07	3.06	-0.73
	도매 및 소매업	79,330	5,919	0.02	3.48	0.40
	운수 및 창고업	67,821	21,047	0.07	2.98	1.08
	숙박 및 음식점업	38,374	2,940	0.02	1.68	0.19
	정보통신업	23,578	4,173	0.04	1.03	0.23
	금융 및 보험업	41,397	1,681	0.01	1.82	0.15
	부동산업	91,900	-2,035	-0.01	4.03	0.06
	사업서비스업	50,315	-3,522	-0.02	2.21	-0.0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55,740	3,229	0.01	6.83	0.37
	교육 서비스업	105,053	-4,184	-0.01	4.61	-0.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2,483	23,062	0.06	4.94	1.20
부여군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4,208	-8,290	-0.04	2.38	-0.29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925,260	26,653	0.00	100.00	0.00
	순생산물세	133,128	-14,479	-0.03	6.91	-0.89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792,132	41,761	0.01	93.09	0.92
	농업, 임업 및 어업	437,015	-32,954	-0.02	22.70	-2.14
	광업	13,988	-4,157	-0.07	0.73	-0.24
	제조업	280,752	-64,617	-0.05	14.58	-3.7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828	-3,608	-0.16	0.15	-0.20
	건설업	119,914	34,937	0.11	6.23	1.83

구분	경제활동별	2019 당해년가격	증감량 기준가격	연평균 성장률(CAGR) 기준가격	시군내 비중 당해년 가격(2019)	시군내 비중 증감량 기준가격(2019)
청양군	도매 및 소매업	75,616	1,318	0.00	3.93	0.01
	운수 및 창고업	35,124	-7,418	-0.06	1.82	-0.43
	숙박 및 음식점업	41,047	2,428	0.02	2.13	0.10
	정보통신업	32,299	7,393	0.06	1.68	0.38
	금융 및 보험업	69,465	10,573	0.04	3.61	0.52
	부동산업	115,438	-3,750	-0.01	6.00	-0.29
	사업서비스업	55,462	2,547	0.01	2.88	0.1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8,127	82,926	0.11	10.81	4.35
	교육 서비스업	119,880	-513	-0.00	6.23	-0.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8,961	27,129	0.06	6.70	1.3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6,216	-2,403	-0.01	2.92	-0.17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1,188,159	84,808	0.02	100.00	0.00
	순생산물세	110,151	-3,943	-0.01	9.27	-1.06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78,008	89,894	0.02	90.73	1.15
	농업, 임업 및 어업	185,715	2,036	0.00	15.63	-1.06
	광업	595	-14	-0.01	0.05	-0.00
	제조업	299,762	19,268	0.02	25.23	-0.1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77	-1,497	-0.19	0.07	-0.15
	건설업	65,346	5,096	0.02	5.50	0.10
	도매 및 소매업	26,792	1,933	0.02	2.25	-0.00
청양군	운수 및 창고업	39,748	4,794	0.02	3.35	0.01
	숙박 및 음식점업	16,662	181	0.00	1.40	-0.08
	정보통신업	7,998	1,296	0.04	0.67	0.06
	금융 및 보험업	28,000	5,415	0.05	2.36	0.31
	부동산업	57,329	1,137	0.01	4.83	-0.26
	사업서비스업	35,077	4,509	0.04	2.95	0.21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8,564	26,925	0.06	11.66	1.58
	교육 서비스업	60,286	-714	-0.00	5.07	-0.4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728	13,788	0.05	6.63	0.77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6,629	4,259	0.04	3.08	0.17

〈부록 3〉 충남 산업발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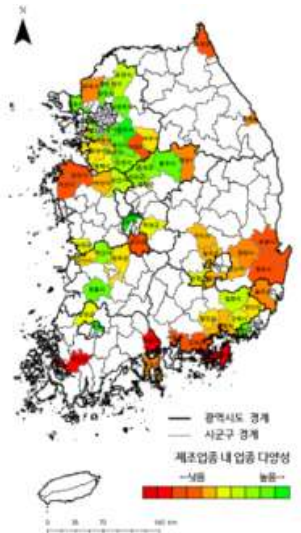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와 종사자수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종사자수 감소 추세
- 당진, 아산, 계룡, 천안은 200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동반 상승한 지역으로, 지역 내 유입된 인구와 종사자수가 동시 증가
- 당진, 아산, 천안 등의 지역은 충청남도에서의 주력산업과 첨단 산업 기반이 확보된 지역으로, 충청남도 소득의 다수를 창출하는 주요 지역으로 분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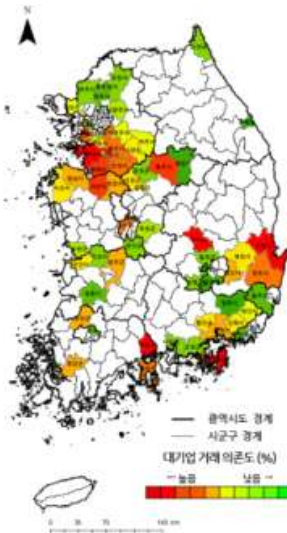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의 4개 시도연구원(2021),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부록 4〉 산업 취약성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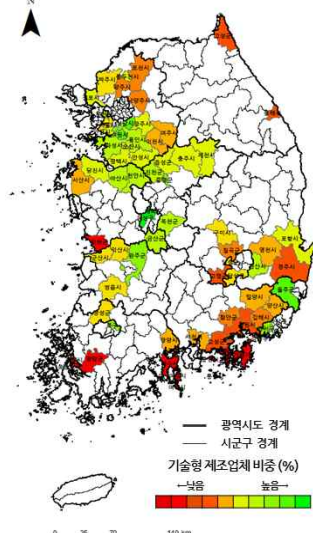
대기업 거래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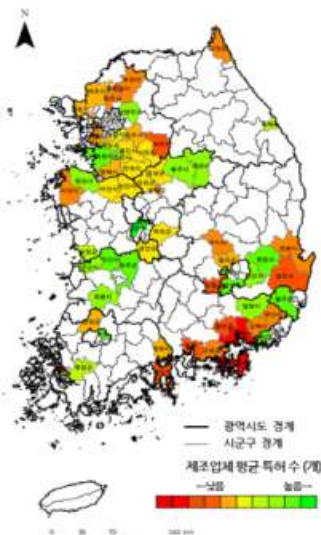
제조업종 내 업종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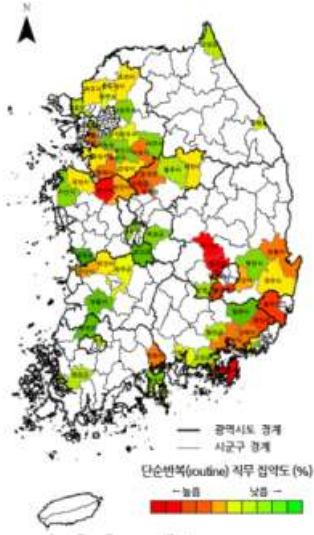
기술형 제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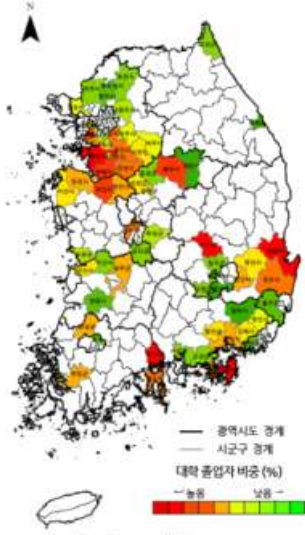
제조업체 평균 특허수



루틴직무 집약도



대학졸업자 비중



37) 주 : ④한국기업데이터 CRETOP+ 기업DB를 활용.
자료 : 국토연구원(2020), 산업위기지역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대책

〈부록 5〉 남부권 주요 전략산업(시군 제안)

시군	주요내용		
공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 로봇 ICT융합바이오(곤충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데이터기반 헬스케어 소재개발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유전자원 상용화 지원센터
논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산업 위리어플랫폼 드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형 태양광무돌 실증사업 항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위산업진흥원 민군기술진흥원
계룡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전력지원 빅데이터 지원센터 가상훈련 서비스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산업 스타트업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R&D평가관리원
금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삼약초산업 프리미엄케어 푸드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힐링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납식품개발 및 가공지원센터
부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농산업 플랫폼 농산업바이오(농생명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형 태양광모돌 실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산업
청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육 생산공정 혁신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용작물 융합 생활문화 소비재상용화센터 	

〈부록 6〉 남부권 주요 전략산업(국가계획 반영)

구분	지식산업	미래전략산업						관광산업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의료·의약·뷰티	에너지(수소·태양광·이차전지)	농업	해양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소재부품 섬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산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세계문화유산) 생태관광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CT 국방R&D 국방산업 스타트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축산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대문화유산 유교문화 마리나(탐정호)
계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CE산업 국방안보관광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복합 농업(인삼) 농축산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치유(국립자연휴양림)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바이오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복합 농업(굿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세계문화유산)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융복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태관광

〈부록 7〉 주요 산업거점

구분	산업단지·특구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타
	국가산업단지·국가혁신융복합단지	특구	주요 일반산업단지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미산산업단지 대전산단재생사업지구 대동·금탄산업단지 안산지구(투자선도지구) 대전역 역세권 혁신지구 대덕평촌지구 원촌지구 도룡지구 신동·둔곡지구 연축 혁신지구 탑립전민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소일반산업단지 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생명연구소) BIO융합센터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 대덕바이오커뮤니티 LG생명과학 대전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대전대학교 한국폴리텍 IV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방산업클러스터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국가산단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 혁신도시 연계지구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테크노파크 명학산업단지 부강산업단지 조치원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주행규제자유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특허특허개발원 (세종사업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성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소연구개발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BIT 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컨벤션센터 한국자동차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대학교 한국기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KTX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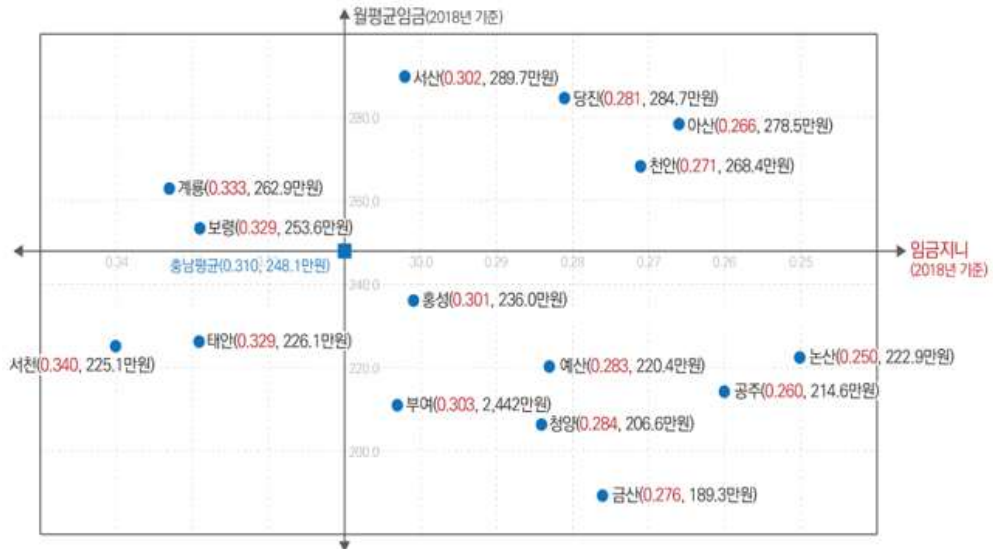
구분	산업단지·특구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타
	국가산업단지·국가혁신융복합단지	특구	주요 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산 도시첨단 산업단지 천안 제6일반 산업단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LG생활건강류체 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천안화학산업진흥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상명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제조혁신파크
공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천일반산업단지 남공주일반산업단지 유구자카드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국립공주박물관 충부지방산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공주 산업벨트
보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중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주자동차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항
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아산 외투지역 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산디스플레이 시티 1·2일반 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아산테크노밸리 1·2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TP(디스플레이센터) 충남TP(자동차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오서대학교 유원대학교 	
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산바이오엘빙연구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옥외 폭로시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산 임해산업지역
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TP(바이오센터) 충남국방벤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양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산업클러스터
계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룡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산업클러스터
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문국가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서대학교 세한대학교 신성대학교 	
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산국제인삼약초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복합단지(조성중)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국립박물관 부여국립문화재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한국중부발전(신서천화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조성중)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연계 클러스터
청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립대학교 	
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성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운대학교 해전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소산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당문화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제2일반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TP(자동차센터) 충남TP(바이오센터)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대학교 	
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한서대학교 비행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서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치유 시범센터(조성중)

〈부록 8〉 충남 시군별 평균 임금, 지니계수³⁸⁾

• 1인당 GRDP(백만원), 지니계수(근로소득, 2016 기준)



• 월평균 임금 및 지니계수



38) 충청남도(2020), 충남의 경제사회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부록 9〉 거시적 측면에서의 남부권 영향과 과제(STEEP 분석)

구분	주요 요인	세부 요인	거시적 영향	영향 및 과제	비고
사 회 분 야	저출생 고령화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 → 경제활동인구 감소 → 생산성 저하 →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	1차 산업 생산성 약화 대응	
			·인구 감소 → 청년층 인구이동 가속화 → 농어촌 공동화 → 발전역량 약화	대학학과 졸업생별 맞춤형 인구 유입정책 다양화	
	고령화	·고령인구 증가 → 노인복지 수요증가 → 노인 실버산업 확대	의료, 보건, 복지 공공수요 증가		
	가치관, 문화다 양성 증대	삶의 질 중시	·여가휴양 가치 증대 → 농어촌관광수요 증가 → 세컨드하우스, 전원주택 증가 → 개별 입지 증가 → 자연환경·경관 훼손	보전형 농촌토지이용 추진	
		다문화사회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 증가 → 생산성 증가 → 전통 지역사회 마찰	외국인 직업, 융합 유도	
	도시권, 광역권 시대 도래	도시화 지속	·도시 인구 증가 → 주변지역 인구 이동 → 농어촌인구 감소 가속화	장년층 인구 유입 정책 다양화	
메가시티 경쟁 강화	·충청권 초광역권 출현 → 거점도시 기능 확충 → 네트워크 공간구조 형성	대전·세종 생활권 수렴 대응			
기 술 분 야	과학 기술 융복합 화	첨단산업 발달	·산업입지 변화 → 첨단산업 도시집중 → 지역산업 혁신 요구	대학·산업체간 연계 및 가속화	
	IT기술 발달	정보화 진전	·스마트시티 활성화 → 도시 경쟁력 강화 → 도시 인구 집중	기존 거점도시 스마트화	
		교통기술 발달	·시공간거리 단축 → 1일 생활권 확대 → 교외화	대도시 연접부 주택(단지) 공급 첨단교통 시범사업 추진	
경 제 분 야	세계 경제 글로벌 화	경제협력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확대 → 신산업 수요 증가 → 산업용지 수요증가	자립형 경제구조 마련	
			·농축산물 수입 증가 → 농어업경쟁력 저하 → 소농 쇠퇴	지역순환 경제체제 마련 농수산물 교부가치화	
			·개방경제거점 중시 → 항만·공항 수요 증가 → 복합화 개발		
	다국적 네트워크	·국내 기업 유턴 → 산업입지 증가	숙련 노동인력 교육		
		국제금융 다각화	·광역경제권 확대 → 대도시 기능 강화 → 서민 금융 쇠퇴	자영업자·중소기업 금융 보호	
	세계경 제질서 재편	중·일간 갈등	·한중 경제협력 둔화 → 서해안개발 보류 → 서해안 국가영토 중요성 부각		
			·한일 경제협력 축소 → 소부장산업 국산화 → 산업입지 증가	기업 R&D지원·유치 산업단지 재구조화 산업 벨트화	
	인도 부상	·아시아 경제권 강화 → 경제협력 다각화 → 수출산업 다변화 → 기존 산업 재편 → 서해안 개발 활성화	산업 재편 신규 개발 계획적 입지		
지식기 반경제 로 전환	소프트산업 중시	·창의적 인재 중시 → 지식산업 대도시 집중 → 창조인력 육성 가속화	산학연 연계 창조인력 양성 활동가 산업인력 양성		
		·제조업 증가세 둔화 → 공장 스마트화 → 고용인력 감소 → 산업 전환 요구	산업인력 혁신역량 강화		

구분	주요 요인	세부 요인	거시적 영향	영향 및 과제	비고
환경 분야	기후 변화 재해 증가	온난화	·제조업,서비스업 융합→혁신역량 요구 → 지방형 플랫폼경제	인력 중심 순환형 경제체제 육성	
			·기상이변 → 식생 변화 → 농업 다양화 → 작물 실증·보급 활성화	농업바이오·스마트팜·식품 산업 육성	
			·재난 빈도 증가, 대형화 → 대도시 생활 기피 → 생활안전 요구 증가 → 농어촌개발 입지 증가	도시 주변 농촌 개발 계획적 개발	
		신종질병, 전염병 확산	·해수면 상승 → 해안지역 위협 증가→ 해안개발 정체		
			·노인층 활동량, 범위 축소 → 대도시 생활 기피 → 위생 수요 증가 → IoT 활용 진단·전달서비스 활성화	기초생활서비스 IOT접목 공공지원 확대	
	자원, 에너지 고갈	물부족 심화	·하천이용 변화 → 하천공동이용 증가	금강 등 주요하천 활용·개발 가시화	
		화석에너지 고갈	·친환경 에너지 보급 → 풍력,태양광산업 발전 → 산업 입지 수요 증가	친환경 에너지 기본복지수요 확대	
			·기존 에너지 산업 쇠퇴 → 지역경제 쇠퇴 → 산업쇠퇴지역 지원	창업,창직 등 직업,교육훈련 현행화	
정치 분야	국제 질서 다극화	중국,인도 영향력 확대	·동북아 교류 증대 → 국제교통망 연계 → 첨단 교통망 건설 → 공항·항만활성화	차세대 교통수단 보급	
		지역경제 블럭화	·광역경제권 확대 → 수도권 기능강화→ 충청권 메가시티 출현	도시간 상생발전 사업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 출현	
	분권 및 거버 넌스 강화	지방분권 강화	·행재정분권 시행 → 지역간 경쟁 심화 → 지자체간 경쟁심화	자원기반 특성화 요구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민주주의 정착 → 의사결정 구조 간소화 → 주민 요구도 증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지방형 미디어 서비스 출현	
	한반도 통일	인구이동 심화	·북한 노동자 증가 → 주택·가치관 혼선 → 지역 노동생산성 증가	지역사회 융합 요구	

주: 경남연구원(2011), 경남지역 미래예측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저자 재구성

〈부록 10〉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남부권 주요 내용(대전권, 세종권)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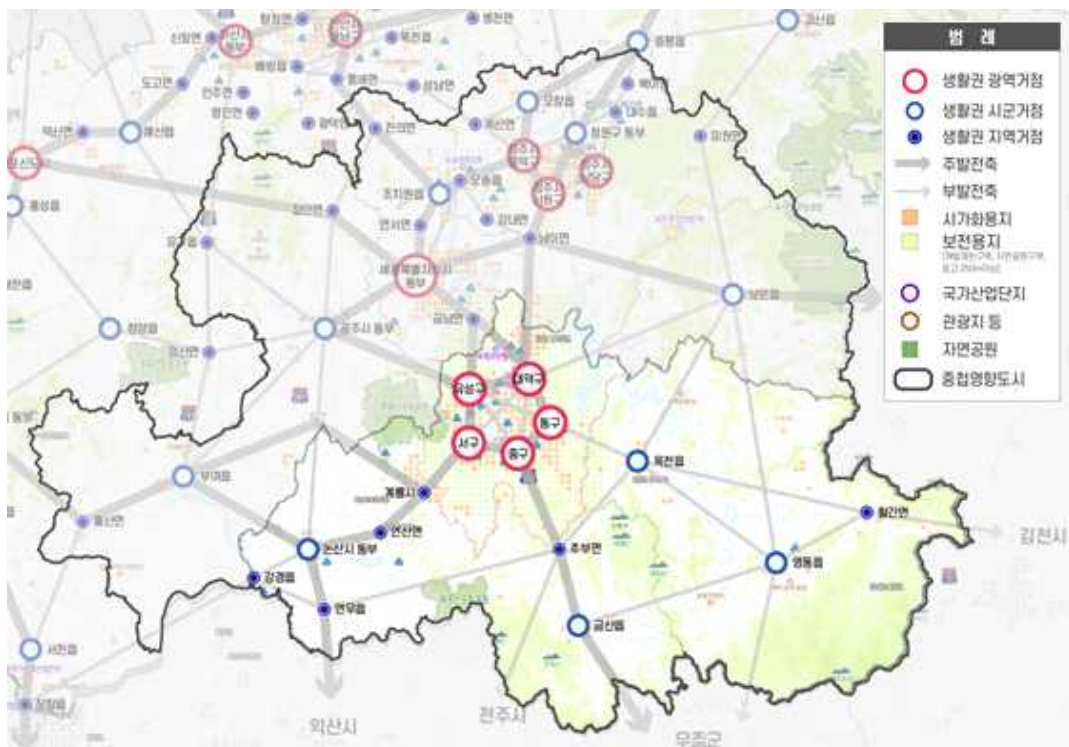
(1) 대전생활권

발전방향 : 국가 동서, 남북방향 결절기능 및 계획권 발전 선도
주변도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도시 근교관광권 설정

□ 주요 축 : 대전 중심의 방사형 체제 구축

대전과 기초도시간 연계성 및 계획권 외 지역간의 연결성 제고

- 대전 서구를 기점으로 계룡, 논산, 공주(KTX역)의 연결을 통해, 익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호남축 주요 거점으로서 기능
- 대전 유성구-대덕구를 중심으로 세종, 청주, 공주와의 연결성을 확대하여 경부축 주요거점으로서 기능
- 대전 중구에서 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전주, 무주와 연계하여 국가 남부내륙과의 연결 확장



39) 남부권과 관련있는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여 정리

□ 주요 계획과제

구분	계획과제	
공간적 기능	신개발지 입지 유도 및 원도심 등 기성시가지 개발 대응	도시의 외연적 확장을 관리하기 위한 개발지역의 도시내 입지 유도(대전 평촌지구, 구봉지구, 갑천지구 등) 노후 침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대전시 역세권 거점개발, 舊충남도청사 문화예술복합단지 등)
산업· 일자리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 및 주변도시간의 연대	주요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차세대 R&D, 나노융합, 국방 IT,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UAM 등) 창조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비즈니스 생태계 거점 조성(지식허브,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별 전문인력 등) 벤처·강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조성, 인재 적극 양성 주변 농축산 바이오산업(금산, 부여 등), 국방산업(계룡, 논산 등)과 연대 활성화 추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골목상권간 상생협력 제고	현대적 상점가 및 전통시장 권역별 조성 도심형 특화상권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성장 도모(유망업종 창업,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경영역량 강화, 업종전환 활성화) 기초 구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특화상권 조성
주거· 토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요 산업단지 종사자의 지역내 체류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교통	대중교통체계, 거점, 서비스 효율화 및 도심 보행네트워크 강화	대중교통의 이용성 제고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보급(도시철도 2호선 및 인근 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BRT 확대, 호남선 직선화 등) 환승노선 효율화 및 대중교통 환경 조성(시내버스 공급확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순환버스·DRT 공급, 광역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도심 광역환승센터 건설·정비 등) 도심 보행네트워크 강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전면 재정비 및 자전거 전용도로·시설 확충
정주환경	환경 위해·유해 시설 관리 등 생활환경 전반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산업단지·하수관거 악취 관리 등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 지속 확대 주요 하천(대전천, 유등천, 대동천 등) 수질관리 생활권내 생태 네트워크 단절지점 연결성 확보 환경 순환체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공간 조성으로 안전생활환경 구축 수변경관축 형성 및 접근성 강화(금강, 대전천, 유등천 등)
역사· 문화· 관광	미래지향적 문화도시로서 문화 정체성 확립	수요자 중심의 지역내·주변도시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화 전략 추진(대전 과학문화도시, 계룡 국방도시, 논산 근대역사문화·국방도시, 금산 인삼약초도시, 영동 힐링문화체험도시, 옥천 전원도시 등) 스포츠·여가 활성화 도모,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운영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창작자 지원 축제 특성화 및 활성화, 주변지역간 축제 상호 교류 및 연대

(2) 세종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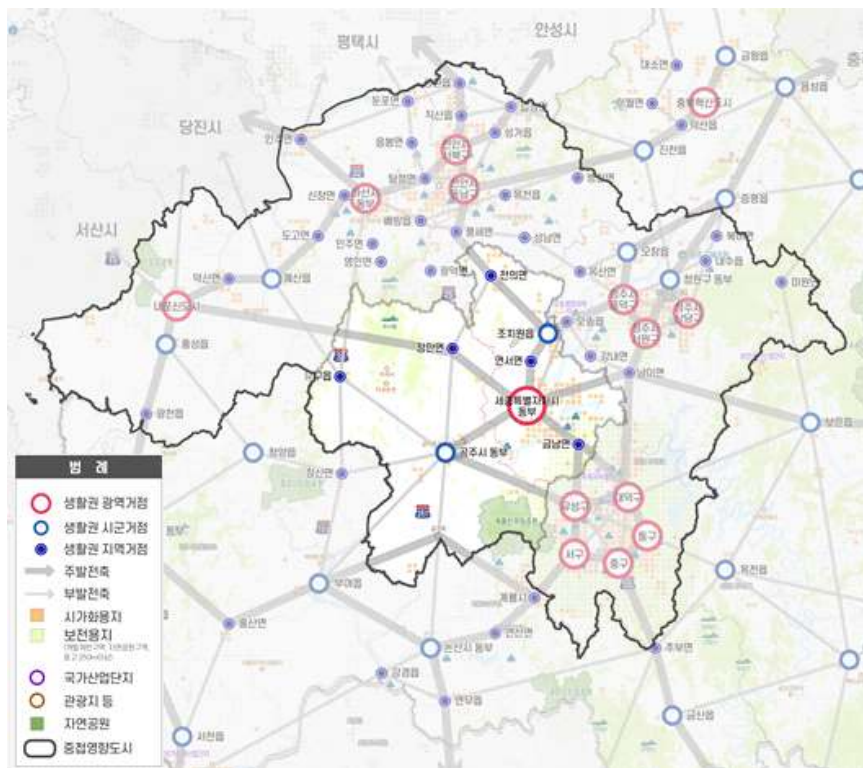
발전방향 : 국가행정 중추도시로서 신성장 거점 조성 및 균형발전 도모
 생활권 내·외부 연계 강화를 통한 국가 행정중추도시 위상 제고 및 신성장 거점 조성
 세종 동부지역의 압축적 도시개발 및 연접지역의 전원도시 조성으로 기능 분담

주요 축 : 세종 동부 중심의 “十”자형 발전축 설정

전국적 차원의 동서방향, 남북방향 주발전축을 설정하여 결절기능 강화

청주와 연계하여 강호축을 형성하고, 공주와 연계하여 동서축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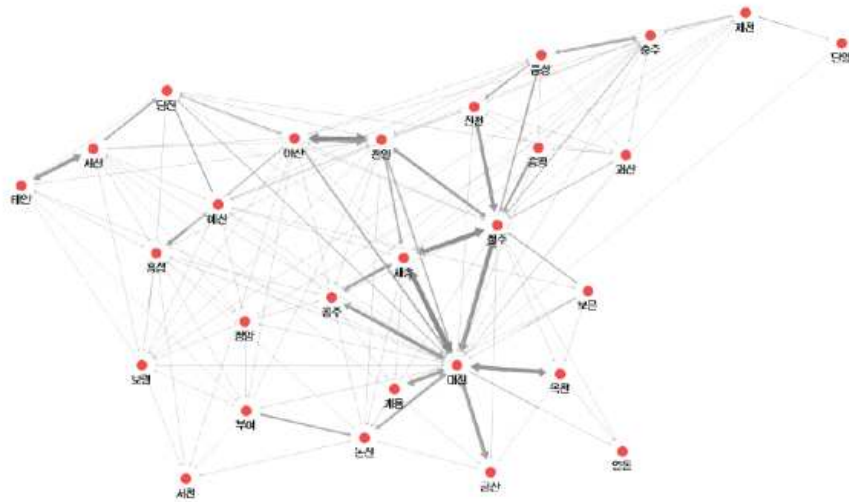
- 세종 동부 중심의 기초도시간 연계성·연결성 제고
- 세종-공주의 연결을 통해 내포·부여·논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주 남이면과의 연결로 청주를 통한 충북 북부·동부로의 연결성을 확보하여 동서방향 균형발전 도모
- 세종 동부와 대전과의 연계 거점으로서 금남면의 역할을 제고하여 기존 경부축의 강화를 도모하며, 계룡, 금산과의 연결성 확보



□ 주요 계획과제

구분	계획과제	
공간적 기능	세종 동부지역과 조치원, 공주와의 균형발전 도모	지리적 중심성을 활용하여 상생·균형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동서·남북방향 연계거점 역할 강화 대전, 충북, 충남을 연결하는 신성장 거점 조성 조치원 기능 활성화 및 주변지역 연계성 강화 공주와의 기능분담 및 연담화 관리
산업· 일자리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주변도시간 연대	신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주변지역 연계 산업클러스터 육성 기존 산업단지 및 주요 산업거점과의 연계 기반 도시형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지대 형성 세종-대전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계한 R&BD 혁신 거점 조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원 체계(벤처 플랫폼, 창업 네트워크 등) 구축 농촌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ICT 융복합시설 확산 지원 등 공주 역사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주거· 토지	직주분리 해소	직주분리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도시 외곽지역, 도농지역 중심 전원도시 조성
	적극적 토지 성장관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성장한계선 설정 녹지·수변공간·자연경관 보전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 및 경관보전형 토지이용 추진
교통	국가행정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네트워크 강화	세종-주변지역간 연결 인프라로서 광역철도 건설, BRT 노선 연장 및 다양화 등 광역교통망 구축 청주국제공항, 오송KTX, 공주KTX역 등 교통결절지점 연계 방안 마련
정주환경	도시·농촌 상생발전 추진 및 환경복지 실현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낙후지역의 발전 동력 발굴 국가행정 중추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 확충(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캠퍼스타운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시설, 환경시설 등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TF 운영 활성화,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대응 현장교육 추진
역사· 문화· 관광	역사와 자연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 정체성 확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속적인 유지관리 강화 및 홍보 다각화 유교문화, 금강문화의 가치를 발굴하여 테마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추진

〈부록 11〉 충청권 공간구조 전망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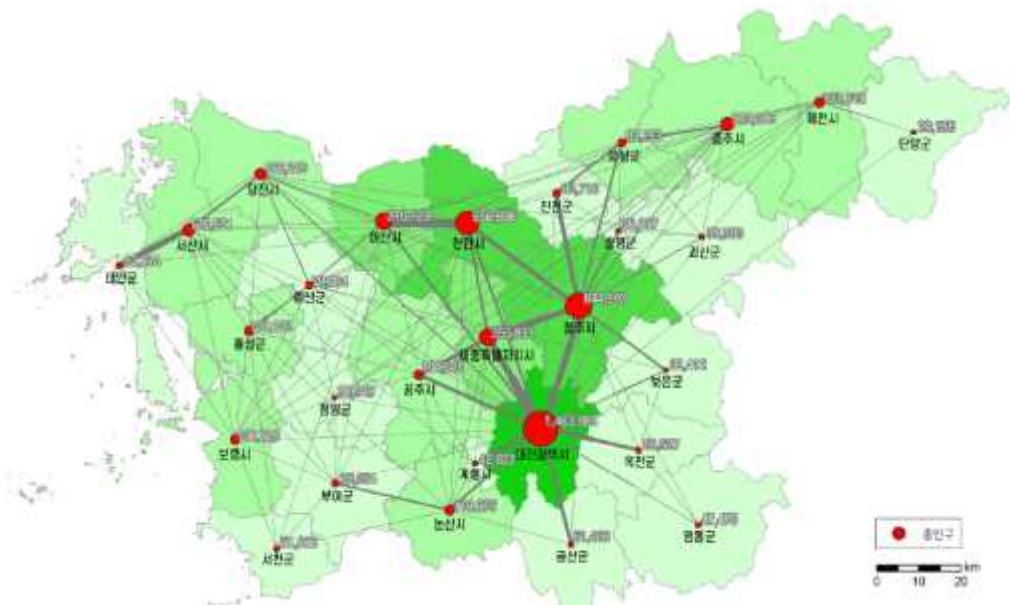


2020년 충청권 시군간 총 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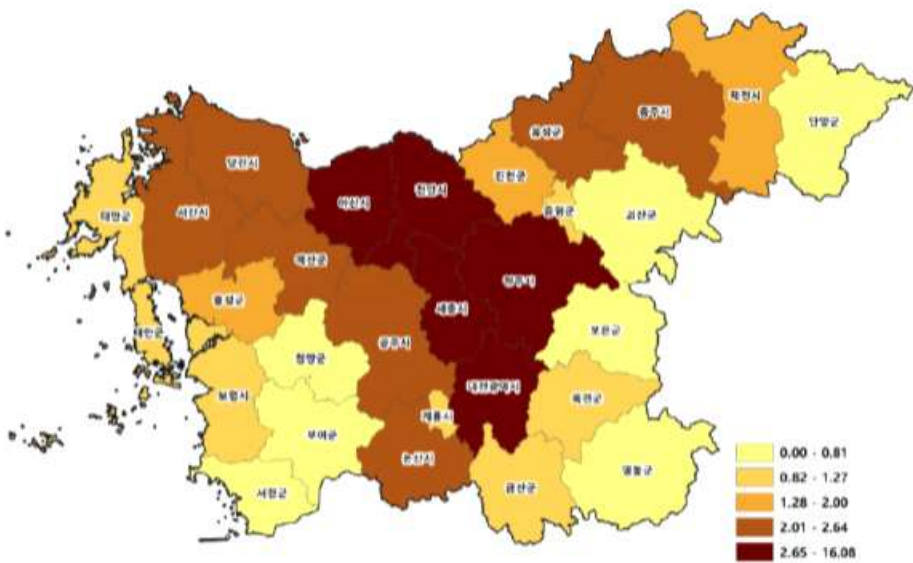


2020년 충청권 시군간 출근 통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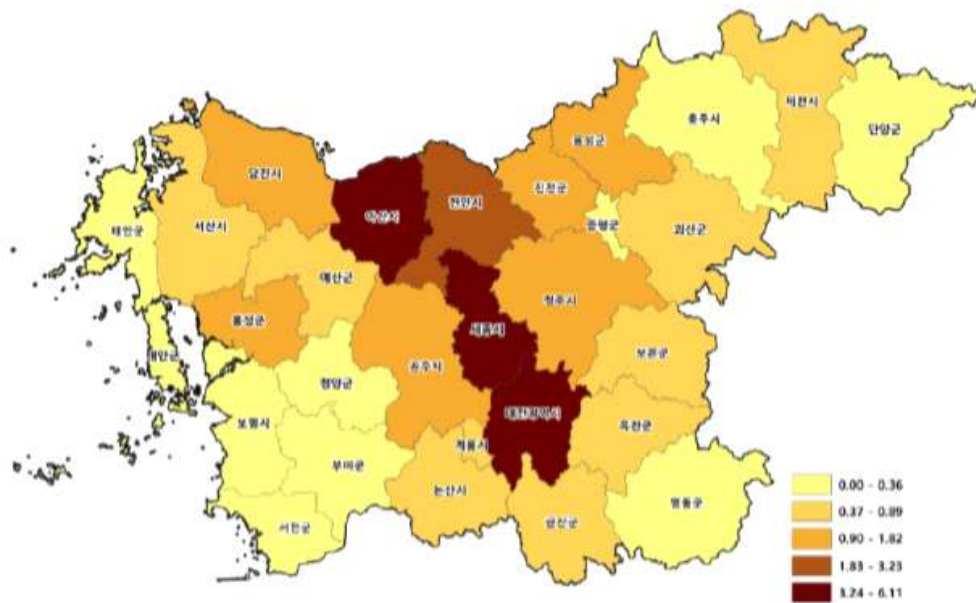
40) 오용준외(2021),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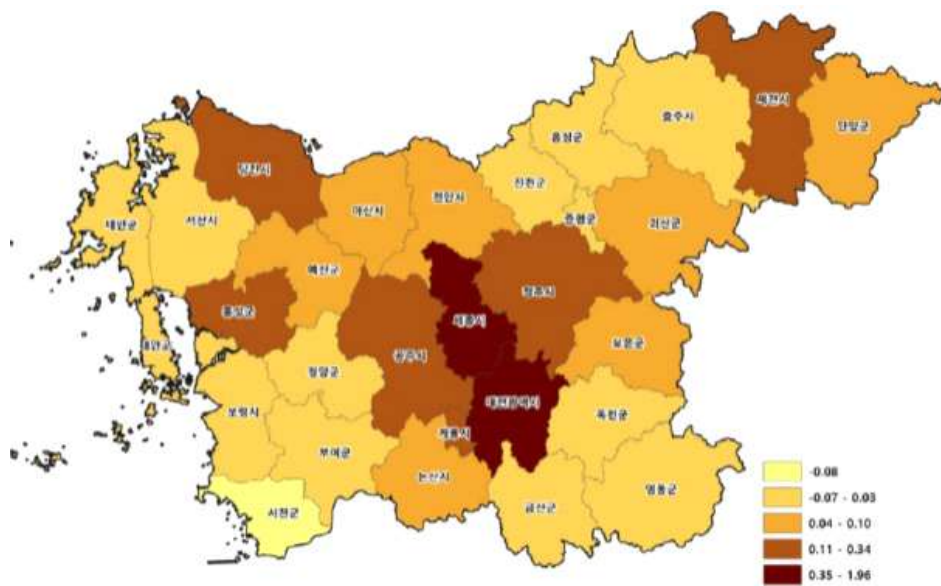
충청권 도시별 중심성(인구) 및 연관성(총 통행량)



총 통행량 기준 지역별 내향 연결중심성(2040년)



출근 통행량 기준 지역별 내향 연결중심성(2040년)



출근 통행량 기준 지역별 내향 연결 중심성 변화(2020-2040년)

충청남도 남부권(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인 남부권에 대하여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충남도의 주요 정책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귀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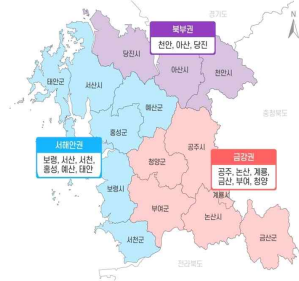
연구책임 :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전화 041-840-1143)

연락처 : 충남연구원 유예나 연구원(전화 041-840-1229)

■ 충청남도 남부권은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에서 균형발전권역(3개) 중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의 6개 시군을 말함

■ 남부권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①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초고령사회
- ② 대전시, 세종시에 인접한 대도시 세력권
- ③ 전형적인 농산촌지역
- ④ 백제문화권 등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지역
- ⑤ 상대적인 저발전(낙후)지역임
- ⑥ 대도시로의 부가가치 유출 및 직주분리 심각 지역
- ⑦ 도소매업종의 지역내 생산 감소지역



■ 일반사항

1. 귀하의 근무분야는? ()	① 학 계	② 연구기관
	③ 공무원	
2. 귀하의 해당분야 종사년수는? ()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 미래 트렌드 영향

1. 현재의 대전시는 도시화 단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단계(도시화 초기) : 중심도시, 주변지역 인구 증가, 도시화
- ② 2단계(절대적 집중기) : 중심도시 인구 급증, 주변지역 인구 감소
- ③ 3단계(상대적 집중기) : 중심도시 인구 급증, 주변지역 인구 증가
- ④ 4단계(상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성장 둔화, 주변지역 인구 급증
- ⑤ 5단계(절대적 분산기) : 중심도시 인구 감소, 주변지역 인구 증가

2.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따라서 향후 공간구조는 어떻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충남 남부권	도시발달 정도		
		단기	중기	장기
메가도시권 (대전, 세종, 청주의 승자 독식으로 집적 이익 극대화)	경쟁적 배분체제로 인한 남부권 쇠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족적 고립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성)	식량 및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분산적 집중 (대도시-중소도시간 유기적 연결)	대도시 주변지역이 아닌 곳은 쇠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중심 초연결 (분산과 연계)	첨단 기능 집적지 등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자원 및 자원 및 경제성장의 배분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구 수				
	매우 증가	증가	관계없음	감소	매우 감소
대도시권(충청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 (인구10-50만 이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 (인구 10만 이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사회경제 발전이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분	인구 수				
	매우 증가	증가	관계없음	감소	매우 감소
대도시권(충청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도시권에 속하지 않는 중간도시 (인구10-50만 이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소도시 및 과소지역 (인구 10만 이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미래 도시 발전에 따라서 충남 남부권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충남 남부권 영향(관련성)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권 중심의 일류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 - 글로벌 비즈니스지구 및 교류인프라 확충, 인재유치 및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권의 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제고 -첨단복합형 산업공간 확충,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정비, 민간주도의 대도시권 경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생산 중심의 내발적 발전 강화 - 식량생산 및 근교농업 육성, 신재생에너지생산기지 조성, 탄소흡수 공간 확충, 기업형 영농거점 조성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산업 및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re-localization) - 식량 및 에너지생산공간의 부활과 이를 중심으로 공간구조의 재편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안전서비스 중심의 생활권 재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다원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발전체계 강화, 비도시권의 중간도시, 중소도시 및 인구과소지역 상호협력 촉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 인프라 및 도시공간 조성 - 첨단녹색도로 및 철도, 스마트그리드, 사물인터넷 관련 인프라, 첨단환경 및 에너지자립도시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항목	충남 남부권 영향(관련성)				
	매우 크다	크다	보통	적다	매우 적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중의(dual) 국토공간구조 형성 - 물리적 접근성 중심의 Off-line(통근, 일상생활권) 생활권과 디지털 접근성 중심의 On-line 이용권(온라인 쇼핑, 교육 및 진료 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구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일자리, 인프라 편중으로 지역격차 심화 - 대도시권내, 대도시권과 여타지역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도시권 지역의 쇠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및 중심도시 이격지역의 인구감소로 관리 효율성 저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분산으로 인한 대도시 및 중간도시 쇠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분산과 미래인프라로 인한 기존 인프라의 효율 저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치유여가공간 조성(여가문화공간, 건강치유공간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도시화 - 인구와 일자리의 도시 재집중, 내부충진형(infill)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이용, 미이용 공동화 국토공간의 관리 효율화로 행정구역 통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주거지, 산업단지, 업무 및 상업지역, 노후 인프라 및 관광시설, 문화역사자원 등(고도화, 녹색화, 첨단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희박지역의 기능 유지 - 서비스 공급시설의 거점화 및 복합화, 국토자연공간의 생태적 및 경관적, 여가 및 휴양적, 농업 및 임업적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귀하는 충남 남부권의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중요성					시급성				
	높다 ←		→ 낮다			높다 ←		→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7. 귀하는 충남 남부권이 향후 삶의 여건이 지금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서울,수도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전,세종,충남 북 등 충청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충남 전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충남 남부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향후 충남 남부권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충남 남부권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④ 국제교류도시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9. 충남 남부권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발전·정비·재생 ② 산업·경제 ③ 교통·인프라
④ 농산촌개발 ⑤ 교육·문화·복지 ⑥ 관광·휴양
⑦ 인적자원 개발미비 ⑧ 기타(_____)

10. 충남 남부권의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개발가능한 용지 확보 ② 신규 주거단지 개발
③ 읍면지역 활성화 및 환경 개선 ④ 노후불량지역 재생 및 정비
⑤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 등)의 확충
⑥ 개성있는 도시환경 및 경관 조성 ⑦ 기타(_____)

11. 충남 남부권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② 전자정보산업 ③ 제조업
④ 문화관광여가산업 ⑤ 농축산바이오산업 ⑥ 첨단문화산업

12. 충남 남부권의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② 기업유치 ③ 산업시설 접근성 개선
④ 인적자원 육성 ⑤ 교육 문화환경 개선 ⑥ 정주환경 개선
⑦ 지역특화산업 개발 ⑧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민 협동조합
⑨ 기타(_____)

13. 충남 남부권의 농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농업인력 양성 ②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 ③ 농업기반시설 개선
④ 농업유통구조 개선 ⑤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 ⑥ 기타

14. 충남 남부권의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고속철도 운행 확대 ② 고속도로망 확충 ③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
④ 대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 ⑤ 주변시군 대중교통망 확충
⑥ 연결 시군 간선도로 정비·확충 ⑦ 기타(_____)

15. 충남 남부권의 관광자원 중 가장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등) ② 대규모 관광단지
 ③ 온천 ④ 역사유적 및 유물 ⑤ 전통문화 예술자원
 ⑥ 지역특산품(인삼, 술, 음식 등) ⑦ 기타

16. 충남 남부권의 관광·휴양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신규 관광지 개발 ②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③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홍보
 ④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 ⑤ 숙박시설 확충 ⑥ 관광 안내시설 확충
 ⑦ 관광지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 ⑧ 관광지와 소재지간 연결 강화
 ⑨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 ⑩ 주민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친절 교육
 ⑪ 기타 _____

17. 귀하께서는 남부권 시군의 역량 부족 분야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기입 가능)

구분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 (광역간)	천안·아산 등 충남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남부권 시군간
1. 농산업(형토산업) R&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농축산 바이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농산업 인재 육성(전문 농업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농축산품 브랜드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농축산 온라인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농업농촌 통합 판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농귀촌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대전시·세종 시와 연계협력 (광역간)	천안,아산 등 충남내 시군과 남부권 시군간	남부권 시군간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생산농가 출하회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민간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국제 행사 개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금강 관광도로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보건의료자원 공동 활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탄소중립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클러스터, 소재부품산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기업유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청년 유치 정책·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청년 지원(취업·창업·주거·금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기업 지원(금융·기술 인력·수출·창업·경영·판로·마케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사업체 기술 특허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사업체 자금·용자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음식·숙박업 상품 메뉴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13〉 주민 설문지

충청남도 남부권(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청양) 정책과제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저발전지역인 남부권에 대하여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귀중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연구책임 : 충남연구원 한상욱 연구위원(전화 041-840-1143)

연락처 : 충남연구원 유예나 연구원(전화 041-840-1229)

■ 일반사항

1. 귀하의 거주지역은? _____시·군 _____동·읍·면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는 현재 거주지역에서 사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_____년
4. 귀하의 연령대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5. 귀하의 가족수(본인 포함)는?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① 농림축산업 ② 제조업 ③ 도소매업 ④ 요식업
 ⑤ 숙박업 ⑥ 서비스업 ⑦ 전문직 ⑧ 사무관리직
 ⑨ 주부 ⑩ 학생 ⑪ 공무원 ⑫ 무직
 ⑬ 기타_____

■ 정주 의식 및 만족도

7.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현재 거주지역에 거주하시겠습니까?

- ① 계속 거주하고 싶다 ② 생활여건이 나아진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
③ 기회가 되면 떠나고 싶다 ④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다

8. 만약 떠나신다면 ()시군으로 ()년 후쯤 이주할 생각이다.

9. 귀하는 현재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

- ① 교통 여건 ② 일자리·경제여건 ③ 교육환경 ④ 주거환경
⑤ 보건·의료시설 ⑥ 복지시설 ⑦ 문화시설 ⑧ 자연환경
⑨ 예전부터 살고 있어서 ⑩ 기타 ()

11. 귀하는 불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개 이상 선택)

- ① 대도시로의 접근성 부족 ② 지역 산업기반 취약
③ 교육기반 취약 ④ 주택 등 주거환경 취약
⑤ 보건·의료시설 취약 ⑥ 복지시설 취약
⑦ 문화시설 부족 ⑧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 부족
⑨ 인구 노령화 ⑩ 기타()

12. 귀하는 현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발전하지 못했다	② 발전하지 못했다	③ 보통	④ 발전했다.	⑤ 매우 발전했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전,세종에 비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근 충남 시군에 비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최근 5년간 우리나라부터 거주지역의 발전정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성장했다	② 쇠퇴했다.	③ 응축(쇠퇴에 적응)했다.	④ 전환(새로운방식으로 재출발)했다.
서울,수도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전,세종,충남,충북,충청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근,충남시군(남부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거주하시는 시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분	중요성					시급성				
	높다 ←		→ 낮다			높다 ←		→ 낮다		
	5	4	3	2	1	5	4	3	2	1
① 인구 유출(이동) 및 인구 불균형										
② 산업배치, 일자리의 지역간 격차 해소										
③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부족										
④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체계 미비										
⑤ 보건·의료시설의 적극적 공급										
⑥ 문화시설의 적극적 공급										
⑦ 고등학교 이하 교육시설										
⑧ 대학교 이상 교육시설										
⑨ 갈등 심화 및 공동의식 미비										

15. 귀하의 직장 위치와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록해 주십시오(직업이 농업인 분은 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① 직장위치 : _____ 시(군) _____ 읍(면) _____ 동(리)

② 소요시간 : _____ 분 소요

16. 귀하나 귀하의 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될 경우, 타 지역을 포함하여 어느 곳을 주로 이용하시며, 향후 이용하실 것인지 해당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 목	구매 및 이용지역		
현재	일용품 구입	시(군)	읍(면)	동(리)
	가전제품 구입	시(군)	읍(면)	동(리)
	병원 및 의원 이용	시(군)	읍(면)	동(리)
	종합병원 이용	시(군)	읍(면)	동(리)
미래	일용품 구입	시(군)	읍(면)	동(리)
	가전제품 구입	시(군)	읍(면)	동(리)
	병원 및 의원 이용	시(군)	읍(면)	동(리)
	종합병원 이용	시(군)	읍(면)	동(리)

■ 미래상 및 발전방향

17.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지역이 20년 후, 2040년에는 삶의 여건이 지금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변화 없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서울,수도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대전,세종,충남 북 등 충청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근 충남 시군 (남부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거주하시는 시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향후 거주 지역은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인근 충남시군 (남부지역)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④ 국제교류도시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거주 시군	① 영농중심 전원지역	② 첨단산업 중심지역	③ 관광·여가산업 중심지역
	④ 국제교류도시	⑤ 교육·연구 중심지역	⑥ 물류·유통 중심지역

19. 귀하는 미래(2030년)에 어떤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대도시 ② 대도시 인근지역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 ⑤ 기타

20. 귀하는 미래(2030년) 어떤 주택에서 생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고층아파트(6층 이상) ③ 저층아파트(5층 이하)
④ 연립주택 ⑤ 전원주택 ⑥ 기타

21.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도시발전·정비·재생 ② 산업·경제 ③ 교통·인프라
④ 농산촌개발 ⑤ 교육·문화·복지 ⑥ 관광·휴양
⑦ 인적자원 개발·미비 ⑧ 기타(_____)

22. 도시발전·정비·재생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개발가능한 용지 확보 ② 신규 주거단지 개발
③ 읍면지역 활성화 및 환경 개선 ④ 노후불량지역 재생 및 정비
⑤ 생활기반시설(교육·문화·복지 등)의 확충
⑥ 개성있는 도시환경 및 경관 조성 ⑦ 기타(_____)

23.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육성해야 하는 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림수산업 및 축산업 ② 전자정보산업 ③ 제조업
④ 문화·관광·여가산업 ⑤ 농축산바이오산업 ⑥ 첨단문화산업

24. 산업,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② 기업유치 ③ 산업시설 접근성 개선
④ 인적자원 육성 ⑤ 교육 문화환경 개선 ⑥ 정주환경 개선
⑦ 지역특화산업 개발 ⑧ 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민 협동조합
⑨ 기타(_____)

25. 농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전문농업인력 양성 ② 농수축산품에 대한 브랜드화 ③ 농업기반시설 개선
④ 농업유통구조 개선 ⑤ 과학기술 영농의 보급 ⑥ 기타

26.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고속철도 운행 확대 ② 고속도로망 확충 ③ 대도시 접근 철도망 확충
④ 대도시 접근 도로망 확충 ⑤ 주변시군 대중교통망 확충
⑥ 연접 시군 간선도로 정비·확충 ⑦ 기타(_____)

27.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대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청소년복지 ② 다문화가정복지 ③ 여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저소득층 복지 ⑦ 기타

28. 노인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 ① 유·무료 양로원 건설 ② 취업기회 확대 ③ 노인회관 건설
④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 ⑥ 생활비 지원

29. 역점을 두어야 할 보건 의료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종합병원 확대 ② 의료비 인하 ③ 보건시설 확충 및 의료인력 보강
④ 정기검진 확대 ⑤ 24시간 진료체제 확대 ⑥ 기타

30. 교육·문화·복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수준 향상 ② 의료시설 전문화 및 활성화
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 ④ 극장·도서관 등 문화시설 접근성 향상
⑤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 ⑥ 기타(_____)

31. 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시설 정비 및 확충 ②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관련단체 지원 및 인력육성
④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⑤ 관람기회 확대(관람료 인하) ⑥ 기타

32. 관광자원 중 가장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바다, 강, 산, 평야, 섬 등) ② 대규모 관광단지
③ 온천 ④ 역사유적 및 유물 ⑤ 전통문화 예술자원
⑥ 지역특산품(인삼, 술, 음식 등) ⑦ 기타

33. 관광·휴양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 ① 신규 관광지 개발 ②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③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홍보
④ 특성화된 관광상품 개발 ⑤ 숙박시설 확충 ⑥ 관광 안내시설 확충
⑦ 관광지로의 교통 접근성 개선 ⑧ 관광지와 소재지간 연결 강화
⑨ 지역 대표 음식 발굴 및 홍보 ⑩ 주민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친절 교육
⑪ 기타 _____

34. 귀하께서는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현재 살고 있는 읍읍면의 소재지
② 현재 살고 있는 읍읍면소재지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웃 읍읍면의 소재지
③ 현재 살고 있는 사군의 사군청소재지
④ 현재 살고 있는 사군청소재지보다 규모가 크고 발전한 이웃 중대도시
⑥ 기타(무엇?)

35. 귀하께서는 개별 읍면동별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몇 개 읍면을 묶어서 한 곳에 하나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⑥ 모름/무응답

36. 이웃 도시에 있는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다소 시간이 걸려 이동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중복해서 설치하지 않고 이웃 도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⑥ 모름/무응답

37. 귀하께서는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 ② 찬성 ③ 보통 ④ 반대 ⑤ 매우 반대
⑥ 모름/무응답

38. 귀하께서는 시군에서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상호 협력하여야 하는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기입 가능)

구분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 (광역간)	천안·아산 등 충남내 시군간	인접 시군간 (남부권간)
1. 농산업(향토산업) R&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농축산 바이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농산업 인재 육성(전문 농업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농축산물 브랜드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농축산 온라인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농업농촌 통합 판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도시농업 공동체 확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귀농귀촌 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공동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생산농가 출하회 교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대전시·세종시와 연계협력 (광역간)	천안,아산 등 충남내 시군간	인접 시군간 (남부권간)
11.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민간 참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국제 행사 개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국제 기구 가입 및 홍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금강 관광도로개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보건의료자원 공동 활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통합 돌봄 활동가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미래 전략산업 육성(탄소중립 클러스터,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클러스터, 소재부품산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기업유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혁신 선도인재(4차 산업혁명 관련) 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청년 유치 정책·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청년 지원(취업·창업·주거·금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기업 지원(금융·기술·인력·수출·창업·경영·판로·마케팅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사업체 기술 특허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사업체 자금·용자지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음식·숙박업 상품 메뉴 개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사회적 경제 활동가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중간지원조직 역량 강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한상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김경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형빈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장하라	충남연구원 연구원
	유예나	충남연구원 연구원
	오남경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병윤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2-19 ·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글쓴이 · 한상욱 · 김경태 · 임형빈 · 김형철 · 장하라 · 유예나 · 오남경 · 전병윤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29-3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29-3